

# 트럼프 2.0 정책 브리핑

(2025.01.20. ~ 2025.02.14.)

## Full Document



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



# AMERICA IS BACK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47



# NYET

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

## Disclaimer (면책 조항)

본 자료는 미국 백악관(White House)에서 공개한 공식 팩트 시트(Fact Sheets)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내용을 요약·분석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정치적 입장, 정당, 후보자 또는 정부 기관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나, 백악관의 공식 발표 이후 정책의 변경, 추가적인 행정 조치, 또는 법적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법적, 재정적, 정책적 의사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기 전에 원문 자료 및 공식 정부 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해석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있으며, 본 자료의 제작자는 발생 가능한 오류, 누락, 해석 차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출처:**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의 공개 자료 활용

**최종 업데이트:** [2025-02-16]

### 📌 법적 보호 및 정책 해석

-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정책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견해 및 해석은 작성자의 독립적인 분석이며, 공식적인 정부 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행정 명령 및 정책 변경 사항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 기업 및 기관 활용 지침

- 본 자료는 독립적인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정부 기관, 기업 또는 공공 정책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업 및 기관의 내부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되며, 공식적인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은 반드시 개별 법률 및 정책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자료의 무단 재배포 또는 상업적 사용은 금지되며, 사용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트럼프 2.0 정책 브리핑

(2025.01.20. ~ 2025.02.14.)

## <요 약>

지금까지 제공된 Fact Sheet 들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America First” 원칙을 중심으로 무역, 정부 효율성, 외교 및 국가 안보, 보건·교육, 에너지, 종교, 총기 권리, 환경, 그리고 국제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진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각 카테고리별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

1. **무역 및 경제 정책:** 미국의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국내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및 경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2. **정부 효율성 및 인력 개혁:** 불필요한 관료체계를 해체하고,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정부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3. **외교 및 국가 안보 정책:** 국경과 국제 외교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일된 목소리와 강력한 압박 정책을 통해, 국가 안보와 외교적 리더십을 강화한다.
4. **보건, 교육 및 사회 정책:** 개인의 자유, 부모의 교육 선택권, 그리고 건강 증진을 통해 미국인의 복지와 미래를 보호한다.
5. **에너지 정책:** 국내 에너지 생산과 혁신 촉진을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과 국가 에너지 자립을 강화한다.
6. **종교 및 문화 정책:**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신앙 기반 단체와 전통적 가치를 강화하여, 정부의 중립성을 재확인한다.
7. **총기 권리 정책:** 헌법에 보장된 제 2 수정헌법 권리를 보호하여,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소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다.
8. **환경 및 규제 정책:**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환경 보호 방식을 도입하여, 정부 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건강한 환경 유지에 기여한다.
9. **국제 원조 및 감독:** 해외 지원 자금의 비효율과 낭비를 철저히 종식시키고, 세금 납세자의 돈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각 카테고리별로 제시된 정책들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쟁력,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America First” 전략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국내외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 I. 무역 및 경제 정책

### 포함 Fact Sheet:

-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 Restores Section 232 Tariffs
-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 Orders Plan for a United States Sovereign Wealth Fund
- Restores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in FCPA Enforcement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 관계의 불균형과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경한 무역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상호호혜 무역:** "Fair and Reciprocal Plan"은 미국이 해외에서 받는 불리한 관세 및 비대칭 무역 조건을 개선하고,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관세 정책 강화:** Restores Section 232 Tariffs 와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해, 해외 경쟁자들이 불공정하게 미국 시장에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 및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 **국가 자산 활용:** 주권 부유 기금 설립 계획은 미국이 보유한 방대한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며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 **FCPA 집행 개편:** 과도한 FCPA 집행이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 하에, 법무장관 주도의 집행 기준을 재정비해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들 조치는 미국의 "America First" 원칙을 반영하여, 불공정 무역 환경을 바로잡고, 국내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II. 정부 효율성 및 인력 개혁

### 포함 Fact Sheet:

- Eliminates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 Works to Remake America's Federal Workforce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부 기관과 인력을 과감히 감축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조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추진한다.

- **관료주의 해체:** Federal Executive Institute 와 같이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교육-리더십 프로그램을 종료하여, 납세자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인력 최적화:** 연방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제한, 그리고 최고 수준의 행정 기준 도입을 통해 정부 규모를 줄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개혁은 정부 지출 절감과 행정 효율성 증대, 그리고 납세자의 세금이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III. 외교 및 국가 안보 정책

#### 포함 Fact Sheet:

-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 Re-designates the Houthis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 Addresses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uth Africa
- Establishes One Voice for America's Foreign Relations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경과 국제 외교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정책을 구현하려고 한다.

- **국경 및 이민:** 남부(및 북부)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이민, 범죄, 약물 유입 문제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 및 외교적 조치를 통해 연방 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 **테러 및 국제 위협:** 후티(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재지정과 같이, 테러 지원 및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제재를 신속히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 **인권 및 외교 통일성:** 남아프리카의 인권 침해 문제와 외교관계 재정비, 그리고 외교 서비스의 통일된 운영(One Voice)을 통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여, 미국의 주권과 안보를 강력하게 수호한다.

이들 조치는 미국의 "America First" 외교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 안보 및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V. 보건, 교육 및 사회 정책

#### 포함 Fact Sheet:

- Expands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merican Families
- Make America Healthy Again Commission
- Prohibits Federal Funding for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 Delivers on His Commitment to Protect our Kids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과 건강, 그리고 아동 보호 분야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중단하고, 부모와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며, 미국인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 **교육 기회 확대:** 연방 자금을 활용한 학교 선택 프로그램 및 대안 교육 지원을 통해, 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건강 위기 대응:** Make America Healthy Again Commission 을 신설하여, 특히 어린이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전략을 마련하는 등, 미국 건강 위기를 해결하려는 장기적 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로운 의료 결정:** COVID-19 백신 의무화를 연방 자금 지원에서 배제하여, 부모와 학생이 정부의 강제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둔다.
- **아동 보호 강화:** 성전환 관련 치료 등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 변화를 초래하는 의료 조치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미국인의 기본적 자유와 복지, 교육 및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와 지역 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V. 에너지 정책

### 포함 Fact Sheet:

- Establishes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국가 에너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 **에너지 자원 확대:** 국가 에너지 패권 위원회를 신설하여, 허가, 생산, 발전, 유통, 규제, 수송 등 전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촉진한다.
- **경제 및 안보 연계:**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 의존도를 줄여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 **국제 협력 강화:** 위원회는 국내외 에너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며, 미국의 에너지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가격 안정, 경제 회복 및 국가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VI. 종교 및 문화 정책

### 포함 Fact Sheet:

- Establishes White House Faith Office
- Eradicates Anti-Christian Bias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 자유와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앙 기반 단체와 종교 커뮤니티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종교 자유 보호:** 백악관 신앙 사무국을 신설하여, 신앙 기반 단체, 지역 사회 조직, 예배당 등이 정부 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종교 자유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한다.
- **반기독교 편향 철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 내 반기독교 편향과 차별적 행위를 조사, 제거하며, 종교 자유와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 **정치적 및 사회적 메시지:** 이 조치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통적 종교 가치(특히 기독교)를 보호한다는 보수 진영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특정 신앙에 편향되지 않고, 미국인의 종교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호하며, 신앙 기반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VII. 총기 권리 정책

### 포함 Fact Sheet:

- Protects Americans' Second Amendment Rights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제 2 수정헌법 권리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에 의해 무기 소지 및 휴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 **헌법적 권리 수호:** Biden 행정부의 총기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법무장관에게 기존 총기 관련 명령 및 규제를 검토하도록 하여, 미국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회복시킨다.
- **소기업 및 법 준수자 보호:** ATF 등의 집행 기관이 총기 관련 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가한 사례를 바로잡고, 총기 산업 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 **정치적 메시지:** 이 조치는 "America First" 원칙에 따라, 미국인의 자유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강경한 정책 이행을 강조한다.

이 조치는 미국의 총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소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 VIII. 환경 및 규제 정책

### 포함 Fact Sheet:

- Ends the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따른 종이 빨대 사용이 기능적 한계와 건강·환경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종이 빨대의 구매 및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한다.

- **환경 및 소비자 보호:** 종이 빨대는 PFAS 등 유해 화학물질 노출 위험과 더불어, 실제로 환경 비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 **실용적 접근:** 정부 자금이 불필요한 종이 빨대 구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합리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 **경제적 효율성:** 종이 빨대 대신 대체재 활용 등으로, 세금 납세자의 자금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도모한다.

이 조치는 상징적 환경 정책과 실제 기능성,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정부의 규제 및 자금 운용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IX. 국제 원조 및 감독

### 포함 Fact Sheet:

- At USAID, Waste and Abuse Runs Deep

**개요:** USAID 가 수십 년 동안 세금 납세자의 자금을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지출해 왔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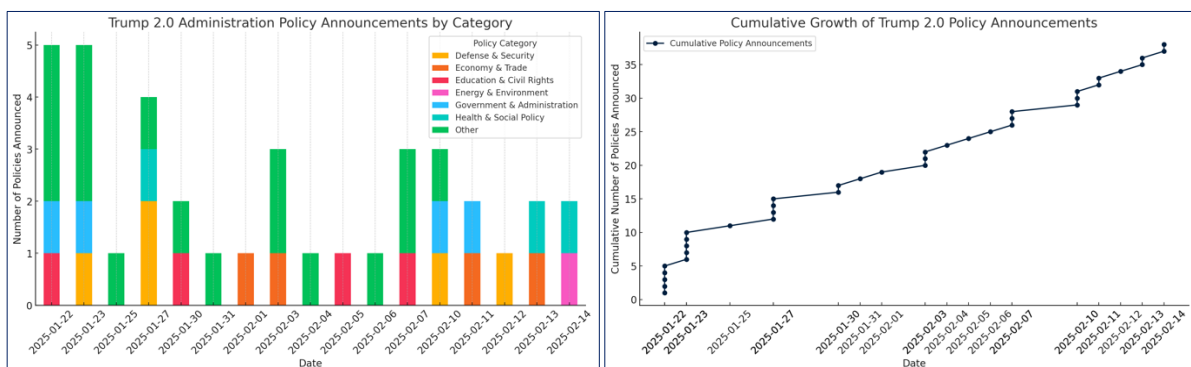
- **비효율과 낭비:** USAID 의 해외 지원 사업에서 DEI 관련 사업, 비효율적 프로젝트, 그리고 내부 감시 부족으로 인해 납세자의 돈이 낭용되었음을 강조한다.
- **정책 개선 의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낭비와 부정을 철저히 종식시키고, 세금 납세자의 자금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 **국제 원조의 효율성:** 미국의 해외 원조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국제적 신뢰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치는 국제 원조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미국 세금이 올바른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제공된 Fact Sheet 원문 전체를 대상으로, 대통령 지칭 표현(예: “트럼프”)을 제외하고 정책 내용 중심으로 수행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다. 본 분석에서는 LDA(잠재 디리클레 할당)와 같은 표준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전체 문서에서 주요 주제(토픽)를 추출하였다. 아래는 분석 결과 도출된 8개의 핵심 토픽과 각 토픽 별 주요 키워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 분석 내용이다.

## 1. 토픽 모델링 분석 개요

- **분석 방법:**
  - 제공된 Fact Sheet 원문에서 대통령 이름 및 관련 지칭어를 불용어(Stopwords) 목록에 포함시켜 제거한 후,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LDA 모델을 적용하였다.
  - 이를 통해 문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단어 집합(토픽)을 추출하였으며, 각 토픽은 특정 정책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반영한다.
- **도출된 토픽 수:** 8 개
- **주요 분석 기준:** 각 토픽의 키워드 분포, 문맥적 의미, 그리고 정책 내용 측면에서의 연관성



## 2. 도출된 주요 토픽 및 심층 분석

### 토픽 1: 무역 및 경제 경쟁력

- **주요 키워드:** 무역, 관세, FCPA, 주권, 부유 기금, 경제, 경쟁력, 수출, 수입, 투자, 국가 안보
- **심층 분석:**
  - 이 토픽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해외 부당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려는 정책들을 반영한다.
  - 관세 정책 강화, FCPA 집행 개편, 주권 부유 기금 설립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국가 안보 강화가 목표이다.

## 토픽 2: 정부 효율성 및 인력 개혁

- **주요 키워드:** 정부, 관료제, 효율, 인력, 감축, 행정, 채용, 예산, 개혁, 조직
- **심층 분석:**
  - 이 토픽은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인력과 관료 체계를 감축하여, 납세자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
  - 연방 행정 연구소 폐지, 인력 최적화 및 조직 재편, 신규 채용 제한 등으로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 토픽 3: 외교 및 국가 안보

- **주요 키워드:** 국경, 이민, 외교, 안보, 테러, 후티, 비상사태, 군사, 국제, 정책
- **심층 분석:**
  - 이 토픽은 미국의 국경 보안, 불법 이민 및 테러 위협, 그리고 외교 정책 실행에 대한 강경 조치들을 반영한다.
  - 남부 국경 비상사태, 후티 재지정, 통일 외교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 토픽 4: 보건, 교육 및 사회 정책

- **주요 키워드:** 보건, 교육, 건강, 학교, 아동, 백신, 만성, 질환, 의료, 선택권
- **심층 분석:**
  - 이 토픽은 미국 내 교육, 건강, 아동 보호 및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포함한다.
  - 학교 선택 확대, 건강 회복 위원회, COVID-19 백신 의무화 중단, 아동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가 개선되는 방향을 모색한다.

## 토픽 5: 에너지 및 환경 정책

- **주요 키워드:** 에너지, 생산, 규제, 청정, LNG, 석유, 가스, 인프라, 환경, 투자
- **심층 분석:**
  - 이 토픽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 및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
  - 국가 에너지 패권 위원회 신설, 에너지 긴급 상황 선언, 파리 협약 탈퇴 등은 미국의 에너지 경쟁력 회복과 안정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 토픽 6: 종교 및 문화 정책

- **주요 키워드:** 종교, 신앙, 자유, Faith, 전통, 문화, 편향, 보호, 기독교
- **심층 분석:**
  - 이 토픽은 정부가 특정 신앙(특히 기독교)을 보호하고, 종교 자유 및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함한다.
  - 백악관 신앙 사무국 신설, 반기독교 편향 철폐 태스크포스 구성 등은 정부의 종교적 중립성을 재확인하면서, 신앙 기반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토픽 7: 총기 권리 정책

- **주요 키워드:** 총기, 헌법, 제 2 수정, 소지, 규제, 보호, 기업, 집행, ATF
- **심층 분석:**
  - 이 토픽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제 2 수정헌법 권리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 및 소기업들이 부당한 총기 규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다룬다.
  - Biden 행정부의 총기 규제 정책 철회, 법무장관 주도의 총기 관련 규제 검토 및 수정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된다.

## 토픽 8: 환경 및 규제, 국제 원조 정책

- **주요 키워드:** 종이 빨대, 환경, PFAS, 규제, 자금, 낭비, 국제, 원조, USAID, 투명성
- **심층 분석:**
  - 이 토픽은 정부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와 환경 보호를 위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 종이 빨대 사용 중단, PFAS 문제, 그리고 USAID 의 해외 원조 비효율 및 낭비 문제 등은 환경과 국제 원조 분야에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납세자의 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3. 결론

본 토픽 모델링 분석은 제공된 Fact Sheet 원문들을 정책 내용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무역, 정부 효율성, 외교·안보, 보건·교육, 에너지, 종교·문화, 총기 권리, 그리고 환경 및 국제 원조 등 8 개의 핵심 토픽이 도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토픽은 각각 미국의 “America First” 원칙과 전통적 가치, 그리고 효율적 정부 운영과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2.0 행정부의 주요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 종합 분석

트럼프 2.0 행정부의 정책 마인드맵은 “America First” 원칙을 중심으로 미국의 안보, 경제, 정부 효율성, 사회 복지, 에너지, 전통적 가치, 무역 및 총기 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반영한다.

- **미국 안전 강화** 부문에서는 강력한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및 테러 대응을 통해 국내 안전을 보장하며,
- **경제 및 에너지 우위 회복** 부문에서는 에너지 자립과 무역 불균형 해소, 국가 자산 활용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정부 효율성 및 인력 개혁** 부문은 불필요한 관료제와 인력 낭비를 해체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 **전통적 가치 및 사회 정책** 부문은 교육, 건강, 종교, 젠더 등 사회 전반에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회복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무역, 국제 원조 및 총기 권리** 부문은 국제 무역 환경에서 미국 기업 보호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수호에 중점을 두어, 전체 정책의 균형과 통합성을 유지한다.

트럼프 2.0 행정부 첫 4 주까지 발표한 다양한 Fact Sheet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의 사항으로 그 방향성을 요약할 수 있겠다.

- **전략적 일관성:** 모든 정책 영역은 “America First” 원칙 아래 미국의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 정부 효율성, 그리고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실행 메커니즘:** 각 부처와 기관은 내부 협력을 통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감독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성공을 도모할 예정이다.
- **도전 과제:** 국제 협상, 법적 분쟁, 내부 관료제 저항,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정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 &lt;트럼프 2.0(D+4W) 정책 마인드맵&gt;



## NYET, 한국 기업·정부·학계를 위한 미국·글로벌 전략·정책 인텔리전스 서비스 공식 론칭

미국 혁신생태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십시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전된 산업·기술·정책·교육 허브로, 그 영향력과 기회는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혁신생태계를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 ▶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
- ▶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정책 주도권 확보,
- ▶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NYET**(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는 뉴욕 맨해튼 배터리파크에 본부를 둔 글로벌 씽크탱크이자 혁신 전략 허브로, 한국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정책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기관이 직면한 미국 내 위기 및 위험 관리(Crisis & Risk Management)를 포함한 전략적 옹호(Strategic Advocacy)는 NYET 만이 제공할 수 있는 배타적 솔루션입니다.

**NYET** 는 기업, 정부, 학계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한국 기업 및 기관이 미국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책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 **NYET** 의 차별화된 전략·정책 인텔리전스 서비스

#### 🔥 Corporate Intelligence (기업 전략 및 시장 개척)

→ 미국 시장 진입 및 성장 전략, 규제·컴플라이언스 대응, 투자 유치 및 재무 전략, 브랜드 현지화, 리스크 관리, 정부 조달 및 보조금 활용

#### 🔥 Policy & Government Intelligence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영향력 강화)

→ 미국 산업 정책·규제 분석, 정부·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무역·투자 전략, 경제 개발 및 혁신생태계 정책 협력

#### 🔥 Education Intelligence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글로벌 협력 확대)

→ 국제 공동 연구, 산업·학계 협력, 인증 및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 🔥 Innovation Intelligence (혁신생태계 및 기술 상용화 가속화)

→ 기술 상용화, 벤처캐피털 연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특허 및 지식재산(IP) 전략, 기업, 대학 및 지역·국가 단위 혁신생태계 구축

**NYET** 는 한국 기업·기관이 미국 시장에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이를 입체적으로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NYET 웹사이트 [www.mynyet.org](http://www.mynyet.org)]

📧 문의: 이 영 달 Dr. Young D. Lee, Principal & Professor, NYET

- 서울 오피스 02-568-2033
- 뉴욕 오피스 322-272-3190
- 이메일 Dr.Lee@ket-nyet.org



**NYET**  
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

*Empower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verywhere™*

## 미국 백악관 팩트 시트(Fact Sheets\*)

\*미국 행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정책 요약 및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섹션입니다.

No.	Fact Sheet Title	Date	팩트 시트 제목
1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DEI Madness and Restores Excellence and Safety within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22.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연방항공청(FAA) 내 DEI 정책 폐지 및 안전성 복원
2	President Donald J. Trump Protects Civil Rights and Merit-Based Opportunity by Ending Illegal DEI	22.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불법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종식 및 실력 기반 기회 보호
3	President Donald J. Trump Delivers Emergency Price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to Defeat the Cost-of-Living Crisis	22.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생활비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가격 안정 조치
4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22.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남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 선포
5	President Donald J. Trump Protects the States and the American People by Closing the Border to Illegals via Proclamation	22.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폐쇄 조치 시행
6	President Donald J. Trump Re-designates the Houthis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22.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
7	President Donald J. Trump Directs Administration to Advance Lumbee Tribe Recognition	23.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럼비 부족 (Lumbee Tribe) 연방 인정 추진
8	President Donald J. Trump Orders Declassification of JFK, RFK, and MLK Assassination Files	23.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JFK, RFK, MLK 암살 관련 문서 기밀 해제 명령
9	President Donald J. Trump Launches PCAST to Restore American Leadership in Science and Technology	23.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 과학 및 기술 리더십 복원을 위한 PCAST 출범
10	Executive Order to Establish United States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23.Jan.25	행정명령: 미국 디지털 금융 기술 주도권 확립
11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Action to Enhance America's AI Leadership	23.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 조치 시행
12	President Donald J. Trump Enforces Overwhelmingly Popular Demand to Stop Taxpayer Funding of Abortion	25.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 자금의 낙태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 반영
13	President Donald J. Trump Reinstates Service Members Discharged for Refusing the COVID Vaccine	27.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COVID 백신 거부로 인해 강제 전역된 군인 복직
14	President Donald J. Trump Directs the Building of the Iro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for America	27.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지시
15	President Donald J. Trump Ensures Military Excellence and Readiness	27.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군사 준비태세 및 탄원성 보장
16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Merit and Lethality to America's Armed Forces	27.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군대의 실력과 전투력 복원
17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Forceful and Unprecedented Steps to Combat Anti-Semitism	30.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No.	Fact Sheet Title	Date	팩트 시트 제목
18	President Donald J. Trump Expands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merican Families	30.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 가정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19	President Donald J. Trump Launches Massive 10-to-1 Deregulation Initiative	31.Jan.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10:1 규제 완화 정책 추진
20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1.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21	President Donald J. Trump Orders Plan for a United States Sovereign Wealth Fund	3.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부펀드 설립 계획 명령
22	At USAID, Waste and Abuse Runs Deep	3.Feb.25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심각한 낭비 및 부정부패 문제
23	President Trump is Delivering on His Commitment to Protect our Kids	3.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아동 보호 약속 이행
24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Maximum Pressure on Iran	4.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 복원
25	President Donald J. Trump Protects Safety, Fairness, and Dignity in Women's Sports	5.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여성 스포츠에서 공정성과 안전 및 존엄성 보호
26	President Donald J. Trump Eradicates Anti-Christian Bias	6.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반기독교적 편견 근절
27	President Donald J. Trump Addresses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uth Africa	7.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침해 문제 대응
28	President Donald J. Trump Establishes White House Faith Office	7.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신앙 사무국 설립
29	President Donald J. Trump Is Protecting Americans' Second Amendment Rights	7.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 2 조 권리 보호
30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the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10.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종이 빨대 강제 사용 및 조달 금지
31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in FCPA Enforcement	10.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통한 미국 경쟁력 및 안보 강화
32	President Donald J. Trump Eliminates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10.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연방 행정 연구소 폐지
33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Section 232 Tariffs	11.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섹션 232 관세 복원
34	President Donald J. Trump Works to Remake America's Federal Workforce	11.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 공무원 개혁 추진
35	President Donald J. Trump Establishes One Voice for America's Foreign Relations	12.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외교정책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이니셔티브 출범
36	President Donald J. Trump Establishes the Make America Healthy Again Commission	13.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원회 설립
37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13.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계획' 발표
38	President Donald J. Trump Prohibits Federal Funding for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14.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학교 내 COVID-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금지
39	President Donald J. Trump Establishes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14.Feb.25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국가 에너지 지배 위원회 설립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DEI Madness and Restores Excellence and Safety within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January 22, 2025

**FLIGHTS SHOULD BE SUPERVISED BY THE BEST EMPLOYEES:** President Donald J. Trump has signed a Presidential Memorandum terminating a Biden Administr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hiring policy that prioritized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over safety and efficiency.

- This Presidential Memorandum orders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and FAA Administrator to immediately stop Biden DEI hiring programs and return to non-discriminatory, merit-based hiring.
- It also requires the FAA Administrator to review the past performance and performance standards of all FAA employees in critical safety positions and make clear that any individual who fails to demonstrate adequate capability is replaced by someone who will ensure Americans' flight safety and efficiency.

**MILLIONS OF AMERICANS RELY ON SAFE, TIMELY AIR TRAVEL EVERY DAY:** Safety and competence should be the only job criteria for FAA employees, yet the Biden Administration violated the public trust—as well as the law—by prioritizing illegal DEI hiring.

- Every day, more than 45,000 flights and 2.9 million airline passengers traveling for work or fun or to visit friends and family entrust their lives to the FAA.
- Almost unbelievably, as a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initiative, the Biden FAA specifically recruited and hired individual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psychiatric issues, and complete paralysis over other individuals who sought to work for the FAA.
- President Trump is immediately terminating this illegal and dangerous program and requiring that all FAA hiring be based solely on ensuring the safety of airline passengers and overall job excellence.
  - On January 11, 2023, two weeks after a major holiday airline crisis, an FAA system outage caused by employees missteps grounded all flights for the first time since 9/11, an illustration of the importance of FAA competence.



FULFILLING PROMISE TO END ILLEGAL DISCRIMINATION AND BRING BACK COMMON SENSE: This Presidential Memorandum builds on President Trump's day-one Executive Order ending the Biden Administration's illegal and immoral DEI discrimination programs.

- In his inaugural address, President Trump promised: “We will forge a society that is colorblind and merit-based.”

President Trump stated in his January 20, 2025 Executive Order on 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 “Americans deserve a government committed to serving every person with equal dignity and respect, and to expending precious taxpayer resources only on making America great.”

## 연방항공청(FAA) 내 DEI 정책 폐지 및 안전성 복원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DEI 정책 철회**

Biden 행정부 시절 FAA 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채용 정책은 안전과 효율성보다 다양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Fact Sheet 는 이 정책이 FAA 내에서 심각한 안전 위협을 초래했다고 단언한다.

- **행정 명령 내용**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각서를 통해 운송부 장관과 FAA 관리에게 Biden DEI 채용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능력 위주의 채용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한다. 또한, FAA 내 핵심 안전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과거 성과와 기준을 재검토해, 능력 미달 시 교체하도록 지시한다.

- **안전과 효율성 강조**

매일 45,000 편 이상의 항공편과 2.9 백만 명의 승객이 FAA 에 의존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안전과 역량만이 FAA 직원 채용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DEI 정책 하에서 '심각한 지적 장애, 정신건강 문제, 완전한 마비' 등의 이유로 채용된 사례를 들어 비판한다.

- **이전 사례 언급**

2023 년 1 월 11 일, 주요 휴가 기간 직후 FAA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모든 항공편이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FAA 의 역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부각시킨다.



- **정책 방향의 일관성**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DEI 관련 정책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색맹 사회, 능력주의"를 구축하겠다는 약속과 일치한다.

## 2. 분석 및 평가

### (1) 정책 방향과 메시지

- **반 DEI, 능력주의 강화**

Fact Sheet 는 DEI 를 “Madness(광기)”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을 회복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다. 채용 기준을 전적으로 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상징성**

단순한 행정 명령을 넘어, Biden 행정부의 정책을 '불법적', '위험한', '비민주적'으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보수적 가치와 전통적 능력주의를 부각시킨다. 이는 단순 행정 개혁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2) 안전 우선주의 강조

- **실제 사례를 통한 정당화**

FAA 시스템 장애 사례를 인용하며, DEI 정책이 실제로 항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는 수백만 명의 항공 승객의 안전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전략이다.

- **민간 신뢰 회복**

안전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채용 기준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FAA 운영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 (3) 표현 방식과 수사 전략

- **강한 언어 사용**

“DEI Madness”, “illegal and dangerous” 등과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해 Biden 행정부의 정책을 단호히 부정하고, 트럼프 정부의 접근 방식을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 **단일 가치 강조**

오직 “안전”과 “역량”만이 FAA 직원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단일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복잡한 인사 정책의 다면성을 단순화하고 대중의 공감을 유도한다.

### (4) 장단기 영향

- **단기적 효과:**

즉각적인 채용 기준 전환과 FAA 내 인사 재검토를 통해 항공 안전 강화와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FAA의 운영 체계가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 **장기적 도전:**

능력주의 전환이 모든 경우에 최적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DEI 정책 철회로 인해 발생할 법적 분쟁이나 내부 조직 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될 위험이 있다. 또한, 다양성 부족이 장기적으로 혁신성과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

### 3. 결론

이 Fact Sheet는 트럼프 2.0 정부가 DEI 정책을 단호히 철회하고, FAA 채용을 전적으로 능력과 안전 기준에 기반해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정책 메시지는 Biden 행정부의 DEI 채용이 FAA의 안전과 효율성을 해쳤다는 전제로, 엄격한 능력주의와 안전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대중의 신뢰 회복과 미국 항공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FAA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법적, 조직적 도전과 함께 다양성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트럼프 2.0 정부는 강경한 보수주의와 전통적 가치 회복을 위해 행정 명령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미국 행정 전반에 걸친 정책 전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Protects Civil Rights and Merit-Based Opportunity by Ending Illegal DEI

January 22, 2025

**PROTECTING CIVIL RIGHTS AND EXPANDING INDIVIDUAL OPPORTUNITY:**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historic Executive Order that protects the civil rights of all Americans and expands individual opportunity by terminating radical DEI preferencing in federal contracting and directing federal agencies to relentlessly combat private sector discrimination. It enforces long-standing federal statutes and faithfully advances the Constitution's promise of colorblind equality before the law. This comprehensive order is the most important federal civil rights measure in decades:

- It terminates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discrimination in the federal workforce, and in federal contracting and spending.
  - Federal hiring, promotions, and performance reviews will reward individual initiative, skills, performance, and hard work and not, under any circumstances, DEI-related factors, goals, policies, mandates, or requirements.
- The order requires OMB to streamline the federal contracting process to enhance speed and efficiency, reduce costs, and require Fed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o comply with our civil rights laws.
  - It revokes Executive Order 11246 contracting criteria mandating affirmative action
  - It bars the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from pushing contractors to balance their workforce based on race, sex, gender identity, sexual preference, or religion.
  - It requires simple and unmistakable affirmation that contractors will not engage in illegal discrimination, including illegal DEI.
- It directs all departments and agencies to take strong action to end private sector DEI discrimination, including civil compliance investigations.
- It mandates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Education issue joint guidance regarding the measures and practice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RESTORING THE VALUES OF INDIVIDUAL DIGNITY, HARD WORK, AND EXCELLENCE:**

Individual dignity, hard work, and excellence are fundamental to American greatness. This Executive Order reaffirms these values by ending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anti-constitutional and deeply demeaning "equity" mandates, terminating DEI, and protecting civil rights:

- Reversing the progress made in the decades since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oward a colorblind and competence-based workplace, radical DEI has dangerously tainted many of our critical businesses and influenti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federal government.
- In the private sector, many corporations and universities use DEI as an excuse for biased and unlawful employment practices and illegal admissions preferences, ignoring the fact that DEI's foundational rhetoric and ideas foster intergroup hostility and authoritarianism.
  - Billions of dollars are spent annually on DEI, but rather than reducing bias and promoting inclusion, DEI creates and then amplifies prejudicial hostility and exacerbates interpersonal conflict.

**PRESIDENT TRUMP PROMISED AND DELIVERED:** President Trump promised to terminate DEI in the federal government, protect equal opportunity, and force schools to end discriminatory admissions policies, and he delivered. Every man and woman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go as far as their hard work, individual initiative, and competence can take them. In America, excellence, grit, and determination is our strength.

## 불법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종식 및 실력 기반 기회 보호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정책 취지
  - Biden 행정부 시절 연방 정부와 연방 계약 분야에서 실시했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채용 및 운영 정책을 종식시킴으로써, 오직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평가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이 행정 명령은 연방 계약 과정의 간소화, 비용 절감, 그리고 연방 계약자들이 시민권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 • 주요 조치 내용

- 연방 정부 내 채용, 승진, 성과 평가에서 DEI 관련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개인의 이니셔티브, 기술, 성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실시.
- OMB(관리예산국)에게 연방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지시하며, EO 11246(확정적 우대조치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
-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이 인종, 성, 젠더 정체성, 성적 취향, 종교 등을 기준으로 인력을 균형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
-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DEI 관련 불법 차별에 대해 각 부처와 기관이 강력히 대응하도록 지시.
- Attorney General 과 교육부 장관이 연방 대법원 판결(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에 따른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명시.

### • 정책 메시지

- 이 행정 명령은 "개인의 존엄, 노력, 탁월함"을 회복시키고, 수십 년간 진행된 DEI 정책이 오히려 불법적 차별과 편견, 그리고 부당한 행정 비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 "색맹" 사회, 즉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성과만을 평가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 심층 분석

### (1) 이념적 및 정치적 전략

#### • 능력주의와 전통적 가치 강조

- DEI 정책을 "radical", "illegal", "deeply demeaning" 등의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Biden 행정부의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한다.
- 행정 명령은 전통적 능력주의, 즉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회복함으로써, 미국 시민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 트럼프 정부가 취임 당시부터 내세운 "America First" 원칙과 일맥상통하며, 공공기관 내에서의 정치적 편향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 (2) 법적 및 행정적 측면

#### • 기존 행정 명령 및 법률의 재정비

- EO 11246 와 같은 기존 연방 계약 기준을 폐지하거나 재검토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계약 및 인사 정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 연방 계약자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시민권 법 준수를 요구하는 등,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나 차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을 내포한다.

- **행정 효율성 제고**

- 연방 정부의 채용 및 계약 과정에서 DEI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단기적으로는 행정 절차의 단순화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DEI 관련 정책 철회에 따른 법적 소송이나 내부 조직 갈등 등 부작용도 예견된다.

### (3) 사회·문화적 영향 및 논쟁

-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한 재해석**

- 이 행정 명령은 미국 헌법이 약속한 '색맹 평등'이라는 이상을 회복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 그러나 DEI 정책이 추진되었던 배경에는 과거 인종, 성, 젠더 등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 해소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정책 전환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나 소수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민간 부문에서의 차별 철폐와 DEI 정책 철회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 수십억 달러가 DEI 프로그램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비용이 실제로 불필요하거나 해악을 끼쳤다는 점에 대한 평가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 DEI 정책 철회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 및 창의성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정책 방향**

- 트럼프 정부는 DEI 정책을 단호히 종식하고, 연방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오직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 이 조치는 전통적 보수주의, 능력주의, 그리고 '색맹 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Biden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한다.

#### • 단기적 효과

- 연방 정부 내 채용 및 계약 프로세스가 단순화되고,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다.
- 대중과 보수층 사이에서는 약속 이행으로 인한 신뢰 회복 효과가 있을 수 있다.

#### • 장기적 도전 과제

- 법적 소송이나 내부 조직 갈등, 그리고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혁신 및 창의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민간 부문과 대학 등에서의 불법적 차별 철폐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4. 결론

이 Fact Sheet 는 트럼프 2.0 정부가 연방 정부 내 DEI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능력주의와 시민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채용 및 계약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오직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DEI 정책이 초래한 불필요한 차별과 비용을 제거하는 데 있다.

단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성 및 포용성 측면의 부작용, 법적 분쟁, 그리고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전통적 보수주의와 능력주의 가치를 극명하게 대변하며, 앞으로의 행정 개혁과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livers Emergency Price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to Defeat the Cost-of-Living Crisis

January 22, 2025

**DELIVERING EMERGENCY PRICE RELIEF:**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deliver emergency price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defeat the cost-of-living crisis.

- The Presidential Memorandum recognize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crushing cost of everyday liv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mposed complex regulatory burdens and radical policies designed to weaken American production.
- President Trump is ordering all Federal agencies to untangle the American economy from Biden constraints and improve affordability of necessary goods and services and increase the prosperity of the American workers.
- This includes action to:
  - Drastically lower the cost of housing and expand housing supply;
  - Eliminate unnecessary administrative expenses and rent-seeking practices that drive up healthcare costs;
  - Eliminate counterproductive requirements raising the costs of home appliances;
  - Creat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merican workers including drawing discouraged workers into the labor force; and
  - Eliminate harmful, coercive “climate” policies driving up the costs of food and fuel.

**ENDING BIDEN’S WAR ON AFFORDABILITY:** The Biden Administration’s destructive policies inflicted an historic inflation crisis on the American people.

- Hardworking families are overwhelmed today by the cost of fuel, food, housing, automobiles, medical care, utilities, and insurance.
- Unprecedented regulatory oppression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imposed almost \$50,000 in costs on the average American household, whereas President Trump’s first-term agenda reduced regulatory costs by almost \$11,000 per household.



- Americans are unable to purchase homes at historic rates, in part due to regulatory requirements that alone account for 25 percent of the cost of constructing a new home.
- Biden's assault on plentiful and reliable American energy through impossible, unnecessary, and illegal regulatory demands have driven up the cost of transportation and manufacturing.
  - Biden's war on energy has been a war on American consumers. American households are paying an average of \$1,200 more per year in energy costs under President Biden's policies. Since he took office, total energy costs rose by 36%, gasoline rose 41%, home energy costs rose 30%, electricity bills rose 29%, and gas bills rose 34%.
  - After averaging just \$2.77 per gallon under President Trump, and a price of \$2.33 upon leaving office, the price of gasoline skyrocketed under President Biden, reaching \$3.33 a year later. It went on to reach a peak at \$5.00 per gallon and remains elevated today.
- The unlawful regulatory mandate on companies to eliminate gas-powered vehicles has resulted in artificial price increases in order to subsidize electric vehicles, largely disfavored by consumers.

## 생활비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가격 안정 조치

### 1. 정책 배경 및 핵심 내용

- **긴급 가격 인하 조치**
  - 2025 년 1 월 22 일,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각서를 통해 미국 가계의 생활비 위기를 해소하고 긴급 가격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 이 행정 명령은 Biden 행정부가 부과한 복잡한 규제와 그로 인한 생산 저해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연방 기관이 이를 제거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경제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 **주요 실행 방안**
  - **주택 비용 인하 및 공급 확대:** 주택 가격 인하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 **의료비 및 관리 비용 절감:**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렌트 시킹 관행을 제거해 의료비 상승 요인을 줄인다.
- **가전제품 비용 인하:** 주택용 가전제품의 비용 상승에 기여하는 비효율적 요구사항을 제거한다.
- **고용 창출:** 노동 시장에서 낙담한 노동자를 포함한 고용 기회를 확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경제적 번영을 높인다.
- **에너지 및 기후 규제 철회:** 식품과 연료 비용 상승을 부추기는 강압적 ‘기후’ 정책을 폐지해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

#### • 비판적 메시지

- Biden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가계에 평균 약 50,000달러의 비용 부담을 주었고, 반면 트럼프 정부의 첫 임기에는 규제 비용을 약 11,000 달러 줄였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총 36% 증가, 휘발유 41% 증가 등)을 Biden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로 돌리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가격 상승 문제를 강조한다.
- 가솔린 가격 사례(트럼프 재임 시 평균 \$2.77, Biden 재임 후 최고 \$5.00)는 Biden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 2. 심층 분석

### (1) 정책 이념과 정치적 메시지

#### • 규제 철회와 경제 자율성 회복

- 행정 명령은 Biden 정부가 도입한 복잡한 규제를 "Biden constraints"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Emergency Price Relief”라는 표현을 통해 긴급성과 위기 대응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미국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 • Biden 정부에 대한 강경 비판

- Biden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미국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대안으로서 트럼프 정부의 접근 방식을 부각시킨다.
- Biden 정부의 정책 결과를 구체적 수치(예: 에너지 비용 상승, 가솔린 가격 상승)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실패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 (2)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실행 메커니즘

### • 단기 효과

- 행정 명령에 따라 연방 기관들이 Biden 정부의 규제를 제거하면, 단기적으로 주택, 의료, 가전제품 등 필수재 가격 인하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고용 창출 조치는 노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 • 장기적 과제 및 위험

- 규제 철폐가 반드시 장기적 비용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규제 완화가 부작용으로 이어질 경우, 품질 저하나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 에너지 정책과 기후 규제 철폐는 단기적으로 연료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 (3) 정책 집행의 정치·사회적 함의

### • 정치적 분열 심화

- Biden 정부의 규제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비판함으로써, 정책 대안으로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규제 철폐와 가격 인하 조치를 부각시킨다.
- 이 과정은 정치적 이념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 • 사회적 신뢰와 소비자 부담 해소

- 가계의 생활비 부담 해소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대중의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 “Emergency Price Relief”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정책 성과를 빠르게 체감시키려는 전략이다.

---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정책 방향

- 트럼프 정부는 Biden 정부의 복잡한 규제와 에너지 정책이 미국 가계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었다고 보고, 이를 철회하여 경제 자율성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규제 철회, 주택 및 의료비 인하, 고용 창출,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의 구체적 조치들을 통해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포괄적 전략을 펼친다.

- 단기 효과

- 연방 기관이 즉각적으로 규제를 해체하면, 소비자 가격 인하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특히, 에너지 비용과 주택 비용 인하 조치는 소비자 부담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 도전 과제

- 규제 철회가 단기적 비용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품질 관리, 소비자 보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 Biden 정부의 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방식은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집행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 있다.

---

### 4. 결론

이 Fact Sheet 는 트럼프 정부가 Biden 정부의 복잡한 규제와 강압적 에너지, 주택, 의료 관련 정책이 미국 가계에 가한 부담을 철회하고, 긴급 가격 인하를 통해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정책 핵심은 연방 기관의 제약을 해체하고, 주택, 의료, 에너지 등 필수 분야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며,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전반의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인하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철회에 따른 부작용, 지속 가능성 문제, 정치적 분열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January 22, 2025

**INVOKING A NATIONAL EMERGENCY:**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invoking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regarding the crisis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 The Executive Order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following four years of record-shattering illegal immigration into the U.S.
- It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to deploy additional personnel to the border, including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the National Guard.
- Additionally, it directs the Secretaries of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to finish the wall along the southern border and ensures that DHS has all the flexibility it needs to operate air missions near the border.

**TAKING BACK CONTROL:** For the past four years, the federal government has abdicated its responsibility to enforce the border, resulting in a catastrophic immigration crisis for the United States.

- When States like Texas took steps to prevent illegal crossings into their state, the federal government sought to stop them by cutting down their barriers.
- A record-shattering 8.72 million border encounters have occurred at the southern border from FY21-FY24, overwhelming border resources and endangering communities.
  - This has led to untold hundreds of thousands of children being trafficked. Roughly 550,000 unaccompanied alien children have been encountered at the border since FY21. Fentanyl and other drugs are pouring over the border and flooding our communities, killing roughly 75,000 Americans in 2023—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for Americans ages 18-45.
  - It has allowed dangerous gangs like the Venezuelan Tren de Aragua to takeover and terrorize entire American cities.
  - And it has led to the murders of innocent Americans like Laken Riley, Jocelyn Nungaray, Rachel Morin, and many others.

BUILDING ON PAST SUCCESS: America is in a dire situation, and it is past time for the government to act. President Trump first declared an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on February 15, 2019, and continued that emergency on February 13, 2020.

- Following the at-the-time historic surges of illegal aliens in 2018, President Trump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and successfully reduced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illegally.
- In 2024, President Trump promised to declare an emergency to secure the border and use the military where necessary to protect Americans from foreign threats.
- This Executive Order will allow the government to g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 border, combat the cartels, and secure our nation.
- As President Trump described in 2018: “Illegal immigration affects the lives of all Americans. Illegal immigration hurts American workers; burdens American taxpayers; and undermines public safety; and places enormous strain on local schools, hospitals, and communities in general, taking precious resources away from the poorest Americans who need them most. Illegal immigration costs our country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each year...And I will therefore take every lawful action at my disposal to address this crisis. And that’s what we’re doing.”

## 남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 선포

### 1. 정책 배경 및 핵심 내용

#### • 국가 비상사태 선언

2025 년 1 월 22 일, 트럼프 정부는 남부 국경 위기를 대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국토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발령되었으며, 지난 4 년간 기록적인 불법 이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 • 군사 및 국토안보 강화

-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 인력(군인 및 국방경비대 포함)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도록 지시.
-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남부 국경에 건설 중인 장벽 완공을 지시하고, 국토안보부(DHS)가 국경 인근에서 항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연성을 부여.

- **위기 상황의 심각성 강조**

- 지난 4 년 동안 8.72 백만 건의 국경 접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경 자원이 과부하되었으며 지역사회가 위협에 노출되었다.
- 수십만 명의 미성년자 인신매매, 550,000 여 건의 동반 없는 외국 아동 사례, 펜타닐 등 약물 유입으로 인해 2023 년에 약 75,000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
- 베네수엘라의 Tren de Aragua 와 같은 범죄 조직이 국경을 장악하며 미국 내 도시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례가 언급됨.

- **과거 조치와의 연계**

- 트럼프 정부는 2019 년과 2020 년에 이미 남부 국경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4 년에도 국경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 비상 조치를 약속한 바 있음.
- 이번 조치는 국경 통제권을 회복하고, 범죄 카르텔과 맞서며, 미국의 주권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

## 2. 심층 분석

### (1) 정책 의도 및 정치적 메시지

- **연방 정부의 통제권 회복**

- 지난 4 년간 연방 정부가 국경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발생한 위기를 지적하며, 이번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연방 정부가 국경 통제를 다시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 텍스트에서는 주정부(예: 텍사스)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자체 조치를 취했으나, 연방 정부가 이를 제지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 정부의 역할을 되찾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안보와 국민 안전 최우선**

-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범죄 조직의 활동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시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다.
- 2018 년 당시 비상사태 선언 이후 성과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이전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더욱 강력한 대응책임을 내세운다.

## (2) 실행 메커니즘 및 정책 효과

### • 군사력 및 국토안보 자원의 신속 배치

- 추가 인력 배치와 장벽 완성 명령은 단기적으로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안보부의 항공 임무 수행 권한 강화는 국경 감시 및 범죄 단속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

### • 장기적 도전 과제

- 국경 통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불법 이민 근본 문제나 인도적 문제(아동 인신매매 등) 해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연방 정부의 강경 조치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주정부와의 권한 분쟁 문제 등 장기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3) 사회·정치적 함의

### • 정치적 분열 및 대립 심화

-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남부 국경 관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민주당과의 정책적 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연방 정부의 통제권 강화와 주정부의 자율성 제한 간의 갈등, 그리고 인권 단체 및 국제 사회의 비판 등 다양한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 • 국민 신뢰 및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

- 불법 이민과 범죄 조직의 위협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점은 보수층과 안보 중시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인도주의적 문제와 인권 침해 우려가 부각될 경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존재한다.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 정책 방향



- 트럼프 정부는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범죄 조직의 활동 등으로 인한 위기를 해소하고, 연방 정부의 국경 통제 권한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 군사력 배치와 국토안보 강화, 장벽 완성 등의 구체적 조치를 통해 단기적 안보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과거의 성공 사례를 재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 단기적 효과

- 즉각적인 인력 배치와 국경 감시 강화는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긴급 조치로 인해, 주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경의 안전 수준을 단기간 내에 높일 수 있다.

#### • 장기적 도전 과제

- 불법 이민의 근본 원인, 인도적 문제, 그리고 주정부와의 권한 분쟁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정치적 분열 및 사회적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 문제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 4. 결론

이번 Fact Sheet 는 트럼프 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과 그로 인한 안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력 및 국토안보 자원의 강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경 통제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문제, 주정부와의 권한 갈등, 그리고 정치적 대립 등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내부의 강경한 보수주의와 ‘America First’ 정책 방향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앞으로의 국경 관리 및 안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Protects the States and the American People by Closing the Border to Illegals via Proclamation**

January 22, 2025

**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 Today, President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suspends the physical entry of aliens engaged in an invasion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southern border.

- In joining the Union, the States agreed to surrender much of their sovereignty in exchange for the federal government’s promise in Article IV, Section 4 of the U.S. Constitution, to “protect each of [the States] against Invasion.”
- States, such as the Great State of Texas, have asked the Federal Government for protection against invasion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it failed to protect them from millions of illegal aliens entering the United States, invading their communities, and imposing billions of dollars of costs upo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The President has the authority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s well as inherent authority under Article II of the Constitution, to prevent the physical entry of illegal aliens into the United States across the southern border.

**DIRECTION TO IMMEDIATELY REPEL, REPATRIATE, AND REMOVE ILLEGAL ALIENS INVOLVED IN AN INVASION:**

- Through the exercise of his authority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 is authorizing and directing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Department of State to take all necessary action to immediately repel, repatriate, and remove illegal aliens across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 Through the exercise of his authority, President Trump has further restricted access to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laws that would enable any illegal alien involved in an invasion across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asylum.

**PROMISES KEPT:** In 2024, President Trump promised to “seal the border on Day 1.”

- As President Trump described in 2018: “Illegal immigration affects the lives of all Americans. Illegal immigration hurts American workers; burdens American

taxpayers; and undermines public safety; and places enormous strain on local schools, hospitals, and communities in general, taking precious resources away from the poorest Americans who need them most. Illegal immigration costs our country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each year...And I will therefore take every lawful action at my disposal to address this crisis. And that's what we're doing.”

##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폐쇄 조치 시행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국가 비상 및 주 보호 약속

트럼프 정부는 2025 년 1 월 22 일,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침입으로부터 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의 물리적 입국을 중단했다.

미국 주들이 연방정부에 가입하면서 헌법 제 4 조에 따라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기로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과거 연방정부의 실패 지적

특히 텍사스와 같은 주들이 Biden 정부 시절 불법 이민 문제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연방정부가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 법적 근거 및 권한 행사

트럼프 정부는 이민 및 국적법과 헌법 제 2 조에 따른 권한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막을 권리가 있음을 내세운다.

- 즉각적 조치 지시

국토안보부, 법무부, 외교부에 대해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격퇴, 송환, 추방할 것을 지시하며, 불법 이민자가 망명 등 이민법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추가 제한 조치를 명령한다.

- 캠페인 공약 이행

2024 년 “Day 1 에 국경을 봉쇄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음을 강조한다.

---

### 2. 정책 실행 및 추진 방식

- 행정명령을 통한 직접 개입

행정명령으로 국토안보부, 법무부, 외교부에 명확한 실행 지시를 내림으로써,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 **물리적 차단 및 추방 조치 강화**

불법 이민자의 물리적 입국을 중단하고, 이미 국경에 진입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격퇴와 송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다.

- **이민법상의 예외 폐지**

망명 등 이민법상의 보호조치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점이 특징이다.

---

### 3. 정치적 메시지와 파급 효과

- **연방정부의 역할 재확인**

주들이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보호를 요구했으나, Biden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비판하며, 중앙 정부가 다시 한 번 주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강경한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강조**

"침입", "봉쇄", "즉각적 추방"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해 불법 이민을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을 부각시킨다.

- **실질적 효과와 논란**

단기적으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국경 통제 강화로 주와 지역 사회의 안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 우려, 법적 소송, 주 정부와의 권한 분쟁 등 장기적인 논란과 부작용도 예상된다.

---

### 4. 종합 평가

- **정책 취지**

트럼프 정부는 지난 4 년간 Biden 정부 시절 불법 이민 문제로 인해 주와 지역사회가 겪은 피해를 근거로, 중앙 정부가 다시 한 번 헌법에 명시된 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 **실행 전략**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이미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추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경 봉쇄” 공약을 실현하려 한다.

- **정치적·사회적 파급 효과**

단기적으로는 주와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국민 안전 제고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인도적 문제, 법적 분쟁, 그리고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

## 5. 결론

이 Fact Sheet 는 트럼프 정부가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헌법적 권한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드러낸다.

주와 국민의 보호, 국경 봉쇄,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즉각적 추방 조치를 통해 Biden 정부 시절의 실패를 바로잡고, 2024 년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안보 강화와 주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문제와 법적, 정치적 분쟁의 도래라는 도전 과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designates the Houthis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January 22, 2025

REVERSING THE BIDEN ADMINISTRATION'S REMOVAL OF THE HOUTHIS FROM THE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LIST: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Re-Designating Ansar Allah (also known as the Houthis)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 The Executive Order sets in motion a process by which Ansar Allah, also known as the Houthis, will be designated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 President Trump designated the Iranian-backed Houthis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FTO) in January 2021.
  - Within one month of taking office, the Biden administration reversed the Houthis' designation.
  - As a resul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weak policy, the Houthis have fired at U.S. Navy warships dozens of times, launched numerous attacks on civilian infrastructure in partner nations, and attacked commercial vessels transiting Bab al-Mandeb more than 100 times.
  - The Executive Order directs the Secretary of State, in consultation with others, to recommend the re-designation of the Houthis within 30 days.
- Under President Trump, it is now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cooperate with its regional partners to eliminate the Houthis' capabilities and operations, deprive them of resources, and thereby end their attacks on U.S. personnel and civilians, U.S. partners, and maritime shipping in the Red Sea.
- Following the Houthis' re-designation as an FTO, the Executive Order also directs 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and the Secretary of State to jointly review United Nations partn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ontractors operating in Yemen.
- Following this review, the President will direct USAID to end its relationship with entities that have made payments to the Houthis, or which have opposed international efforts to counter the Houthi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wards the Houthis' terrorism and abuses.

##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배경 및 정책 전환**
  - 트럼프 정부는 2021년 1월에 이미 이란의 영향 하에 있는 후티(Ansar Allah)를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했다.
  - 그러나 Biden 정부는 취임 후 한 달 만에 후티 지정 조치를 철회해, 정책의 공백과 안보 리스크가 증가한 상황이다.
- **재지정의 주요 내용**
  - 행정명령을 통해 후티(Ansar Allah)를 다시 FTO로 재지정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 국무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재지정을 위한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 후티의 능력과 작전을 축소하고 자원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지역 동맹국이 협력할 것임을 명시한다.
- **연관 조치 및 후속 조치**
  - USAID와 국무부가 협력해 예멘 내 유엔 파트너, NGO, 계약업체들을 재검토하고, 후티와 연관된 자금 지원이나 테러 지원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의 관계를 단절할 계획이다.

---

### 2. 심층 분석

#### (1) 정책 의도 및 정치적 메시지

- **보수 외교 정책의 일환**
  - Biden 정부의 후티 지정 철회로 인한 안보 취약점을 문제 삼아, 강경한 대응을 통해 미국의 권위와 국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America First" 이념에 기반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후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정치적 대립 및 이데올로기 전환**
  - 후티 재지정은 Biden 정부의 약한 안보 정책에 대한 반발이자,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강경 외교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 이 조치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테러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2) 실행 메커니즘 및 정책 효과

### • 단기적 효과

- 후티에 대한 FTO 재지정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해당 조직의 자금 조달 및 작전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 동맹국 및 지역 파트너에게 후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시켜, 협력 강화와 지역 안보 체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 장기적 도전 과제

- 후티 재지정이 예멘 내 인도주의적 위기와 국제적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후티와 관련된 조직 및 파트너에 대한 제재 및 관계 단절 조치가 예멘 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차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이로 인해 국제 사회 및 유엔 관련 기관들과의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3) 정책 집행의 파급 효과

### • 안보 및 외교 전략 강화

- 후티 재지정은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강경한 안보 정책을 유지하고,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공동 대응 체계를 재구축하고 후티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 정치·외교적 파장

- Biden 정부의 후티 정책 철회와 대비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 내외의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 국제 사회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예멘 내 인도주의 지원 및 안정화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 정책 방향



- 트럼프 정부는 후티 재지정을 통해,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강경한 보수주의를 재확인하고,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Biden 정부의 약한 후티 정책을 반전시키고, 미국 및 동맹국들이 중동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 **단기 효과**

- 재지정을 통해 후티의 금융 및 운영 자원에 제약을 가하고, 미국 및 동맹국들이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 도전 과제**

- 재지정 이후 후티와 연계된 인도주의적,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차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 이로 인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법적, 외교적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

#### 4. 결론

트럼프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후티를 다시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함으로써, Biden 정부의 약한 안보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국의 "America First" 외교 전략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후티의 위협을 억제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강경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문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긴장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은 미국 외교 정책의 강경 노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중동 지역의 복잡한 안보·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미국이 취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irects Administration to Advance Lumbee Tribe Recognition

January 23, 2025

**DIRECTING PLAN FOR RECOGNITION OF LARGEST TRIBE EAST OF MISSISSIPPI RIVER:**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to submit a plan to advance full federal recognition of the Lumbee Tribe of North Carolina.

- The memorandum establishes that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federal recognition and full tribal benefits for the Lumbee Tribe of North Carolina.
- It directs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to submit a plan to assist the Lumbee Tribe in obtaining full federal recognition through legislation or other available mechanisms, including the right to receive full federal benefits.

**FULL FEDERAL RECOGNITION IS LONG OVERDUE:** The Lumbee have long been recognized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but further federal action is required for full federal recognition and the accompanying benefits and protections.

- The State of North Carolina recognized the Lumbee Tribe in 1885, and in 1956,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signed the 1956 Lumbee Act, which recognized the Lumbee but denied them some federal benefits.
- Tribes can gain federal recognition by: (1) Act of Congress; (2)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s Office of Federal Acknowledgement process; or (3) federal court decision.
  - President Trump's memorandum directs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to analyze these legal pathways for advancing Lumbee recognition.
- Federal recognition grants tribes' certain governmental autonomy, land protections, and access to federal programs and services, like health care through the Indian Health Service.

**DELIVERING ON PROMISE TO SUPPORT RECOGNITION:** President Trump promised to support federal recognition of the Lumbee Tribe.

On September 23, 2024, President Trump stated: "Today, I'm officially announcing that, if I am elected in November, I will sign legislation granting the great Lumbee Tribe federal recognition that it deserves."

## 럼비 부족(Lumbee Tribe) 연방 인정 추진

### 1. 정책 배경 및 핵심 내용

- 연방 인정을 통한 부족 혜택 확대

- 2025 년 1 월 23 일, 트럼프 정부는 북캐롤라이나에 있는 Lumbee 부족의 전면적인 연방 인정을 추진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에게 계획 제출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를 발행했다.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Lumbee 부족에 대해 연방 인정과 관련된 완전한 부족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임을 명확히 한다.

- 연방 인정을 위한 법적 경로 검토 지시

- Lumbee 부족은 오랜 기간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아왔으나, 연방 차원의 전면 인정과 이에 따른 보호 및 혜택은 미흡한 상황이다.
- 내무부 장관은 의회 법안, 내무부의 연방 승인 절차(Office of Federal Acknowledgement), 또는 연방 법원 판결 등 다양한 법적 경로를 분석해 부족의 전면 인정을 추진해야 한다.

- 역사적 배경

- 북캐롤라이나 주는 1885 년부터 Lumbee 부족을 인정해왔으며, 1956 년 Eisenhower 대통령이 서명한 Lumbee Act 를 통해 부족 인정을 공식화했지만, 일부 연방 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 이번 행정명령은 부족에게 정부 자치권, 토지 보호, 인디언 건강 서비스 등 연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접근권을 포함한 전면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정치적 공약 이행

- 2024 년 9 월 23 일, 트럼프는 Lumbee 부족에 대한 연방 인정을 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

### 2. 심층 분석

#### (1) 정책 의도 및 목표

- 부족의 전면 인정 및 혜택 확대

- Lumbee 부족은 역사적으로 일정 부분 인정받아왔으나, 연방 차원에서의 완전한 인정 및 혜택 부여는 미흡했다.
- 트럼프 정부는 부족에게 정부 자치권, 토지 보호, 연방 의료 서비스 등 주요 혜택을 부여해 부족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 • 연방 정부의 약속 이행

- 미국 주들이 연방 정부에 가입할 때 헌법 제 4 조에 따른 침입 방지 및 보호 약속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부족에 대한 전면 인정을 통해 정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 부족 인정을 통한 연방 지원은 부족의 생활 개선 및 문화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실행 메커니즘 및 정책 추진 경로

#### • 법적 절차와 행정 프로세스

- 내무부 장관은 부족 인정을 위한 다양한 법적 경로(의회 법안, 연방 승인 절차, 또는 법원 판결)를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부족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방 인정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 정책 집행 및 모니터링

- 행정명령에 따라 부족 인정을 위한 계획이 제출되면, 이후 의회 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 연방 인정을 받은 경우, 부족은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부족 구성원들의 복지 및 자치권이 강화될 것이다.

### (3) 정치·사회적 함의

#### • 보수주의와 부족 권리 강화

- 이번 조치는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능력주의’와 전통적 가치 회복과는 다르게, 소수 부족의 자치와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이는 트럼프 정부가 단순히 강경 보수 정책만이 아니라, 특정 부족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정치적 공약 이행과 이미지 개선

- 2024년 선거 기간 동안 발표한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부족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보수 유권자 및 부족 대표 단체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연방 인정을 통한 부족 혜택 확대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 토론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 단기 효과

- 내무부 장관의 계획 제출을 통해 부족 인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마련되면, Lumbee 부족은 연방 혜택 확대와 정부 자치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부족 구성원들의 복지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단기 효과가 기대된다.

#### • 장기적 도전 과제

- 연방 인정을 위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부족 인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부족 인정을 통해 제공되는 연방 혜택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연방 및 주 정부 간의 역할 분담 문제 등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 4.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가 Lumbee 부족에 대해 연방 인정을 확대하고, 부족에게 전면적인 연방 혜택을 부여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내무부 장관에게 부족 인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지시함으로써, 부족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족 구성원들의 복지와 정부 지원 강화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절차와 정치적 갈등, 그리고 연방 및 주 정부 간 역할 분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공약 이행을 통해 부족 지원에 나선 사례로, 향후 연방 인정을 둘러싼 논의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Orders Declassification of JFK, RFK, and MLK Assassination Files

January 23, 2025

PROVIDING AMERICANS THE TRUTH AFTER SIX DECADES OF SECRECY: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ntitled Declassification of Records Concerning the Assassinations of President John F. Kennedy, Senator Robert F. Kennedy, and the Reverend Doctor Martin Luther King Jr.

- The Executive Order establishes the policy that, more than 50 years after these assassinations, the victims' families and the American people deserve the truth.
- Specifically, the Order directs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d other appropriate officials to:
  - (1) Present a plan within 15 days for the full and complete release of all John F. Kennedy assassination records; and
  - (2) Immediately review the records relating to the Robert F. Kennedy and Martin Luther King Jr. assassinations and present a plan for their full and complete release within 45 days.

PRESIDENT TRUMP IS ENDING THE ENDLESS DELAYS: In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ordered agencies to move toward disclosing more information about the John F. Kennedy assassination, and now he is ordering that the work be completed.

- The President John F. Kennedy Assassination Records Collection Act of 1992 required all records related to the assassination be released in 25 years, absent a presidential certification that:
  - Continued postponement is necessary due to an identifiable harm to the military defense, intelligence operations, law enforcement, or conduct of foreign relations; and
  - Such identifiable harm is of such gravity that it outweighs the public interest in disclosure.
- In October 2017 and April 2018 certifications, President Trump directed agencies to reevaluate redactions and disclose any information that no longer warranted withholding.

- President Biden delayed disclosure in 2021, 2022, and 2023.
- In this Order, President Trump finds that continued withholding of the John F. Kennedy records is not in the public interest and is long overdue. He also concludes that releasing the Robert F. Kennedy and Martin Luther King Jr. assassination records is in the public interest.

PRESIDENT TRUMP DELIVERS ON PROMISE TO RELEASE ASSASSINATION RECORDS: President Trump promised during his campaign to release assassination records to give Americans the truth.

- President Trump pledged on multiple occasions to release the JFK files, specifically stating in June 2024 that he would do so “early on.”
- President Trump: “When I return to the White House, I will declassify and unseal all JFK assassination related documents. It’s been 60 years, time for the American people to know the TRUTH!”

## JFK, RFK, MLK 암살 관련 문서 기밀 해제 명령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진실 공개의 필요성 강조**

50 년 넘게 비밀에 부쳐진 JFK, RFK, MLK 암살 관련 기록을 공개해, 희생자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실을 제공할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암살 사건의 기록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 **구체적 공개 일정 명시**

- JFK 암살 기록: 15 일 이내에 전면 공개 계획 수립

- RFK 및 MLK 암살 기록: 45 일 이내에 전면 공개 계획 수립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해, 기록 공개의 신속성을 강조한다.

- **법적 배경 및 선례**

JFK 암살 기록 수집법(JFK Assassination Records Collection Act of 1992)에 따라, 암살 관련 기록은 25 년 내에 공개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의 인증에 따라 연기가 가능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JFK 기록 공개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으나, 이후 Biden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개를 지연시켰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지연을 종식시키려는 것이다.

- **정치적 약속과 일관성**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암살 기록 공개를 약속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60 년이 지났으니, 미국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 2. 심층 분석

### (1) 정책 의도 및 메시지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암살 사건과 관련된 기록 공개를 통해 정부의 비밀주의를 종식하고, 국민에게 역사적 진실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이는 과거 정부의 비밀 유지 및 정보 은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정치적 대립 구도 재구성**

Biden 정부가 암살 기록 공개를 지속적으로 연기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투명성 정책을 부각시킨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America First" 이념과 정치적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2) 법적 및 행정적 측면

- **기록 공개의 법적 기반**

JFK 암살 기록 수집법에 따라, 암살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 후 공개되어야 하나,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기가 가능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공개 지연에 대한 판단 권한을 행사해, 국민 이익이 우선임을 주장한다.

- **행정 명령의 구체적 실행 계획**

국가정보국장 등 관계자들에게 구체적 계획 수립을 지시해, 일정 내에 전면 공개를 추진하도록 명령한다. 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사회·정치적 함의

- **국민 신뢰 회복**

오랜 기간 감춰진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역사 재해석 및 정치적 메시지**

암살 사건 기록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미국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정부의 책임성을 묻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과거 정부의 불투명한 운영을 비판하며, 앞으로의 행정 투명성 강화의 선례를 마련하려 한다.

---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정책 방향**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가 암살 사건 기록 공개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숨겨진 진실을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암살 기록 공개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정부의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단기적 효과**

구체적인 공개 일정(15 일, 45 일 내 계획 수립)을 통해 단기간 내에 기록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 정보 은폐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장기적 도전 과제**

암살 기록 공개 과정에서 국가 안보, 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함께 공개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외교적 분쟁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공개된 기록을 둘러싼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정치적 대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

### 4. 결론

트럼프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50 년 넘게 감춰진 JFK, RFK, MLK 암살 사건 기록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 수립 지시를 통해, 기록 공개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며, 이는 과거 Biden 정부의 공개 지연에 대한 강력한 반전으로 작용한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역사적 진실을 제공하고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장기적으로는 민감 정보 공개에 따른 법적·외교적 도전과 역사적 재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Launches PCAST to Restore American Leadership in Science and Technology

January 23, 2025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I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to spearhead America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i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 PCAST will include up to 24 members, with representation from leading American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from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
-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White House A.I. and Crypto Czar will co-chair PCAST.
- PCAST will provide advice and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to ensure that policies are informed by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ie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 This council will champion bold investments in innovation, the elimination of bureaucratic barriers, and actions to help the United States remain the world's premier hub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reakthroughs.

**FOCUSING SCIENCE AND TECHNOLOGY ON EXCELLENCE:** President Trump is refocus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o emphasize results-driven excellence and merit-based achievement.

- The United States must leverage its pioneering spirit to lead in transformative science and technology, reshaping industries and securing the nation's leadership.
- The pursuit of scientific truth is under threat from ideological agendas that prioritize group identity over individual merit, enforce conformity at the expense of innovative ideas, and inject politics into the heart of the scientific method.
- These threats have not only distorted truth, but have eroded public trust, undermined the integrity of research, stifled innovation, and weakened America's competitive edge.
- PCAST will restore excellence by bringing together the brightest minds from academia, industry, and government to prioritize measurable results, foster innovation, and dismantle barriers to scientific progress.

BUILDING ON SIGNIFICANT SCIENCE AND TECHNOLOGY ACCOMPLISHMENTS: President Trump's first administration laid a strong foundation for American technological leadership.

- Launching national initiatives to drive innovation in critical technologies, including the American AI Initiative and the National Quantum Initiative, which prioritized research, strategic investments, and workforce development in transformative fields.
- Advancing emerging technologies by crafting regulatory and non-regulatory frameworks for areas such as autonomous driving systems, unmanned aerial systems, and biotechnology, ensuring a balanced approach to innovation and safety.
- Accelerating groundbreaking research and collaboration through initiatives like the 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spectrum auctions to unlock valuable frequencies for 5G and innovation, and investments in world-leading supercomputing systems.

## 미국 과학 및 기술 리더십 복원을 위한 PCAST 출범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개요:

이 팩트 시트는 미국의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 및 기술 자문위원회(PCAST)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산업, 학계, 정부의 선도적인 과학자 및 기술자를 최대 24 명까지 포함하며,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대한 증거 기반의 권고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요 지시사항:

- **위원회 구성 및 구조:**
  - PCAST 는 산업, 학계, 정부의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최대 24 명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 대통령의 과학·기술 보좌관과 백악관 A.I. 및 크립토 차저가 공동 의장으로 참여한다.
- **임무 및 기능:**

- 위원회는 최신 과학적 발견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되도록 증거 기반의 권고안을 마련하며, 혁신에 대한 대담한 투자 촉진, 관료적 장벽 제거 등의 조치를 권고한다.

- **중점 분야:**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자율주행 시스템, 무인항공 시스템, 생명공학 등 신흥 및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위원회는 집단 정체성보다 개인의 성과와 혁신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입각해, 과학적 진실을 보호하고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정책 목표:

- **과학적 우수성 회복:**

- PCAST 를 통해 결과 중심의 우수성과 능력 위주의 연구 및 혁신 문화를 회복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재강화 한다.

- **경쟁력 강화:**

- 미국 기업들이 신흥 기술 분야에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신 연구와 기술 혁신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한다.

- **장애물 제거:**

- 관료적 장벽과 불필요한 규제를 해체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 전략적 목표:

-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 학계,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 과정을 구축한다.
-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및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미국이 글로벌 기술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전략:

- **제도적 설계:**
  - PCAST 는 행정부 내에 통합되어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한다.
- **협력 및 조정:**
  - 위원회는 주요 연방 기관(예: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등)과 협력하며, 민간 및 학계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도출한다.
- **정책 수립 및 보고:**
  - PCAST 는 주기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제안 및 실행 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도전 과제:

- **기관 간 협력:**
  - 다양한 부문과 기관의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료적 마찰과 조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규제와 혁신의 균형:**
  -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 윤리,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규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 **정치·이념적 긴장:**
  - 일부 집단은 과학 정책에 이념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내부 및 외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 **글로벌 경쟁:**
  -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남기 위해 과학적 진실과 능력 위주의 정책 결정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America First” 원칙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위해 기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 사회적 영향:

- PCAST 를 통해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이 더욱 투명하고 증거 기반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공의 신뢰 회복과 함께 혁신 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민간과 정부, 학계 간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은 국제 기술 경쟁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 5. 결론

PCAST 신설은 미국이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다.

이 위원회는 민간, 학계, 정부의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증거 기반의 권고를 제공하며,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PCAST 의 역할은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최신 연구 성과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경제적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실행은 기관 간 협력, 규제와 혁신의 균형,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 및 개선 체계를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기술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Fact Sheet: Executive Order to Establish United States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January 23, 2025

**ENSURING U.S.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stablish regulatory clarity for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and secure America's position as the world's leader in the digital asset economy, driving innovation and economic opportunity for all Americans.

- The Executive Order establishes the Presidential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to strengthen U.S. leadership in digital finance.
  - The Working Group will be tasked with developing a Federal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digital assets, including stablecoins, and evaluating the creation of a strategic national digital assets stockpile.
  - The Working Group will be chaired by the White House AI & Crypto Czar and includ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Chairman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heads of other relevant departments and agencies.
  - The White House AI & Crypto Czar will engage leading experts in digital assets and digital markets to ensure that the actions of the Working Group are informed by expertise beyond the Federal Government.
- The Executive Order directs departments and agencies with identifying and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Working Group on any regulations and other agency actions affecting the digital assets sector that should be rescinded or modified.
- The Executive Order prohibits agencies from undertaking any action to establish, issue, or promot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 The Executive Order revokes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Digital Assets Executive Order and the Treasury Department's Framework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on Digital Assets which suppressed innovation and undermined U.S. economic liberty and global leadership in digital finance.

**ELIMINATING REGULATORY OVERREACH ON DIGITAL ASSETS AND PROTECTING AMERICAN ECONOMIC LIBERTY:** President Trump is fulfilling his promise to make the United States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 President Trump will help make the United States the center of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innovation by halting aggressive enforcement actions and regulatory overreach that have stifled crypto innovation under previous administrations.
- President Trump’s policy vision marks an unprecedented step towards welcoming in a new era for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one in which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will work towards ensuring innovation thrives, regulatory frameworks are clear, and economic liberty is protected.
- The growth of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in America must remain unhindered by restrictive regulations or unnecessary government interference.

## 행정명령: 미국 디지털 금융 기술 주도권 확립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주도권 확보
  -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확립하도록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 경제에서 혁신과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대통령 워킹 그룹 신설
  -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워킹 그룹(Presidential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이 신설되어, 디지털 자산(특히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전략적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도 검토하게 된다.
  - 이 워킹 그룹은 백악관 AI & Crypto Czar가 주재하며, 재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과 함께 구성된다.
  -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외부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규제 개선 및 CBDC 금지



- 각 부서와 기관은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 및 기관 행위를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철회하거나 수정하도록 워킹 그룹에 권고한다.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설립, 발행, 홍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전 행정명령 철회**
  - 이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국제 디지털 자산 참여 프레임워크를 철회해, 혁신 억제 및 경제적 자유를 저해한 요소들을 제거한다.
- **경제적 자유 및 혁신 촉진**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과도한 규제 집행과 정부 개입을 중단하고 디지털 금융 기술 혁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

---

## 2. 심층 분석

### (1) 정책 의도와 전략적 목표

- **글로벌 리더십 강화**
  - 미국이 디지털 자산 및 금융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남기 위해,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 대통령 워킹 그룹을 통한 정부 간 협업 및 외부 전문가 참여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 **규제 과잉 철회 및 경제적 자유 증진**
  - 기존의 복잡하고 억압적인 규제 체계를 철회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CBDC 금지 조항은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민간 주도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지향한다.

### (2) 정책 실행 메커니즘

- **대통령 워킹 그룹 운영**

- 워킹 그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 재무부, SEC 등 주요 부처와 함께,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규제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외부 전문가 참여**

- 정부 외부의 디지털 금융 기술 전문가들과 협력해, 최신 시장 동향과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 철회 및 수정 권고**

- 각 부처에 기존 규제 검토를 지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회하거나 수정하라는 권고를 진행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분야의 규제 부담을 줄인다.

### (3) 잠재적 효과와 도전 과제

- **단기 효과**

-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과도한 정부 개입 철회로, 디지털 금융 기술 관련 투자와 혁신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장기적 도전 과제**

- 규제 완화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 국제적으로는 CBDC 와 관련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금융 질서 내에서 미국의 입지가 어떻게 재조정될지 주목해야 한다.
- 다양한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외부 전문가 간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정책 방향**

-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혁신과 경제적 자유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 과도한 규제 집행과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미국을 디지털 금융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전망**

-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혁신 활성화를 통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그리고 국제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 간 원활한 협업과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 참여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

#### 4.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통령 워킹 그룹 신설과 과도한 규제 철회, CBDC 금지 등 구체적 조치들을 통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과 경제적 자유 증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크립토 수도"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국제 협력 등 장기적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정책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Action to Enhance America's AI Leadership

January 23, 2025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AI INNOVATION:**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liminating harmful Biden Administration AI policies and enhancing America's global AI dominance.

- President Trump is fulfilling his promise to revoke Joe Biden's dangerous Executive Order that hinders AI innovation and imposes onerous and unnecessary government control over the development of AI.
- The Biden AI Executive Order established unnecessarily burdensome requirements for companies developing and deploying AI that would stifle private sector innovation and threaten American technological leadership.
- Today's executive order:
  - Revokes the Biden AI Executive Order which hampered the private sector's ability to innovate in AI by imposing government control over AI development and deployment.
  - Calls for departments and agencies to revise or rescind all policies, directives, regulations, orders, and other actions taken under the Biden AI order that are inconsistent with enhancing America's leadership in AI.

**ENHANCING AMERICA'S AI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must act decisively to retain leadership in AI and enhance our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 This Executive Order establishes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sustain and enhance America's dominance in AI to promote human flourishing,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security.
- American development of AI systems must be free from ideological bias or engineered social agendas. With the right government policies, the United States can solidify its position as the leader in AI and secure a brighter future for all Americans.
  - The order directs the development of an AI Action Plan to sustain and enhance America's AI dominance, led by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 Technology, the White House AI & Crypto Czar, and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 It further directs the White House to revise and reissue OMB AI memoranda to departments and agencies on the Federal Government's acquisition and governance of AI to ensure that harmful barriers to America's AI leadership are eliminated.

CONTINUING PRIORITIZATION OF AI: President Trump has made American leadership in AI a priority and is now building on his actions during his first administration.

- President Trump signed the first-ever Executive Order on AI in 2019 recognizing the paramount importance of American AI leadership to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 In historic ac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committed to [doubling AI research investment](#), established the first-ever [national AI research institutes](#), strengthened American leadership in [AI technical standards](#), and issued the world's first [AI regulatory guidance](#) to govern AI development in the private sector.
- President Trump also took executive action in 2020 to establish the first-ever guidance for Federal agency adoption of AI to more effectively deliver services to the American people and foster public trust in this critical technology.
- Today's Executive Order builds upon these past successes and clears a path for the United States to act decisively to retain leadership in AI, rooted in free speech and human flourishing.

##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 조치 시행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미국 AI 혁신 장애물 제거
  - 트럼프 정부는 Biden 정부의 AI 정책 중 민간 부문의 혁신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정부 통제를 가한 조치를 폐지한다.
  - Biden 행정부의 AI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민간 기업이 AI 개발과 배포에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 **대통령 워킹 그룹 및 AI 액션 플랜 신설**

- 백악관 AI & Crypto Czar 가 주재하는 대통령 워킹 그룹을 신설해, 디지털 자산 및 AI 분야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정비한다.
- AI 액션 플랜 수립을 지시하여 미국의 AI 주도권을 유지 및 강화하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 부처(재무부, SEC 등)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도록 한다.

- **불필요한 규제 철회 및 CBDC 금지와 유사한 접근**

- 이전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중앙집중식 정책을 철회해, 미국 내 AI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
-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여, 경제적 자유와 혁신 환경을 촉진한다.

- **과거 AI 정책 성과 기반 확대**

- 2019 년 AI 관련 첫 행정명령, AI 연구 투자 확대, 국립 AI 연구기관 설립, 기술 표준 강화, 민간 부문에 대한 최초 AI 규제 지침 등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
- 이번 조치는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인간 번영에 기반한 AI 발전을 도모한다.

## 2. 심층 분석

### (1) 정책 의도와 전략적 목표

- **글로벌 AI 리더십 강화**

- 미국이 AI 혁신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남기 위해 규제 명확성과 혁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혁신을 보장해,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려 한다.

- **정부 개입 최소화와 시장 주도권 회복**

- Biden 정부의 AI 정책이 민간 기업의 창의성과 기술 개발을 제한했다고 판단,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철회해 시장 주도형 성장을 도모한다.

- AI 시스템 개발에서 이념적 편향이나 사회적 의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기술 본연의 발전을 촉진하려 한다.

## (2) 실행 메커니즘 및 정책 추진 방법

### • 대통령 워킹 그룹 운영

- 백악관 AI & Crypto Czar 가 이끄는 워킹 그룹을 통해 다양한 부처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균형 잡힌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 워킹 그룹은 AI 액션 플랜 수립과 관련 부처에 전달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 • 규제 재검토 및 수정 지시

- 각 부처와 기관에 Biden 정부의 AI 관련 규제, 지시, 명령 등을 재검토해, 미국의 AI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권고한다.
- OMB 에 AI 관련 메모를 재발행하도록 지시해, 정부의 AI 기술 취득 및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 • CBDC 금지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을 금지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AI 및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보호한다.
- 이는 AI 기술과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전체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 (3) 잠재적 효과와 도전 과제

### • 단기 효과

- 규제 철회와 새로운 AI 액션 플랜 수립을 통해, 민간 부문의 AI 개발 환경이 즉각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 유치와 기술 혁신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 장기적 도전 과제

- 규제 완화가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그리고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할 위험이 있다.
- 부처 간 협업과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제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AI 정책과의 경쟁, 협력 문제 등이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정책 방향

-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AI 혁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전략의 일환이다.
- 과도한 정부 개입을 철회하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경제적 자유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 전망

- 단기적으로는 AI 투자와 기술 혁신이 촉진되어, 미국 내 AI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윤리적 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정책 보완과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4.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및 AI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통령 워킹 그룹 신설, 불필요한 규제 철회, CBDC 금지 등 구체적 조치를 통해, 미국 내 민간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려는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윤리적 문제 등의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nforces Overwhelmingly Popular Demand to Stop Taxpayer Funding of Abortion

January 25, 2025

**ENFORCING THE HYDE AMENDMENT:** On Fri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nd the use of Federal taxpayer dollars to fund or promote elective abortion.

- The Order recognizes that, for nearly five decades, Congress has enacted the Hyde Amendment and a series of additional laws to protect taxpayers from being forced to pay for abortion. Contrary to this longstanding commonsense polic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embedded federal funding of elective abortion in a wide variety of government programs.
- To restore this longstanding policy, the Order rescinds two executive orders from President Biden that violate the Hyde Amendment:
  - Executive Order 14076 imposed a whole-of-government effort to promote and fund abortion and to politicize enforcement of the 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FACE) Act.
    - Federal statutes protecting access to emergency medical care for pregnant women under th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 (EMTALA) and protecting personal health information under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remain in full effect.
  - Executive Order 14079 recategorized abortion as “healthcare” in order to provide taxpayer funding for elective abortions. This included using Medicaid funding to pay for travel costs for elective abortions.

**ENDING FEDERAL FUNDING OF ABORTION OVERSEAS:** President Donald J. Trump also signed a Presidential Memorandum reinstating the Mexico City Policy to stop the use of federal taxpayer dollars for abortion overseas.

- The President’s policy from 2017 is reinstated to ensure that no U.S. taxpayer money supports foreign organizations that perform or actively promote abortion in other nations.

-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lso extended this policy to global health assistance. A 2020 report by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ound that this life-affirming policy in no way diminished women's health around the world.

**PROTECTING TAXPAYERS FROM FUNDING ABORTION:**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fifty years, President Trump returned the issue of life to a vote of the people, from within the States.

-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597 U.S. 215 (2022), overturned *Roe v. Wade* and returned the power to regulate issues of life and safety to the people. Three of the justices deciding the case were appointed by President Trump.
- Federal overreach and taxpayer dollars will no longer force violations of faith and conscience or impede the ability of states to determine life policies through a vote of the people.
  - For example, under President Biden, the Department of Defense reimbursed abortion-related travel expenses,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llowed hospitals to provide abortions, and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aid for abortions for illegal immigrants.

**PRESIDENT TRUMP PROMISED AND DELIVERED:** President Trump promised to protect and defend a vote of the people, from within the states, on the issue of life. Today's executive actions build on the long list of accomplishments from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o support the sanctity of every human life and prevent taxpayer funding of abortion. Select highlights of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s work include:

- Reinstated and expanded the Mexico City Policy, ensuring that taxpayer money is not used to fund abortion globally.
- Issued a rule preventing Title X taxpayer funding from subsidizing the abortion industry.
- Cut all funding to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which supports coercive abortion and forced sterilization.
- Signed legislation overturn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regulation that prohibited states from defunding abortion facilities as part of their family planning programs.

- Fully enforced the separate payment requirement for abortion coverage in Obamacare exchange plans.
- Stopped the Federal funding of fetal tissue research.
- Worked to protect healthcare entities and individuals' conscience rights, ensuring that no medical professional is forced to participate in an abortion in violation of their beliefs.
- Issued an executive order reinforcing the requirement that all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provide medical treatment or an emergency transfer for infants who are in need of emergency medical care—regardless of prematurity or disability.
- Led a coalition of countries to sign the Geneva Consensus Declaration, declaring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 right to abortion and committing to protecting women's health.
- First president in history to attend the March for Life.

## 납세자 자금의 낙태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 반영

### 1. 정책 배경 및 핵심 내용

- **목적 및 취지**
  -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세금으로 선택적 낙태(전문적 낙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 50 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을 회복하고, Biden 정부 시절 확장된 낙태 자금 지원 정책을 철회하려 한다.
- **주요 조치**
  - Biden 정부의 두 개의 행정명령(EO 14076, EO 14079)을 철회하여 연방 정부 프로그램 내에서 낙태 자금 지원을 중단.
  - 낙태를 의료로 분류하여 Medicaid 등 공적 자금이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
  - 해외에서도 낙태에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을 재도입.
- **정책의 정치적 근거**

-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을 계기로, 연방 정부의 낙태 정책 결정권을 주에 이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 Biden 정부 시절 여러 부처(국방부, 재향군인회, 보건복지부 등)가 낙태 관련 비용을 지원한 사례를 비판하며, "세금 부담"과 "신앙 및 양심의 자유"를 강조한다.

## 2. 심층 분석

### (1) 정책 의도 및 메시지

#### • 세금 부담 보호

- 낙태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 납세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정부가 강제하는 낙태 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낙태 관련 논란에서 납세자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을 내세운다.

#### • 보수주의적 가치와 약속 이행

- 50 년 동안 유지된 하이드 수정안을 재확인하면서, 보수 진영이 내세운 "생명의 신성함"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 Biden 정부의 정책을 "연방 정부의 과잉 개입"으로 규정하며,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낙태 자금 지원 중단 약속을 실현하는 것으로 포지셔닝한다.

#### • 해외 정책 연장

- 멕시코시티 정책의 재도입을 통해 해외 원조에서 낙태 지원을 중단, 미국의 보수적 외교 정책을 확장한다.
- 2017 년 Trump 행정부 당시 이 정책을 실시한 경험을 재현하며, 글로벌 보건 지원에서도 낙태 자금이 배제되도록 한다.

### (2) 법적·행정적 측면

#### • 하이드 수정안의 회복

- 하이드 수정안은 낙태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오랜 정책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를 되찾아, 낙태 지원을 의도치 않은 정부 프로그램에서 철회한다.

#### • Biden 행정부 행정명령 철회

- EO 14076 와 EO 14079 를 폐지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낙태 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공적 자금의 사용 방식을 재정비한다.
- 낙태를 의료 범주에서 제외시켜, Medicaid 등 공적 자금이 낙태 비용 지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점이 핵심이다.

### (3)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 정치적 메시지

- 이 조치는 낙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중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의사와 양심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한다.
- Dobbs 판결을 근거로 연방 정부가 낙태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 사회적 파급 효과

- 단기적으로는 낙태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정부 예산 내 낙태 관련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 그러나 이로 인해 낙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인권 논란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해외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에서 낙태 지원이 제외되면서 해당 국가의 보건 및 가족 계획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법적 도전 가능성

- 낙태 지원 중단이 낙태에 접근해야 하는 여성의 권리와 충돌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특히,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권한 분쟁, 그리고 낙태 접근성에 대한 헌법적 논란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 정책 방향

- 이번 행정명령은 낙태에 대한 세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함으로써, 낙태 자금이 납세자에게 강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수주의적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다.
- 국내외 모두에서 낙태 자금 지원 중단을 통해, 미국의 보수적 가치와 선거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

- 단기 효과

-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서 낙태 비용 지원이 즉각 중단되어, 납세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이전 Trump 행정부의 유사 조치 사례에 비추어, 낙태 관련 해외 원조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장기적 도전 과제

- 낙태 접근성이 줄어들면서 여성 건강권과 관련된 논쟁이 지속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 연방 및 주 정부 간의 낙태 규제권 배분 문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비판 등이 장기적 도전 과제로 남는다.

---

#### 4.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50 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하이드 수정안의 원칙을 회복하고, 낙태에 대한 연방 세금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납세자의 의사와 보수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Biden 정부 시절 낙태 지원 정책을 철회하고, 해외에서도 멕시코시티 정책을 재도입하는 등, 국내외에서 낙태 자금 지원 중단을 전면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예산 내 낙태 지원 중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낙태 접근성과 인권 논란, 법적 분쟁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instates Service Members Discharged for Refusing the COVID Vaccine

January 27, 2025

**RESINSTATING THE UNJUSTLY DISCHARGED:**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reinstate service members who were dismissed for refusing the COVID vaccine, with full back pay and benefits.

- The Executive Order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to reinstate all members of the military (active and reserve) who were discharged for refusing the COVID vaccine and who request to be reinstated.
  - Those who are reinstated will receive their former rank and full back pay with benefits.

**CORRECTING AN INJUSTICE:** In spite of the scientific evidence, the Biden Administration discharged healthy service members—many of whom had natural immunity and dedicated their entire lives to serving our country—for refusing the COVID vaccine. Government redress of these wrongful dismissals is overdue.

- From 2021 to 2023,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former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 discharged over 8,000 troops solely due to their COVID-19 vaccination status.
  - Such dismissals likely had a chilling effect on recruitment,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missing its collective recruiting targets by around 41,000 recruits in FY2023.
  - After the vaccine mandate was repealed in 2023, only 43 of the more than the 8,000 troops dismissed elected to return to service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Secretary Austin.

**CHARTING A NEW COURSE FORWARD:** In 2024, President Trump declared that “there should have never been a [COVID vaccine] mandate. That should have never happened.”

- President Trump went on to lament that, due to the mandate, “we’ve lost some of our best people in the military too.”
- President Trump duly promised in 2024 that he “will rehire every patriot who was fired from the military with...backpay. They will get their backpay...”

## COVID 백신 거부로 인해 강제 전역된 군인 복직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정책 취지

-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Biden 정부와 전 국방장관 Lloyd Austin 이 COVID 백신 접종 여부만을 이유로 8,000 명 이상의 군인을 제대시킨 사례가 있다.
- 이번 행정명령은 COVID 백신을 거부한 채 제대한 군인들을 복직시키고, 전 계급 복원과 전액 후불 임금 및 복리후생을 보장하여 이들의 부당한 제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이다.

- 행정명령 내용

- 국방부 장관에게 현역 및 예비군 중 COVID 백신 거부를 이유로 제대한 모든 군인이 복직 신청 시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다.
- 복직된 군인은 이전 계급이 복원되며, 제대 시점부터 복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후불 임금과 관련 혜택을 지급받게 된다.

- 정치적 배경 및 맥락

- Biden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과 그에 따른 제대 조치가 군 모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방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 트럼프 정부는 2024 년 선거 기간 동안 “백신 의무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됐다”며, 이를 바로잡아 군 내부의 우수 인재 손실을 복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

### 2. 심층 분석

#### (1) 정책 의도 및 메시지

- 부당한 제대 조치 바로잡기

- 백신 접종 여부만을 이유로 제대된 군인들이 실제로는 건강하며 자연 면역 등으로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제대된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 군대 인재 보존 및 국방력 강화



- 제대 조치로 인해 손실된 우수 인재들이 복직되면, 군 조직 내 사기와 인재 보존이 이루어져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적 약속 이행**

- 2024 년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애국자를 복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이를 구체적인 행정 조치로 실현함으로써 보수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

## (2) 법적·행정적 측면

- **대통령 권한 행사**

-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림으로써,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부당한 제대를 취소하고 복직 절차를 진행할 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 **복직 및 보상 절차**

- 복직된 군인은 이전 계급으로 복원되며, 제대 시점부터 복직 결정 시점까지의 후불 임금과 복리후생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 이를 통해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리적, 조직적 피해를 보상하는 효과를 노린다.

## (3) 정치적, 사회적 함의

- **군 내부 신뢰 회복**

- 부당하게 제대한 군인들의 복직은 군 내부의 신뢰와 사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군대 내 인재 손실로 인한 장기적인 국방력 약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정치적 대립 심화 가능성**

- Biden 정부의 백신 의무화 및 제대 조치에 대한 강경 비판과 복직 조치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군 인사 정책 및 국방력 강화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군 모집 및 인사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부당 제대 조치를 바로잡음으로써, 향후 군 모집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복직 절차의 공정성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분쟁 등은 관리해야 할 과제이다.

## 3. 종합 평가 및 전망

- **단기적 효과**

- 부당하게 제대한 군인들이 신속히 복직되면, 군 내부 사기 회복과 함께 우수 인재의 유출이 막히며, 국방력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 **장기적 도전 과제**

- 복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그리고 조직 문화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백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군 인사 정책 및 국방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책의 전반적 메시지**

- 이번 행정명령은 Biden 정부의 백신 의무화로 인한 부당한 제대를 바로잡고, 군 내부의 우수 인재를 보호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반영한다.

---

#### 4.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COVID 백신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대한 군인들을 복직시켜, 이들에게 이전 계급 복원과 전액 후불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급함으로써, 군 내부의 인재 손실을 보전하고 국방력을 회복하려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군 내부 사기와 모집 문제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복직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및 행정적 도전과제 등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조치는 Biden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강경한 반발과 함께,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모든 애국자를 복직시키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는 중요한 행정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irects the Building of the Iro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for America

January 27, 2025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MISSILE ATTACK:**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Build the Iron Dome for America.

- The Executive Order directs implementation of a next-generation missile defense shield for the United States against ballistic, hypersonic, advanced cruise missiles, and other next-generation aerial attacks.
  - With the goal of providing for the common defense of American citizens, this Order accelerates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pace Sensor Layers, proliferated space-based interceptors, a Proliferated Warfighter Space Architecture, capabilities to defeat salvoes prior to launch, non-kinetic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underlayer and terminal-phase intercept capabilities.
  - It also secures the supply chains for all components of the Iron Dome.
- The Executive Order directs a review of theater missile defense posture to defend United States troops deployed abroad and an increase in cooperation on missile defense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operations with partners and allies.

### **ADDRESSING VULNERABILITIES BY MODERNIZING AN OUTDATED SYSTEM:**

- The threat of attack by ballistic, cruise, and hypersonic missiles remains a catastrophic threat facing the United States.
- Over the past 40 years, rather than lessening, the threat from next-generation strategic weapons—including hypersonic—has become more complex with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delivery systems by our adversaries.
- Notwithstanding this increasing threat, United States homeland missile defense policy has been limited to staying ahead of rogue nation threats and accidental or unauthorized missile launches.

**THE IRON DOME WILL FURTHER THE GOALS OF PEACE THROUGH STRENGTH:** By empowering the United States with a second-strike capability, the Iron Dome will deter adversaries from attacks on the homeland.

- President Trump is fulfilling his promises: “I will direct our military to begin construction of the great Iro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which will be made all in the USA.”

##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지시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미사일 위협의 증대**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볼리스틱, 초음속, 첨단 순항 미사일 등 차세대 전략 무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주로 불량 국가나 우발적 미사일 발사를 겨냥했으나, 적들의 기술 발전으로 위협이 더욱 복잡해졌다.

- **아이언 돔 건설 지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에서 "아이언 돔"이라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다. 이 체계는 초음속 및 볼리스틱 추적 우주 센서 레이어, 우주 기반 요격기, 비핵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다양한 기술 요소를 포함해, 발사 전에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한다.

- **공급망 보안 및 동맹 협력**

아이언 돔의 모든 구성 요소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외 주둔 미군 방어 태세를 검토하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 및 운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국내 방어력 강화**

미사일 공격에 대한 2 차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적들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 아래,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으로 미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 **기존 체계의 현대화**

지난 40 년간 사용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현대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 **정치적 메시지 전달**

"모두 미국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 내 기술 및 제조 역량을 강조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기술 개발 및 배치**

초음속, 볼리스트릭, 순항 미사일 추적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 요소의 개발과 신속한 배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 국제 동맹과 기술 공유가 필수적이다.

- **공급망 보안**

아이언 돔 체계의 모든 부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 **동맹 및 국제 협력**

국외 주둔 미군 방어와 관련해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 **장기적 실행 도전**

첨단 기술의 통합, 관련 부처 간 협력,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또한, 예산 및 정치적 지지도 장기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 4. 종합 평가

- **정책 방향**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차세대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현대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를 넘어, 동맹과 협력 체계 강화, 기술 혁신 촉진, 그리고 "미국산" 제조업 진흥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이다.

- **단기 및 장기 효과**

단기적으로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급격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술 개발 및 부품 공급, 부처 간 협력, 국제 협력 등에서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 5. 결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현대화하고, 차세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아이언 돔"은 단순한 기술적 방어 수단을 넘어서, 미국의 국방력 강화, 동맹 협력 체계 재정비, 그리고 국내 제조업 및 기술 혁신 촉진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공급망 보안, 그리고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요소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nsures Military Excellence and Readiness

January 27, 2025

**PRIORITIZING SERVICEMEMBER INTEGRITY, LETHALITY, AND HEALTH:**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direct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update its guidance regarding trans-identifying medical standards for military service and to rescind guidance inconsistent with military readiness.

- The Executive Order will require the Secretary of Defense to do the following:
  - Update all Department of Defense medical standards to ensure they prioritize readiness and lethality.
  - Take action to end the use of invented and identification-based pronoun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 The Executive Order also prohibits males from using or sharing sleeping, changing, or bathing in facilities designated for females.
- The provisions in the Executive Order also apply to the Coast Guard.
- The Executive Order revokes Biden Administration Executive Order 14004 and all policies, directives, and guidance pursuant to that order.
  - Executive Order 14004 called for accommodating “gender identity” in the military—to the detriment of military readiness and unit cohesion.

**RESTORING SANITY IN OUR MILITARY:**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Department of Defense allowed gender insanity to pervade our military organizations, family, and culture. This included not only permitting the milit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individuals not physically or mentally prepared to serve, but also order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pay for servicemembers’ transition surgeries, as well as those of their dependent children—at a cost of millions of dollars to the American taxpayer.

- The United States imposes rigorous standards on all military servicemembers to ensure they are prepared to take on the challenges required of them.
  - Fitness, health, welfare, and readiness standards must ensure that our military members are able to deploy, fight, and win.

- On the battlefield there can be no accommodation for anything less than resilience, strength, and the ability to withstand extraordinary physical demands.
- Individuals who are unable to meet these requirements are unable to serve in the military. This has been the case for decades.
- Unit cohesion requires high levels of integrity and stability among servicemembers.
  - It can take a minimum of 12 months for an individual to complete treatments after transition surgery, which often involves the use of heavy narcotics.
  - During this period, they are not physically capable of meeting military readiness requirements and require ongoing medical care. This is not conducive for deployment or other readiness requirements.

**A LETHAL FIGHTING FORCE:** President Trump's priority to have a ready, able, and lethal military will remain a core tenant of his second term.

- During his first term in 2018, President Trump's Department of Defense took action to ensure trans-identifying servicemembers did not serve in capacities that undermined unit cohesion and lethality.

## 군사 준비태세 및 탁월성 보장

### 1. 정책 배경 및 핵심 내용

- 목표 및 취지
  - 행정명령은 국방부가 기존의 성별 관련 의료 기준 및 지침을 재검토·수정하도록 지시한다.
  - 주된 목표는 군대의 준비태세, 전투력, 단결력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Biden 정부 시절 채택했던,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지침(EO 14004 등)을 전면 폐기하여, 군대 내에서 전통적 기준과 엄격한 체력을 회복하려 한다.
- 주요 조치 내용
  - 국방부는 모든 의료 기준을 업데이트해 군대의 준비태세와 치명적 전투력을 우선시하도록 한다.



- "창작된 식별 기반 대명사" 사용을 중단하고, 남성이 여성 전용 시설(취침, 탈의, 목욕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 조치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Biden 행정부의 관련 행정명령과 지침들을 전면 폐기한다.

#### • 배경 맥락

- Biden 정부는 군대 내에서 성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전통적인 군사 기준에서 벗어난 인원 배치를 허용한 바 있다.
- 이러한 정책들이 군대의 준비태세와 단결력을 저해하며,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 트럼프 행정부는 2018 년 첫 임기 중부터 유사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 군대 준비태세 및 전투력 강화

- 군인들이 엄격한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투 배치와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려 한다.
- 성별 관련 완화 정책이 군대 내에서 부적절한 인원 배치와 단결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다.

#### • 전통적 군사 문화 회복

- 군대는 오랜 기간 동안 엄격한 신체 및 정신적 기준을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을 회복해 군대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성별에 따른 구분(예, 여성 전용 시설 사용 제한)을 통해, 군 조직 내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 재정 및 인력 관리 효율화

- 부적절한 인원 배치로 인한 비용 부담과 부대 내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다.
- 전환 수술 등으로 인한 긴 치료 기간과 그에 따른 군인 복귀 지연 문제가 군 작전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으려 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국방부는 기존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의료 및 인사 기준을 수립한다.
- 관련 부서들은 성별 관련 용어와 정책을 재정비하며, 군 복무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해안경비대 등 다른 군사 기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전체 군사 조직 내 일관된 체계가 마련된다.

- 도전 과제

- 기존 정책과의 충돌 및 부대 내 인권 문제, 특히 성 소수자 및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전환 수술 및 관련 치료 기간 동안 복귀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후속 관리와 그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지침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이 관건이다.

---

### 4. 정치적·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조치는 Biden 정부의 완화적 성별 정책을 강력히 반전시키며, 전통적 군사 기준과 보수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 "군대의 단결과 준비태세 유지"라는 명분 아래, 보수 진영과 전통적 군사 문화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논쟁 가능성

- 성 소수자 및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해, 인권 단체나 진보적 그룹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군대 내 성별 구분 및 차별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가치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 5. 종합 평가 및 전망

- 단기 효과

- 엄격한 군사 기준을 복원하고, 전투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군 조직의 효율성과 일체감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적절한 인원 배치 문제와 관련 비용 부담이 해소되어, 국방 예산 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장기적 도전 과제

- 인권 및 평등 문제와 관련한 법적 소송, 사회적 반발 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보완과 관리가 필요하다.
- 전환 수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 인사 관리 문제와 복귀 지연 문제가 장기적으로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군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투력 강화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 6.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Biden 정부 시절 완화된 성별 관련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전통적인 군사 기준에 기반한 준비태세, 전투력, 그리고 단결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존 지침을 재검토·수정하고, 군 조직 내 성별 구분 및 인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군대의 일체감과 전투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군 조직의 효율성 및 국방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인권, 법적 분쟁, 그리고 사회적 논란 등 장기적 도전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Merit and Lethality to America's Armed Forces

January 27, 2025

**ELIMINATING RACE- AND SEX-BASED DISCRIMINATION WITHIN THE ARMED FORCE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restore merit and lethality to America's fighting force.

- The Executive Order bans the use of discriminatory race- or sex-based preferences by any element of the Armed Forces, the Department of Defense, o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This Order also abolishes any remnant of th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bureaucracy within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The Secretary of Defense will task the Department of Defense with conducting an internal review of all instances of race- or sex-based discrimination based on Department of Defense DEI initiatives.
  - This Order also requires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o review the curriculum at the United States Service Academies and other academic institutions to ensure these institutions eliminate radical DEI and gender ideologies.

**ENDING AN ERA OF ASSAULT ON MILITARY DISCIPLINE AND CULTURE:** Foreign adversaries are strengthening their fighting forces every day while the United States has deliberately been focused on radical ideology like DEI. The world is watching.

- Prior to harmful changes introduced by the Obama and Biden administrations, the United States military offered equality of opportunity to every American capable of and interested in serving their country. Yet these two administrations exploited the military in favor of identity politics—harming our national defense, undermining the non-political nature of our military, and eroding morale and recruitment.
  - Due to this “woke” assault, the Services together logged their lowest recruiting records since 1940 with a 41,000-troop shortfall in 2023.
- Today's Order moves our military away from this dark period and renews esprit de corps, readiness, and focus. It returns the Pentagon to the warfighter.

- This Order also combats ideologies that seek to divide our Armed Forces by race, sex or other immutable characteristics and thus tear at cohesion and military efficacy.

**RESTORING A WARFIGHTING MINDSET:**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exist to preserve our freedom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 President Trump is committed to a merit-based system of sex-neutral policies and colorblind recruitment, promotion, and retention that will return our military to greatness.
- President Trump vowed to get rid of the “woke” generals who prioritize social experiments over warfighting. He stated in his 2024 reelection campaign that “...[y]ou can’t have a woke military...You need people that want to win. They want to win wars. That’s what their purpose is, to win wars, not to be woke... but we do have great military.”

## 미국 군대의 실력과 전투력 복원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목적 및 취지**
  - 이번 행정명령은 군대 내 인사 및 채용, 승진 과정에서 인종·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우대조치를 전면 금지하고, 오직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른 평가 체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관료주의 잔재를 폐지하여, 전통적 군사 기준과 준비태세, 전투력을 우선시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 **주요 조치 내용**
  -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내에서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우대조치를 금지하며, 모든 군사 조직에서 'woke' 이념과 관련한 정책을 철회한다.
  - 국방부 장관에게 DEI 이니셔티브로 인한 인종·성별 기반 차별 사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 미국 육군사관학교 등 군 관련 학술 기관의 교육 과정에서 급진적 DEI 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도록 검토한다.

- 이번 조치는 Biden 행정부가 도입했던 성 정체성 관련 완화 조치(EO 14004 등)를 전면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 **정책 배경**

- 지난 몇 년간 Biden 정부는 군대 내 성 정체성과 관련한 정책 완화를 추진하며, 전통적 군사 기준에서 벗어난 인원 배치를 허용했다.
- 이러한 정책이 군대 내 단결력 약화, 준비태세 저하, 그리고 모집 부진(2023 년 41,000 명 부족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번 행정명령은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나온 것이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군대 전투력 및 준비태세 강화**

- 군인의 역량, 체력, 준비태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 및 채용 기준을 회복해, 실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능력주의'와 '색맹 채용'을 강조하며, 군대 내 정치적·사회적 이념 대신, 오직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복원한다.

- **군 조직의 단결과 사기 회복**

- 성별이나 인종 등 불변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이 군대 내 분열과 단결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거함으로써 군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고자 한다.
- "woke"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바로잡아, 군 조직의 전통적 가치와 전문성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정치적 공약 이행**

- 트럼프가 2024 년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woke 군대를 없애고, 전투력을 우선시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볼 수 있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는 기존의 DEI 관련 정책, 지침, 명령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기한다.

- 내부 조사 및 교육 커리큘럼 검토를 통해, 군대 내 차별적 우대조치의 잔재를 제거하고, 전통적 군사 기준에 따른 인사체계를 확립한다.
- 부처 간 협업과 내부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해, 정책 변경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도전 과제**

- 기존에 DEI 관련 정책에 익숙해진 조직 문화와 일부 부대 내 인권 보호 요구 등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 법적 소송이나 외부 비판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성 소수자 권리 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 정책 변경으로 인한 단기적 혼선 및 내부 조정 기간 동안 군 조직의 효율성 유지와 부대 사기 저하 문제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 4. 정치적·사회적 합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행정명령은 Biden 정부의 완화적 성 정체성 정책을 강력히 반전시키며, 전통적 군사 기준과 보수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군대는 전투를 위해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워, 군 조직 내 정치적 이념보다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우선시하는 보수 진영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

- **사회적 논란 가능성**

- 성 소수자 및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차별 문제와 인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군대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법적 논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위험이 있다.

---

#### 5. 종합 평가 및 전망

- **단기 효과**

- 엄격한 군사 기준과 능력주의 체계를 회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군대의 전투력, 준비태세, 그리고 조직 단결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적절한 인원 배치 및 비효율적 인사 정책이 개선되어, 군 모집 및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장기적 도전 과제

- 인권, 평등, 그리고 법적 분쟁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 군대 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장기적인 과제로 남는다.
-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혼란이나 부처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Biden 정부 시절 완화된 성 정체성 관련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전통적 군사 기준에 따른 능력주의와 색맹 채용 체계를 회복하여, 미국 군대의 전투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는, 군 조직 내 단결과 사기를 회복하고, 전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

단기적으로는 군 조직의 효율성과 전투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 및 법적 도전 과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정책 성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Takes Forceful and Unprecedented Steps to Combat Anti-Semitism

January 30, 2025

**COMBATING ANTI-SEMITISM IN THE UNITED STATE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Combat Anti-Semitism.

- Expanding on his Executive Order 13899, President Trump's new Order takes forceful and unprecedented steps to marshal all Federal resources to combat the explosion of anti-Semitism on our campuses and in our streets since October 7, 2023.
- Every Federal executive department and agency leader will review and report to the White House within sixty days on *all* criminal and civil authorities and actions available for fighting anti-Semitism.
- Immediate action will be taken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protect law and order, quell pro-Hamas vandalism and intimidation, and investigate and punish anti-Jewish racism in leftist, anti-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 The Order demands the removal of resident aliens who violate our laws.

**GOING ON OFFENSE TO ENFORCE LAW AND ORDER AND TO PROTECT CIVIL RIGHTS:** Immediately after the jihadist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people of Israel on October 7, 2023, pro-Hamas aliens and left-wing radicals began a campaign of intimidation, vandalism, and violence on the campuses and streets of America.

- Celebrating Hamas' mass rape, kidnapping, and murder, they physically blocked Jewish Americans from attending college classes, obstructed synagogues and assaulted worshippers, and vandalized American monuments and statues.
- The Biden Administration turned a blind eye to this coordinated assault on public order; it simply refused to protect the civil rights of Jewish Americans, especially students. According to a December 2024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taff Report](#) on anti-Semitism, "the failure of our fede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is astounding."

**PRESIDENT TRUMP KEEPS HIS PROMISES AND BUILDS ON HIS SUCCESS:** In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kept his biggest promises:

- He moved the American Embassy in Israel to Jerusalem: After decades of broken promises and despite much criticism, President Trump was the President who finally kept his commitment to Israel to move the American embassy from Tel-Aviv to Israel's true and rightful capital: Jerusalem.
- He established the Abraham Accords: President Trump delivered the greatest breakthrough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in decades by brokering the normalization of ties between Israel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Bahrain, Sudan, and Morocco, protecting Israel and Jews and spreading security and prosperity to the entire region.

Now, President Trump has promised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ill:

- Protect the civil rights of our Jewish citizens: "My promise to Jewish Americans is this: With your vote, I will be your defender, your protector, and I will be the best friend Jewish Americans have ever had in the White House."
- Aggressively enforce the law, protect public order, and prosecute anti-Semitic crimes: "I will issue clear orders to my Attorney General to aggressively prosecute terroristic threats, arson, vandalism and violence against American Jews."
- Deport Hamas Sympathizers and Revoke Student Visas: "To all the resident aliens who joined in the pro-jihadist protests, we put you on notice: come 2025,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deport you. I will also quickly cancel the student visas of all Hamas sympathizers on college campuses, which have been infested with radicalism like never before."

##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반유대주의 대응 강화:**

이번 행정명령은 2023 년 10 월 7 일 이후 미국 내 캠퍼스와 거리에서 급증한 반유대주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이 반유대주의 범죄와 민사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 **법 집행 및 예방 조치:**

법무부는 반유대주의 범죄, 특히 프로하마스 행동과 좌파 대학 내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는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중 반유대주의에 가담한 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역사적 약속과 이전 성과 강조:**

트럼프 정부는 이전 임기 동안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성사시키는 등 중동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강경 외교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반유대주의에 맞서 미국 내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이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반유대주의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연방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이 60 일 내에 반유대주의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반유대주의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극대화한다.

- **공공 질서 및 시민 권리 보호:**

반유대주의 범죄와 관련한 폭력, 방해, 그리고 공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대응하여, 유대인 커뮤니티와 미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 **이민 및 교육 정책과의 연계:**

행정명령은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외국인과 좌파 대학 내 극단적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 신속한 추방과 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 내 반유대주의 확산을 근절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정책 추진

- **전 부처 및 기관의 협력:**

모든 연방 행정 기관이 60 일 이내에 반유대주의 관련 법 집행 및 민사 조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신속한 정책 집행과 실행 과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

법무부는 프로하마스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해 강경 단속 조치를 취하며, 반유대 범죄를 엄벌하여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내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민 정책 강화:**

불법 체류 외국인 중 반유대주의에 가담한 자들을 신속히 추방하고, 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등 이민 정책 측면에서도 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국내 안전 강화와 정부 신뢰 회복:**

반유대주의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유대인 커뮤니티 및 미국 시민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는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 **정치적 메시지 강화:**

Biden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트럼프 정부가 약속한 "유대인 시민의 방패" 역할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보수 진영 및 유대인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국제 외교와 연계된 상징적 의미:**

중동에서의 강경 외교 정책과 연계되어, 미국이 반유대주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는 국제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내외 안보 및 인권 이슈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반유대주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며, 모든 연방 기관이 신속하게 법 집행 및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법무부와 이민 정책을 통한 추방, 그리고 좌파 대학 및 공공시설에서의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한 엄벌 조치는 미국 시민과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Biden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반전시키고, 미국 내 공공 질서와 시민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xpands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merican Families

January 30, 2025

**DEFENDING PARENTAL RIGHTS AND EDUCATIONAL OPPORTUNITY:**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xpanding educational freedom and opportunity for families. It recognizes that parents, not the government, play a fundamental role in choosing and directing the upbringing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

- It direct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o issue guidance on how the States can use federal funding formulas to support their K-12 scholarship programs.
- It directs the Secretary of Education to prioritize school choice programs in the Department's discretionary grant programs.
- The Order requires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o issue guidance on how states receiving block grants for children and families can use those funds to support educational alternatives, including private and faith-based options.
- It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to submit a plan to the President for how military families can use Department of Defense funds to send their children to the school of their choice.
- The Order also directs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to submit a plan to the President for how families with students attending Bureau of Indian Education schools can use federal funds to send their children to the school of their choice.

**EMPOWERING PARENTS AND STUDENTS THROUGH SCHOOL CHOICE:** Every child deserves the best education available, regardless of their zip code. However, for generations, our government-assigned education system has failed millions of parents, students, and teachers. This Executive Order begins to rectify that wrong by opening up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attend the school that best fits their needs.

- According to the latest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70% of 8th graders were below proficient in reading and 72% were below proficient in math. 40% of 4th graders did not even meet the basic reading levels.

- Standardized test scores have essentially been flat for over 30 years, despit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spent on government-run education.
- A dozen states have universal or near universal school choice programs and 33 states have some form of school choice program.
- School choice programs have a strong record of improving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 School choice has proven to be cost effective and saves taxpayer dollars.
- Parents report higher levels of school safety for their children who participate in school choice programs.
- Support for school choice is overwhelming, with 70% of Democrats, 73% of Black Americans, and 69% of Hispanic Americans in favor of it.
- President Trump is dedicated to ensuring every child has the opportunity to receive a world-class education.

**FULFILLING THE PROMISE TO STRENGTHEN EDUCATION THROUGH FREEDOM AND OPPORTUNITY:** President Trump promised to bring school choice to every family in the Nation. Today's historic executive order is a critical step in delivering on that promise, and builds on the long list of accomplishments from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including:

- Calling on Congress to pass the School Choice Now Act and the Education Freedom Scholarships and Opportunity Act.
- Providing in-person learning options for low-income parents forced to send their children to virtual school during the pandemic.
- Re-authorizing the D.C.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 twice.
- Investing nearly \$1.5 billion in the development of public charter schools, helping this innovative sector grow to 7,500 charter schools serving more than 3 million students.
- Allowing parents across the nation to withdraw up to \$10,000 tax-free per year from 529 education savings plans to cover public, private, or religious K-12 schooling costs, thanks to the President's historic tax cuts.

Parents can be confident that under his Administration, President Trump will provide every available opportunity for parents to enrich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rough individual choice.

## 미국 가정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부모 권리와 교육 선택의 강조**

- 행정명령은 정부가 자녀 교육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 정부가 제공하는 전통적 공교육 시스템이 오랜 기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 선택'을 확대하고자 한다.

- **구체적 지시사항 및 실행 방안**

- **연방 교육 자금 및 장학 프로그램 개선:**

- 교육부에 주별 K-12 장학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 교육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건강 및 복지 분야 연계:**

-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는 블록 그랜트 자금을 활용하여 사립 및 신앙 기반 교육 대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받는다.

- **군 가족 및 인디언 교육 지원:**

- 국방부는 군 가족이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자금 지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내무부는 인디언 교육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족이 원하는 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된다.

- **교육 성과 및 필요성 근거 제시**

- 최근 NAEP 통계와 표준화 시험 점수는 미국 공교육의 성과가 정체되어 있으며, 수십 년간 공교육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 학교 선택 프로그램이 학업 성취도 향상, 비용 효율성 및 학부모의 안전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들이 제시된다.
- **과거 정책 및 약속 이행 강조**
  - 트럼프 정부는 첫 임기 동안 학교 선택 확대를 위한 여러 법안과 프로그램(예: School Choice Now Act, D.C. Opportunity Scholarship 등)을 추진했고, 이번 행정명령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 또한, 세금 감면 및 공교육 대안 마련을 통해 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 공약 이행을 재확인한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부모와 학생의 교육 자율성 강화**
  - 부모가 자녀 교육 선택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우편번호)과 같은 제약을 넘어서 모든 학생이 최상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공교육의 한계 극복 및 대안 제공**
  - 정부 주도의 공교육 시스템이 수십 년간 정체된 성과를 보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선택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대안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경제적 및 사회적 효율성 증대**
  - 비용 효율적인 교육 모델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저소득층, 군 가족, 인디언 교육 대상자 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사회 전반의 평등을 도모한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연방 부처 간 협력:
  -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내무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학교 선택 및 교육 대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합하여 실행한다.
- 자금 지원 및 재정 배분 조정:
  - 연방 자금 및 블록 그랜트의 배분 기준을 재조정하여, 학교 선택 프로그램 및 대안 교육 옵션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책 가이드라인 및 규제 개선:
  - 각 부처는 학교 선택 및 교육 대안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제한적 규제를 완화한다.
- 도전 과제
  - 정책 이행의 지역별 차이:
    - 주마다 공교육 시스템의 상황과 요구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정책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각 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 이해관계자 간 갈등:
    - 공교육 대안 확대와 관련해 사립 및 신앙 기반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이 기존 공교육 관계자나 교육 단체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재정 확보 및 효율적 집행:
    - 제한된 연방 예산 내에서 효과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정책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 학교 선택 프로그램 및 교육 대안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 성과 및 안전,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강화:
  -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가 공교육 대안을 제공하는 방식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와 지역 사회가 직접 교육 선택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보수적 교육 정책의 일환이다.

- 트럼프 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교육 선택 확대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보수 진영과 부모, 그리고 다양한 소외 계층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적 효과 및 기대:**

- 학교 선택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또한, 부모들이 교육에 더 많은 선택권과 책임을 갖게 됨으로써,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반면, 공교육 체계에 의존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자금 배분 및 질적 차이에 따른 불평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모와 학생에게 더 많은 교육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연방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선택 및 다양한 교육 대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최상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공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모델을 통해 미국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학교 선택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부모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성과 향상 및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별 상황 차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재정 배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Launches Massive 10-to-1 Deregulation Initiative

January 31, 2025

**ELIMINATING 10 REGULATIONS FOR EACH NEW REGULATION ISSUED:**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unleash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 The Order requires that whenever an agency promulgates a new rule, regulation, or guidance, it must identify at least 10 existing rules, regulations, or guidance documents to be repealed.
-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will ensure standardized measurement and estimation of regulatory costs.
- It requires that for fiscal year 2025, the total incremental cost of all new regulations, including repealed regulations, be significantly less than zero.

**HALTING THE REGULATORY ONSLAUGHT:** President Trump will halt the job killing and inflation-driving regulatory blitz of the Biden Administration.

- The Biden Administration imposed a historic \$1.7 trillion in costs on the American people.
- Overregulation stops American entrepreneurship, crushes small business, reduces consumer choice, discourages innovation, and infringes on the liberties of American citizens.
  - It also contributes to the high cost of living, including by driving up energy prices.

**BUILDING ON PAST SUCCESS:** President Trump's first Administration undertook the most aggressive and successful regulatory reduction effort in history.

- In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asked the agencies to eliminate two regulations for each one new regulation issued. Not only was this 2-for-1 goal achieved,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eliminated five and a half regulations for every one new regulation issued.

- This Executive Order builds on President Trump's previous success to improve daily lives of the American people by reducing unnecessary, burdensome, and costly Federal regulations.

## 대규모 10:1 규제 완화 정책 추진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목적:**  
미국 경제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연방 규제를 대폭 축소한다. 새 규칙이나 지침을 발행할 때마다, 해당 기관은 10 개의 기존 규제나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
- **주요 조치:**
  - 모든 연방 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발행할 때 최소 10 개의 기존 규제를 동시에 폐지하도록 요구.
  - 관리예산국(OMB)이 규제 비용의 측정과 추정을 표준화하여, 2025 회계연도에 신규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이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도록 한다.
- **배경:**  
Biden 정부 시절 부과된 규제들로 인해 미국 경제에 약 1.7 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규제가 창업, 소기업, 소비자 선택, 혁신을 저해하고 생활비 상승에 기여했다고 본다.
- **과거 성공 사례:**  
트럼프 정부 첫 임기 동안 “2-for-1” 정책을 통해 실제로 5.5개의 규제를 폐지한 성과를 낸 바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인 10:1 비율을 추진한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경제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해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 **정부 효율성 증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10 개의 규제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규제 체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유지한다.

- **소비자 및 기업 부담 경감:**

규제 비용을 대폭 줄여,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 내 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연방 기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마다 최소 10 개의 기존 규제를 찾아 폐지해야 한다.
- OMB 는 규제 비용을 측정해, 2025 회계연도 전체의 규제 비용이 음수로 나타나도록 관리한다.

- **도전 과제:**

- 복잡한 규제 체계 내에서 10 개의 규제를 일관되게 찾아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 일부 규제는 공공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규제 철회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규제 비용의 정확한 측정과 평가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 4. 정치적·경제적 합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행정명령은 Biden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보수 진영의 강경 입장을 대변한다.
- 트럼프 정부의 과거 규제 철회 성과를 재확인하며, 더 나아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혁신 촉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 **경제적 효과:**

-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소규모 기업과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활비 부담(예: 에너지 가격)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모든 연방 기관에 새 규제 발행 시마다 최소 10 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규제 과부하를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공격적인 시도이다. 트럼프 정부의 첫 임기에서 달성한 규제 철폐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10:1 비율의 규제 축소는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규제 폐지 과정에서 공공 안전, 환경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제들이 무분별하게 폐지될 위험과, 규제 비용의 정확한 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 등 도전 과제들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February 1, 2025

**ADDRESSING AN EMERGENCY SITUATION:** The extraordinary threat posed by illegal aliens and drugs, including deadly fentanyl, constitutes a national emergency unde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 Until the crisis is alleviated, President Donald J. Trump is implementing a 25% additional tariff on imports from Canada and Mexico and a 10% additional tariff on imports from China. Energy resources from Canada will have a lower 10% tariff.
- President Trump is taking bold action to hold Mexico, Canada, and China accountable to their promises of halting illegal immigration and stopping poisonous fentanyl and other drugs from flowing into our country.
- The orders make clear that the flow of contraband drugs like fentanyl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illicit distribution networks, has created a national emergency, including a public health crisis. Chinese officials have failed to take the actions necessary to stem the flow of precursor chemicals to known criminal cartels and shut down money laundering by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 In addition, the Mexican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 have an intolerable alliance with the government of Mexico. The government of Mexico has afforded safe havens for the cartels to engage in the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of dangerous narcotics, which collectively have led to the overdos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 victims. This alliance endangers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we must eradicate the influence of these dangerous cartels.
  - There is also a growing presence of Mexican cartels operating fentanyl and nitazene synthesis labs in Canada. A recent study recognized Canada's heightened domestic production of fentanyl, and its growing footprint within international narcotics distribution

**USING OUR LEVERAGE TO ENSURE AMERICANS' SAFETY:** Previous Administrations failed to fully leverage America's economic position as a tool to secure our borders against illegal migration and combat the scourge of fentanyl, preferring to let problems fester.

- Access to the American market is a privilege. The United States has one of the most open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lowest average tariff rates in the world.
- While trade accounts for 67% of Canada's GDP, 73% of Mexico's GDP, and 37% of China's GDP, it accounts for only 24% of U.S. GDP. However, in 2023 the U.S. trade deficit in goods was the world's largest at over \$1 trillion.
- Tariffs are a powerful, proven source of leverage for protecting the national interest. President Trump is using the tools at hand and taking decisive action that puts Americans' safety and our national security first.
- Though previous Administrations have failed to leverage America's combination of exceptional strength and its unique role in world trade to advance the security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President Trump has not.

**PRESIDENT TRUMP IS KEEPING HIS PROMISE TO STOP THE FLOOD OF ILLEGAL ALIENS AND DRUGS:** When voters overwhelmingly elected Donald J. Trump as President, they gave him a mandate to seal the border. That is exactly what he is doing.

-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ies have fueled the worst border crisis in U.S. history.
- More than 10 million illegal aliens attempt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under Biden's leadership, including a rising number of Chinese nationals and people on the terror watchlist.
- This problem is not confined to the southern border – encounters at the northern border with Canada are rising as well.
- The sustained influx of illegal aliens has profound consequences on every aspect of our national life – overwhelming our schools, lowering our wages, reducing our housing supply and raising rents, overcrowding our hospitals, draining our welfare system, and causing crime.
- Gang members, smugglers, human traffickers, and illegal drugs and narcotics of all kinds are pouring across our borders and into our communities.
  - Last fiscal year,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apprehended more than 21,000 pounds of fentanyl at our borders, enough fentanyl to kill more than 4 billion people.



- It is estimated that federal officials are only able to seize a fraction of the fentanyl smuggled across the southern border.
- These drugs kill tens of thousands of Americans each year, including 75,000 deaths per year attributed to fentanyl alone.
  - More Americans are dying from fentanyl overdoses each year than the number of American lives lost in the entirety of the Vietnam War.

**BUILDING ON PAST SUCCESS:**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demonstrate his commitment to ensuring U.S. trade policy serves the national interest.

- As President Trump said in the Presidential Memorandum on American First Trade Policy, trade policy is a critical component in national security.
- President Trump promised in November to “sign all necessary documents to charge Mexico and Canada a 25% Tariff on ALL product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and its ridiculous Open Borders. This Tariff will remain in effect until such time as Drugs, in particular Fentanyl, and all Illegal Aliens stop this Invasion of our Country!”
- During his first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 established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Combating Drug Addiction and the Opioid Crisis and declared the Opioid Crisis a public health emergency.
- President Trump also has a long record of putting America first on trade. In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successfully used threats of tariffs on Mexico to help secure our border.
- When our national security was threatened by a global oversupply of steel and aluminum, President Trump took swift action to protect America’s national security by implementing tariffs on imports of these goods.
- In response to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forced technology transfer, and other unreasonable behavior, President Trump acted with conviction to impose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using that leverage to reach a historic bilateral economic agreement.
- Just last week, President Trump leveraged tariffs to successfully resolve national security concerns with Colombia, swiftly reaching an outcome that prioritizes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 sanctity of our national borders.

##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긴급 위기 상황 인식:**
  - 불법 이민과 독극물인 펜타닐 등 치명적인 약물의 유입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국제비상경제권력법(IEEPA)에 근거해, 이러한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다.
- **추가 관세 부과:**
  -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 단,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은 1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 **목표 및 책임 전가:**
  -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불법 이민과 위험한 약물 유입을 막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국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 중국은 전구 화학물질 공급 및 국제 범죄 조직과의 자금세탁 문제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였으며,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안전지대 역할을 한 점을 문제 삼는다.
  - 또한, 캐나다 내에서도 마약 제조 시설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 시장 접근을 “특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경제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국가 안보 및 공중 보건 보호:**
  - 불법 이민과 펜타닐 등 치명적인 약물의 유입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공중 보건 위기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미국의 경제적 강점을 활용해 무역 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경제적 레버리지 활용:**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이며, 낮은 평균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특권을 활용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한다.
- 무역 수지가 미국 GDP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들어, 미국이 경제적 힘을 활용해 국제 무역 질서에서 우위를 점하고, 불법 이민 및 약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과거 정책 성과의 연장:**

- 첫 임기 당시,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을 활용해 국경 안보 강화에 기여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무역 정책을 통해 지적 재산권 및 기술 이전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 이번 조치는 이러한 과거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 위기를 동시에 타개하고자 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추가 관세 부과는 즉각적으로 시행되며, 미국 내 수입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관리예산국(OMB) 및 관련 부처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비용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 **주요 도전 과제:**

- **국제 무역 관계의 재조정:**
  -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 재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내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과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 수지 개선 효과와 단기 경제 충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다.
- **약물 유입 문제의 복잡성:**

- 불법 이민과 함께 유입되는 약물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압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국제 범죄 조직과의 협력 및 다각적인 안보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4. 정치적·경제적 함의

##### • 정치적 메시지:

- 트럼프 정부는 Biden 정부의 국경 및 무역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강경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불법 이민과 약물 유입을 멈추겠다"는 공약 이행을 통해, 선거에서 받은 국민의 신임을 반영하고자 한다.

##### • 경제적 효과 및 위험:

-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을 통한 미국 내 산업 보호, 무역 수지 개선, 그리고 불법 이민 및 약물 유입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 그러나,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 불안정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 • 국가 안보 및 공중 보건 강화:

- 추가 관세는 불법 이민과 약물 유입 문제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작용해,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대외 정책 및 국제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과 치명적인 약물 유입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조치다.

트럼프 정부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해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 위기를 동시에 타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속적인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를 통한 불법 이민 및 약물 유입 억제, 그리고 미국 내 산업 보호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 갈등, 소비자 가격 상승, 그리고 복잡한 안보 문제 등 여러 도전 과제를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경제적 강점과 개방된 무역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Orders Plan for a United States Sovereign Wealth Fund

February 3, 2025

**DELIVERING A PLAN TO CREATE A UNITED STATES SOVEREIGN WEALTH FUND:**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calling for the creation of a Sovereign Wealth Fund.

- The Executive Order direct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deliver a plan within 90 days for the creation of a sovereign wealth fund.
  -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Secretary of Commerce will work closely with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to develop the plan.
  - The Order directs the Secretary to include in the plan recommendations for funding mechanisms, investment strategies, fund structure, and a governance model.

**ENSURING LONG-TERM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FISCAL SUSTAINABILITY:** The creation of a sovereign wealth fund for the United States will help maximize the stewardship of our national wealth.

- Sovereign wealth funds exist around the world as mechanisms to amplify the financial return to a nation's assets and leverage those returns for strategic benefit and goals.
  - The United States can leverage such returns to promote fiscal sustainability, lessen the burden of taxes on American families and small businesses, establish long-term economic security, and promote U.S. economic and strategic leadership internationally.
- The United States already holds a vast sum of highly valued assets that can be invested through a sovereign wealth fund for greater long-term wealth generation.
  - The Federal government directly holds \$5.7 trillion in assets. Indirectly, including through natural resource reserves, the Federal government holds a far larger sum of asset value.

**PURSUING NATIONAL ENDEAVORS AND MAGNIFYING ECONOMIC GROWTH:** President Trump has called for the creation of a sovereign wealth fund “to invest in great national endeavors for the benefit of all of the American people.”

- President Trump’s economic policies—including the pursuit of fair and balanced trade, national energy dominance, and tax and regulatory relief to spur robust economic growth—will result in greater wealth and revenue streams that a sovereign wealth fund can maximize the potential of.
- Sovereign wealth funds are maintained by a diverse array of countries leveraging equally varied classes of national assets. President Trump has called for a sovereign wealth fund to ensure the United States can lead the way in long-term wealth generation.
  - The United Kingdom recently announced their own plans to pursue development of such a fund.
  - In addition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intaining their own funds, 23 states within our own country maintain their own funds that control in total \$332 billion in assets.

## 미국 국부펀드 설립 계획 명령

### 1. 정책 배경 및 핵심 내용

- **목표와 취지:**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막대한 국가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장기적 경제 경쟁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다.
  - **목표:** 연방 정부 자산(직접 보유 자산 5.7 조 달러 및 간접 자산 포함)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과 국제적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한다.
- **주요 지시사항:**
  -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은 90 일 이내에 미국 주권 부유 기금 설립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이 계획에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 투자 전략, 펀드 구조 및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OMB 와 경제 정책 보좌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 국가 자산의 극대 활용:

-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이미 주권 부유 기금을 운영해 국가 자산의 금융 수익을 증대하고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장기적 부의 증대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려 한다.

### • 경제 경쟁력 및 재정 안정성 강화:

- 이 기금은 세금 부담 완화, 장기 경제 안보, 그리고 미국의 경제 및 전략적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트럼프 정부의 공정무역, 에너지 주도권, 세제 및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추가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져, 기금 운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미국 내외 주권 및 자산 관리 모범:

- 미국은 이미 방대한 양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금을 통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제에 재투자함으로써, 장기적 국가 부의 증대를 목표로 한다.
- 국내 23 개 주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권 부유 기금의 성공 사례(총 332 억 달러 규모)를 언급하며, 연방 차원의 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 실행 메커니즘:

- **협업 구조:** 재무부와 상무부가 OMB 및 경제 정책 보좌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 수립 내용:** 자금 조달 방식, 투자 전략, 기금의 조직 구조, 그리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 권고사항을 마련한다.

### • 도전 과제:

- **정책 조율 및 협업:** 다양한 부처와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해관계 조정과 일관된 정책 집행이 관건이다.



- **자산 평가 및 관리:** 방대한 국가 자산의 정확한 평가와 이를 기금에 효과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행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 **정치적·경제적 리스크:** 기금 운용 방식과 투자 전략에 대한 내부 및 외부 비판,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 4. 정치적·경제적 함의

##### • 정책적 메시지: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자국의 막대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자유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미국이 주권 부유 기금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다.

##### • 경제적 기대 효과:

- 효과적인 기금 운용은 장기적 부의 증대, 재정 안정성 강화, 그리고 민간 부문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기금에서 창출된 수익은 국가의 전략적 투자 및 대내외 경제 정책 지원에 활용될 전망이다.

##### • 국제적 경쟁력 강화:

- 여러 국가들이 이미 주권 부유 기금을 통해 경제적 이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영국과 같은 국가들의 유사 기금 도입 사례와, 국내 주 차원의 성공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 5. 결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장기적 경제 경쟁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주권 부유 기금 설립 계획 수립을 명령했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OMB 및 경제 정책 관련 부처와 협력해 90일 이내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계획은 미국의 세금 부담 완화, 경제 안보 강화,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도입은 국내외 여러 사례에 기반한 검증된 모델로, 미국의 경제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적 시도이며,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과 자산 관리 체계의 철저한 정비가 필수적이다.

## At USAID, Waste and Abuse Runs Deep

February 3, 2025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has been unaccountable to taxpayers as it funnels massive sums of money to the ridiculous — and, in many cases, malicious — pet projects of entrenched bureaucrats, with next-to-no oversight.

### Here are only a few examples of the WASTE and ABUSE:

- [\\$1.5 million](#) to “advanc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Serbia’s workplaces and business communities”
- [\\$70,000](#) for production of a “DEI musical” in Ireland
- [\\$2.5 million](#) for electric vehicles for Vietnam
- [\\$47,000](#) for a “transgender opera” in Colombia
- [\\$32,000](#) for a “transgender comic book” in Peru
- [\\$2 million](#) for sex changes and “LGBT activism” in Guatemala
- [\\$6 million](#) to fund tourism in Egypt
-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for a non-profit linked to designated terrorist organizations — even AFTER an inspector general launched an investigation
- [Millions](#) to EcoHealth Alliance — which was involved in research at the Wuhan lab
- [“Hundreds of thousands of meals that went to al Qaeda-affiliated fighters in Syria”](#)
- [Funding](#) to print “personalized” contraceptives birth control devices in developing countries
-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o fund “irrigation canals, farming equipment, and even fertilizer used to support the unprecedented poppy cultivation and heroin production in Afghanistan,” benefiting the Taliban

**The list literally goes on and on — and it has all been happening for decades.**

Under President Trump, the waste, fraud, and abuse ENDS NOW.

##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심각한 낭비 및 부정부패 문제

### 1. 정책 배경 및 취지

- 문제 제기:

이 자료는 USAID 가 수십 년 동안 세금 납부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왔다고 주장한다.

- 정부 기관의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 내부 감시 부족, 그리고 일부 관료들의 기득권을 이용한 pet project 운영이 문제로 제시된다.

- 정치적 메시지:

-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외에서 ‘waste, fraud, and abuse’가 만연한 상황을 바로잡고, 세금 납부자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 이 자료는 이전 행정부(주로 Biden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과도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지출, 그리고 기타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

### 2. 주요 사례 및 주장

- DEI 관련 지출:

- 세르비아의 직장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DEI 를 촉진하기 위해 150 만 달러 지출  
- 아일랜드에서 DEI 뮤지컬 제작에 7 만 달러 지출

- 기타 해외 프로젝트:

- 베트남 전기차에 250 만 달러, 콜롬비아에서 트랜스젠더 오페라에 4 만 7000 달러, 페루에서 트랜스젠더 만화책에 3 만 2000 달러  
- 과테말라에서는 성전환 및 LGBT 활동 지원에 200 만 달러 지출  
- 이집트 관광 지원에 600 만 달러 지출

- 기타 문제 사례:

- 지정 테러 단체와 연계된 비영리 단체에 수십만 달러 지원 (감사관 조사 후에도 지속)  
- EcoHealth Alliance 연구 지원 등, 특히 우한 연구소 관련 연구 자금  
- 시리아에서 알카에다 연계 전투원에게 수십만 달러 상당의 식사 지원  
- 개발도상국에서 개인 맞춤형 피임약 기기 제작 지원  
- 아프가니스탄에서 양 irrigation canal, 농기계, 비료 등 수억 달러 지원으로 탈레반의 아편 재배 및 헤로인 생산 지원

- 전체적 주장:

- 이러한 지출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납세자의 돈이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낭비와 부정을 단호하게 종식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 3. 분석 및 평가

-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 USAID의 해외 지원 사업은 종종 현지 여건과 연계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나,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있다. - 특히 DEI와 관련한 사업들은 일부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긍정적 목적을 내포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 지출이 과도하고 낭비적이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한다.

- **정책 우선순위의 논쟁:**

- 이 Fact Sheet는 미국 정부가 해외 원조 자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반정부 세력이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통해, 해외 지원이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지출:**

- 자료에 제시된 사례들은 DEI 및 LGBT 관련 사업에 집중된 지출이 미국 내외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동시에, 우한 연구소 지원, 시리아 전투원 식사 지원 등도 언급하며, 이러한 지출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감독 및 책임성 강화 필요성:**

- USAID와 같은 국제 원조 기관은 복잡한 현지 사정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자금 배분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수적이다. - 본 자료는 이러한 감독 체계의 부재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4. 정치적·경제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 자료는 Biden 정부 시절의 과도한 DEI 지출과 비효율적 해외 지원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트럼프 정부의 "America First" 및 세금 납세자 보호 정책을 부각시킨다. - 미국의 세금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자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경제적 영향:**

- 과도한 해외 지원 지출은 국내 경제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의 세금이 불필요한 목적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국제 원조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

## 5. 결론

이 Fact Sheet 는 USAID 의 수십 년간의 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낭비, 부정, 그리고 부적절한 지출 사례들을 나열하며,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지출된 돈이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남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단호하게 종식시키고, 세금 납세자의 돈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향후, 이와 같은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어 USAID 의 자금 운용 체계가 개선되고, 해외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다.

## President Trump is Delivering on His Commitment to Protect our Kids

February 3, 2025

Last week, President Donald J. Trump [took executive action](#) to protect American children from irreversible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

**It's already having its intended effect — preventing children from being maimed and sterilized by adults perpetuating a radical, false claim that they can somehow change a child's sex.** Hospitals around the country are taking action to downsize or eliminate their so-called “gender-affirming care” programs:

- **NEW YORK:** NYU Langone Health has [started](#) canceling appointments for so-called “gender-affirming care” involving minors. They canceled appointments for “two 12-year-olds who had been scheduled to receive implants that dispense puberty-blocking medication.”
- **COLORADO:** Denver Health [announced](#) it would stop performing sex change surgeries on minor children, while UCHealth [said](#) it is ending so-called “gender-affirming care” for all minors.
- **VIRGINIA:** VCU Health and Children's Hospital of Richmond have [“suspended”](#) providing transgender-related medication and surgeries for minors, while UVA Health has [“suspended”](#) all transgender-related services for minors.
- **WASHINGTON, D.C.:** Children's National Hospital has [“paused”](#) prescribing puberty blockers and hormone therapies for minors, while Northwest Washington Hospital has [done the same](#).
- **ILLINOIS:** Lurie Children's Hospital of Chicago is [“reviewing”](#) their transgender-related services for minors.
- **PENNSYLVANIA:**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is [“closely reviewing”](#) the transgender-related services they provide for minors.

President Trump will always protect American children.

**Promises made, promises kept – again.**

## 아동 보호 약속 이행

### 1. 정책 배경 및 취지

- **목표:**

이 Fact Sheet 는 미국 어린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화학적·외과적 변형(예: 성전환 관련 치료)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설명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린이들이 "maimed and sterilized"되는 것을 막고, 부모와 지역 사회가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돕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

- **배경:**

- 지난 몇 년간 미국 내 일부 병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관련 치료(예: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가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 Fact Sheet 는 이러한 치료가 "radical, false claim"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어린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 2. 주요 조치 및 실행 사례

- **즉각적 실행:**

-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조치 이후, 여러 주요 병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gender-affirming care"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중단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 사례로, 뉴욕의 NYU Langone Health 는 12 세 아동의 사춘기 차단제 임플란트 관련 예약을 취소했고, 콜로라도의 Denver Health 와 UHealth 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 및 치료를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 **지역별 사례:**

- **뉴욕:** NYU Langone Health 가 미성년자 대상 치료 예약 취소

- **콜로라도:** Denver Health 와 UHealth 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및 치료 중단

- **버지니아:** VCU Health, Children's Hospital of Richmond, UVA Health 등이 미성년자 관련 서비스 일시 중단

- **워싱턴 D.C.:** Children's National Hospital 과 Northwest Washington Hospital 이 유사한 서비스를 '일시 중단'

- **일리노이 및 펜실베이니아:** 각각 Lurie Children's Hospital 과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가 관련 서비스를 검토 중

---

### 3.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어린이 보호 강화:**

- 돌이킬 수 없는 신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성전환 관련 치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가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치료로 인해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부모 및 지역사회 권리 수호:**

- 행정명령은 부모와 지역 사회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어린이 보호에 대한 결정권이 외부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약속 이행:**

-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강경 조치를 공약했던 만큼, 이번 행정 조치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중요한 행정적 움직임으로 제시된다.

#### 4.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각 병원 및 의료 기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주로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부모의 의견 및 지역 사회의 압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도전 과제:**

- 의료 기관마다 정책 변경의 속도와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기존의 치료 지침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 이와 함께, 성전환 관련 치료에 대해 의학계와 인권 단체 등에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므로, 향후 법적·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 5. 종합 평가 및 전망

- **정책 효과:**

- 행정 조치가 빠르게 시행됨에 따라, 여러 주요 병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관련 치료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했던 "어린이 보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부모와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과제:**

-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관련 치료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갈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 의료 기관 및 주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

## 6.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어린이를 돌이킬 수 없는 치료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조치이다.

여러 주요 병원에서 이미 성전환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와 지역 사회의 권리를 수호하고, 어린이의 장기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의학계와 인권 단체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란과 법적 도전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Maximum Pressure on Iran

February 4, 2025

**RESTORING MAXIMUM PRESSURE ON IRAN:**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NSPM) restoring maximum pressure on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denying Iran all paths to a nuclear weapon, and countering Iran's malign influence abroad.

- The NSPM establishes that:
  - Iran should be denied a nuclear weapon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 Iran's terrorist network should be neutralized; and
  - Iran's aggressive development of missiles, as well as other asymmetric and conventional weapons capabilities, should be countered.
- The NSPM direct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impose maximum economic pressure on the Government of Iran, including by sanctioning or imposing enforcement mechanisms on those acting in violation of existing sanctions.
  - The Treasury Secretary will also issue guidance for all relevant business sectors – including shipping, insurance, and port operators – about the risks to any person that knowingly violates U.S.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or an Iranian terror proxy.
  - The Secretary of State will also modify or rescind existing sanctions waivers and cooperate with the Secretary of Treasury to implement a campaign aimed at driving Iran's oil exports to zero.
  - The United State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will work with key allies to complete the snapback of international sanctions and restrictions on Iran.

**PROTECTING THE HOMELAND FROM IRA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olerance of Iran's threats to American citizens and companies ends now.

- The Attorney General will pursue all available legal steps to investigate, disrupt, and prosecute financial and logistical networks, operatives, or front groups inside the United States that are sponsored by Iran or an Iranian terror proxy.

- The Attorney General will prosecute leaders and members of Iranian-funded terrorist groups that have captured, harmed, or killed American citizens and seek their arrest and extradition to the United States.

**TAKING IRAN'S NUCLEAR PROGRAM OFF THE TABLE:** President Trump will not tolerate Iran possessing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nor will he stand for their sustained sponsorship of terrorism, especially against U.S. interests.

- In 2020, President Trump declared that “as long as [he i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ran will never be allowed to have a nuclear weapon.”
- Today’s NSPM fulfills the President’s 2020 vow to contend with Iran’s pernicious influence across the globe:
  - “For far too long — all the way back to 1979, to be exact — nations have tolerated Iran’s destructive and destabilizing behavior in the Middle East and beyond. Those days are over. Iran has been the leading sponsor of terrorism, and their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reatens the civilized world. We will never let that happen.”

##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 복원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목표와 취지:**
  - 이번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는 이란 정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재도입하여,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제 무대에서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또한, 이란의 공격적 미사일 개발, 비대칭 및 재래식 무기 능력 강화, 그리고 테러 네트워크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지시사항:**
  - **군사 및 핵 프로그램 대응:**
    - 이란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격적 무기 체계의 개발을 저지한다.
  - **경제적 압박 강화:**

- 재무장관에게 이란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적 압박을 가하도록 지시하며, 기존 제재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엄격한 집행 지침을 마련한다.
- 국무장관은 기존의 제재 면제 조치를 수정·폐지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한다.

○ 국제 협력 및 법 집행:

- 미국의 유엔 상임대표가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제재를 신속히 재도입(스냅백)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 법무장관은 이란 또는 이란의 테러 대리인을 지원하는 금융 및 물류 네트워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국가 안보 강화:

-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란이 국제 사회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막음으로써, 미국 및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경제적 제재의 활용:

- 미국은 경제적 힘을 활용해 이란 정부와 그 연계 네트워크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 등 주요 수익원을 차단하려 한다.
- 이를 통해 이란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제 무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 협력 및 제재 회복:

- 유엔 및 주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를 재도입하고, 이란이 국제 질서에서 배제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행정부 부처들이 경제 제재 및 무역 관련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집행한다.

- 유엔 상임대표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제재의 스냅백(회복) 절차를 진행한다.
- 법무부는 국내에서 이란 또는 이란 대리인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 **도전 과제:**
  - **국제 협력의 복잡성:**
    - 이란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 재조정 및 동맹국 간 이해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 효과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
  - **경제적 파급 효과:**
    - 추가 경제 제재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에 미칠 부작용(예: 석유시장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 **법적·외교적 분쟁:**
    - 이란 및 그 대리인과의 법적 분쟁,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반발 가능성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 4. 종합 평가 및 전망

- **정책 방향:**
  - 이번 조치는 이란이 핵무기 및 첨단 미사일 체계를 보유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테러 네트워크를 억제하기 위한 강경한 미국의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한다.
  - 경제적 제재와 국제 협력을 통한 압박 강화는 미국의 "America First" 정책과 국가 안보 우선주의를 반영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 **단기적 효과:**
  - 미국과 동맹국들이 신속히 경제 제재를 재도입함으로써, 이란의 재정적 기반과 석유 수출 등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법 집행 강화와 함께, 이란 관련 테러 및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장기적 도전 과제:**

- 국제 협력 체계 구축과 동맹국 간의 일관된 제재 실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 이란 및 그 대리인과의 장기적 법적·외교적 분쟁,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른 후속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 5. 결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재도입하여, 핵무기 보유 및 첨단 무기 개발, 테러 지원 등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 경제 제재와 국제 협력을 통한 압박, 그리고 국내 법 집행 강화 조치를 결합함으로써, 이란의 재정 및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이란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으나, 국제 협력, 경제적 부작용 관리, 법적·외교적 분쟁 해결 등 장기적 도전 과제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Protects Safety, Fairness, and Dignity in Women's Sports

February 5, 2025

**EQUAL OPPORTUNITY FOR WOMEN AND GIRL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s.

- The Executive Order upholds the promise of Title IX and ends the dangerous and unfair participation of men in women's sports.
  - The order requires DOJ to abide by the nationwide vacatur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illegal Title IX rewrite that would have dissolved single-sex spaces and opportunities.
  - The order also requires immediate action, including enforcement actions, against schools and athletic associations comprised of schools that deny women single-sex sports and single-sex locker rooms.
- The Executive Order calls for the convening of private sporting bodies in the White House to hear, in person, the stories of female athletes who suffer life-long injuries, who have been silenced and forced to shower with men, and whose hard work has been cast aside due to the biological advantage of males.
- The Executive Order directs State attorneys general to identify best practices for ensuring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sports and to highlight impact stories of women harmed by male athletes competing in women's sports.
- The Secretary of State will demand changes within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preserve single-sex sports, a necessity for safety and fairness.
-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ill review visa policies to address males falsely asserting they are females when entering the United States to compete in women's sports.

**THE BIDEN ADMINISTRATION'S WAR ON WOMEN:** Instead of standing for the rights of women, Biden caved to woke activists who wanted biological males to be treated as women in workplace showers, competitive sports, prisons, and rape shelters.

- The Biden Administration ignored the integrity of women's sports and sex-equality under the 1972 landmark sex-discrimination Title IX law in the name of "inclusivity."

- On his first day in office, Biden signed an Executive Order calling on schools across the country to allow students to compete in the sport of their “gender identity.”
- On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Title IX, Biden’s Department of Education “issued a new rule” which redefined the word “women.”
  - This move “opened sex-segregated spaces like bathrooms, locker rooms, dorm rooms and single-sex admissions programs to anyone who identifies as a woman” and removed “commonsense” student protections in “campus sexual assault and harassment proceedings.”
  - The Biden Administration argued that states may not pass laws protecting single-sex sports. Their rewrite of Title IX was found to be illegal and has been vacated nationwide.
- The Biden Administration changed federal prison policy to let prisoners be incarcerated with the gender they identify as, including letting biological males be housed with female inmates.
  - Nearly half of trans-identifying male prisoners have sex-offense convictions.
  - Because of Biden’s radical policies, two female inmates at an all-female prison were impregnated by a biological male who claimed to identify as a female.
- Biden oversaw a shortage of baby formula and feminine hygiene products, which left women unable to access and afford these essential items.

**WOMEN’S OPPORTUNITIES AND PRIVACY ARE BEING DESTROYED:** Policies, like those of the NCAA, are based on the faulty premise that it is possible to medically close the male-female athletic gap. It’s not.

- Men, on average, have greater muscle mass, strength, and cardiovascular capacity due to testosterone levels, which provides them with physical advantages in many sports.
  - Even if male athletes “transition” through hormone therapy, they retain physical advantages.
  - Stories of athletes such as Peyton McNabb, who has been permanently disabled by a male spiking a volleyball in her face during a women’s match, highlight the danger in allowing male participation.



- Women's sports were created to give female athletes a level playing field – allowing biological men to compete undermines the fairness and opportunities for women to succeed in their own leagues.
- Transgender men are pushing out the achievements of women who have worked their whole careers to set records in their respective fields.
  - Female athletes have lost nearly 900 medals to men competing against them in women's sporting categories.
  - In addition to awards and trophies, men have been taking away roster spots, playing time, resources, and opportunities from women.
- The American people overwhelmingly agree with President Trump – men do not belong in women's sports.
  - Roughly seven in 10 Americans oppose men in women's sports.
  - More than 7,000 NCAA female athletes have personally reached out to the NCAA to change its policies, comply with Title IX, and protect women.
- To date, 26 states have enacted policies to protect equal athletic opportunities for women and girls.

#### **FEMALE ATHLETES ARE SPEAKING OUT:**

- University of Wyoming volleyball player Macey Boggs: “I was stripped of a chance to play my final collegiate matches because we faced a situation no woman should ever have to face, either compete against a team rostering a male athlete on a woman's scholarship or forfeit the rest of our season. No woman should have to face such a decision. We deserve to compete against athletes whose biology matches our own, not against a male standard.”
- Roanoke College swim team captain Lily Mullens: “This has been too great a burden to bear for many of our teammates who have lost hours of sleep, many tears, and the will to train to race a swimmer who has an advantage in the water that our bodies may never possess.”
- Roanoke College swim team member Susanna Price: “The thought of having to compete against a biological man is a message that women aren't worthy, that we don't actually matter.”

- American surfing legend Bethany Hamilton: “California state law allows for males in female surfing events. This is not fair game. I do not support this.”
- Professional golfer Alison Crenshaw: “This movement was born because there have been numerous incidents where female athletes have had their hard work and potential stolen from them because male athletes were allowed to compete in the female division. It’s wrong, it’s cheating, and female athletes deserve to have their rights as athletes fought for.”

**PRESIDENT TRUMP PROMISES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GIRLS:** President Trump has vowed to defend women from gender ideology extremism and restore biological truth to the Federal government.

- President Trump campaigned on banning men from competing in women’s sports: “You just ban it. You just don’t let it happen.”
- On Day One, President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stablishing Government-wide the biological reality of two sexes and clearly defining male and female.
- Earlier this week, President Trump signed Executive Orders to protect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 and to prohibit federal funding of the indoctrination of children with radical gender ideology.
- Today’s Executive Order upholds the original promise of Title IX, keeping his campaign promise to the American people.

## 여성 스포츠에서 공정성과 안전 및 존엄성 보호

### 1. 정책 배경 및 취지

- **보호의 필요성:**  
이 행정명령은 여성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기존의 Title IX 원칙과 단일 성별 공간 보호를 바탕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과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 **정책 목표:**  
–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성 선수들의 경험과 성과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woke” 정책에 따른 성 정체성 재정의와 관련한 규제를 철회하여, 원래의 Title IX 취지에 부합하는 단일 성별 기준을 복원한다.

## 2. 주요 조치 및 실행 내용

- **행정 및 법 집행 조치:**
  - 법무부(DoJ)는 이전 행정부가 내린 Title IX 개정 지침의 효력을 폐기하도록 지시받는다.
  -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 학교 및 운동 단체가 여성에게 전용된 스포츠와 라커룸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법 집행 조치를 취한다.
- **민간 협의체 구성:**
  - 백악관에서 민간 스포츠 단체를 소집해, 여성 선수들이 경험한 부당한 사례와 신체적 위협, 그리고 성과 상실 사례를 직접 청취한다.
- **국가 및 국제 협력 강화:**
  - 각 주 법무장관은 여성 스포츠 기회를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피해 사례를 집계해 보고한다.
  - 국무부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와 협력해 단일 성별 스포츠 보장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한다.
  -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입국할 때 성별을 허위로 주장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을 재검토한다.

## 3.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생물학적 차이가 여성 스포츠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여성 선수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한다.
  - 여성 선수들이 단일 성별 기준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 **기존 정책에 대한 반전:**
  - 이전 행정부가 추진한 “젠더 재정의” 정책이 여성 스포츠의 안전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면 철회하고 원래의 Title IX 취지를 회복한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여성 스포츠에서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경쟁의 공정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 **여성 선수 보호 및 목소리 강화:**
  - 실제 사례를 통해 여성 선수들이 겪은 불이익과 신체적 위협을 부각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과 법 집행의 강화 방향을 제시한다.
  -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의 기회와 안전, 그리고 성취를 보호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 4. 예상 효과와 도전 과제

- **예상 효과:**

- 여성 스포츠의 단일 경쟁 기준이 확립되어, 여성 선수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 법무부와 각 주 법무장관, 그리고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 스포츠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 여론에서 “여성 스포츠 보호”에 대한 지지가 높아, 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도전 과제:**

-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차별로 인식할 수 있어, 법적 및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 스포츠 조직이나 대학 등에서의 기존 운영 방식과의 충돌, 그리고 실질적 실행과 관련된 관리 및 감독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 국제 스포츠 기구(IOC)와의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율 문제 역시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 5. 결론

이 행정명령은 여성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의 안전, 공정성, 그리고 존엄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Title IX 의 원칙에 따라 단일 성별 스포츠 환경을 복원하고, 기존의 “젠더 재정의” 정책을 철회하는 한편, 법 집행과 민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피해 사례를 바로잡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여성 스포츠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보호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성소수자 권리와 관련된 논란 및 실행상의 도전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이 요구된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radicates Anti-Christian Bias

February 6, 2025

**ERADICATING ANTI-CHRISTIAN BIA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stablishing a task force to end the anti-Christian weaponization of government and unlawful conduct targeting Christians.

- The task force, officially known as the Task Force to Eradicate Anti-Christian Bias, will be comprised of members of President Trump's cabinet and key government agencies.
- The task force will review the activities of all departments and agencies to identify and eliminate anti-Christian policies, practices, or conduct.
- The task force will gather input from various stakeholders to ensure broad perspectives are considered, including faith-based organizations,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and Americans affected by anti-Christian conduct.
- It will identify and address gaps in laws and enforcement that have contributed to anti-Christian conduct, including by remedying any failures to fully enforce the law against acts of anti-Christian hostility, vandalism, and violence.
- The task force will recommend further presidential or legislative actions necessary to rectify past wrongs and protect Americans' religious liberties.
- The task force will submit an annual report on its progress, with a final report upon its conclusion.

**PROTECTING AMERICANS' RELIGIOUS FREED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engaged in an egregious pattern of targeting peaceful Christians while ignoring violent, anti-Christian offenses. President Trump will not tolerate this abuse of government and is taking action to ensure that any unlawful and improper anti-Christian conduct, policies or practices are identified, terminated, and rectified.

-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enshrines the fundamental right to religious liberty in the First Amendment.
- The Biden Department of Justice brought felony charges and obtained multi-year prison sentences against nearly two dozen pro-life Christians for praying and peacefully demonstrating outside abortion facilities.

- The Biden Department of Justice ignored hundreds of attacks on Catholic churches, charities, and pro-life centers.
- In 2023, a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memo asserted that traditional Catholics were domestic-terrorism threats and suggested infiltrating Catholic churches as “threat mitigation.”
- The Biden Department of Education sought to repeal religious-liberty protections for faith-based organizations on college campuses.
- The Bide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sought to force Christians to affirm radical transgender ideology against their faith.
- The Bide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ught to drive Christians out of the foster-care system.
- In 2024, the Biden Administration declared Easter Sunday as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STANDING UP FOR RELIGIOUS LIBERTY:** President Donald J. Trump is committed to protecting Americans’ fundamental right to religious freedom.

- On his fourth day in office, President Trump pardoned the Christians and pro-life activists who were persecu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praying and peacefully living out their faith.
- Last week, President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combat anti-Semitism on our campuses and in our streets.
- President Trump: “I will create a new federal task force on fighting anti-Christian bias. That’ll be done immediately.”
- This Executive Order also builds on the long list of accomplishments from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 During his first year in office, President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upholding religious liberty and the right to engage in religious speech.
  - President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recognizing the essential contributions of faith-based organizations and establishing the Faith and Opportunity Initiative.

- President Trump reversed the Obama-era policy that prevented the government from providing disaster relief to religious organizations.

President Trump hosted a Global Call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event at the United Nations and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siness lead

## 반기독교적 편견 근절

### 1. 정책 배경 및 핵심 내용

- **문제 제기 및 취지:**
  - 지난 행정부(주로 Biden 정부)가 정부 정책과 집행 과정에서 평화로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조치를 취해 왔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응해 반기독교 편향을 근절하고자 한다.
  - 행정명령은 정부 기관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합리한 편향과 부당한 대우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
- **주요 조치 내용:**
  -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대통령 내각과 주요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Anti-Christian Bias'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모든 부처의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 관행, 행위를 검토하고 제거할 방안을 마련한다.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신앙 기반 단체, 주·지방 및 부족 정부, 그리고 기독교 영향을 받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
  - **법 집행 및 개선 조치:** 반기독교 행위, 증오 범죄, 반기독교 폭력 및 파괴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존 법령 집행을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 **추가 조치 권고:** 태스크포스는 추가적인 대통령 또는 입법 조치를 제안하여,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미국인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마련한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종교 자유 및 평등 보장:**
  - 미국 헌법 제 1 조에 명시된 종교 자유 권리를 확고히 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신앙인들이 정부의 부당한 편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정부 정책의 중립성 회복:**
  -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이 특정 이데올로기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을 회복하도록 한다.

- **역사적 불공정 시정:**

- Biden 행정부 시절 기독교인에 대한 불합리한 법 집행(예: 평화로운 기도 및 시위에 대한 형사 기소 등) 사례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내외 신뢰 회복:**

- 국내 기독교 커뮤니티 및 신앙 기반 단체들에게 정부가 종교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는 신뢰를 재건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의 종교 자유 보호 의지를 명확히 전달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태스크포스는 각 부처의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반기독교 정책 및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한다.
  - 연방, 주, 지방 정부 및 부족 정부, 신앙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태스크포스는 매년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종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대통령 또는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 **도전 과제:**

- **정책 실행의 일관성:**
  -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 **법적·사회적 반발:**
  - 일부 기독교 단체나 보수 진영은 강경 조치를 환영할 수 있으나, 다른 종교 단체나 진보 세력은 이를 지나치게 편향된 조치로 보고 법적·사회적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내외 정치 환경 변화:**
  - 향후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종교 자유 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4. 정치적·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조치는 정부가 특정 신앙(여기서는 기독교)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보수주의적 원칙을 강조한다.



- Biden 행정부의 기독교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경한 행정 조치임을 부각시킨다.

- **사회적 효과:**

- 기독교 커뮤니티와 신앙 기반 단체들은 정부가 종교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신호를 받으며, 향후 정부와의 협력 및 정책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반면, 종교적 소수자나 다른 신앙 단체에서는 정부의 중립성 문제와 함께, 이번 조치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기독교인에 대한 부당한 편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 모든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과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확고히 하고, 정부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독교 커뮤니티 및 신앙 기반 단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철저한 검토를 통해 반기독교 편향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법적·사회적 논란과 함께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ddresses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uth Africa

February 7, 2025

**ADDRESS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UTH AFRICA:** On Fri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addres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South Africa.

- As encapsulated in its recent land confiscation act to seize disfavored citizens' property without compensation, the government of South Africa blatantly discriminates against ethnic minority descendants of settler groups.
- As long as South Africa continues to support bad actors on the world stage and allows violent attacks on innocent disfavored minority farmers, the United States will stop aid and assistance to the country.
- The United States will establish a plan to resettle disfavored minorities in South Africa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their race as refugees.

**STANDING UP AGAINST INJUSTICE AND OPPRESSION:** President Donald J. Trump is committed to holding South Afric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 South Africa has taken positi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 Merely two months after the October 7<sup>th</sup> terrorist attacks on Israel, South Africa accused Israel, not Hamas, of genocide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South Africa also strengthened ties with Iran, which supports terrorism globally.
- While championing terrorism and autocratic regimes abroad, South Africa has committed similar human rights violations at home. The recent Expropriation Act enables the government of South Africa to seize ethnic minority descendants of settler groups' agricultural property without compensation.
  - The Expropriation Act follows countless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dismantle equal opportunity in employment, education, and business, and hateful rhetoric and government actions fueling disproportionate violence against racially disfavored landowners.

- Years ago,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disbanded volunteer forces defending rural farmers, turning a blind eye to the ensuing farm attacks.

**REAFFIRMING OUR COMMITMENT TO HUMAN RIGHTS:**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is central to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agenda.

- President Trump: "South Africa is confiscating land, and treating certain classes of people very badly [...] I will be cutting off all future funding to South Africa until a full investigation of this situation has been completed!"
- President Trump believes in sending a clear message to the world's bad actors—and to their victims—by condemning human rights abuses in no uncertain terms.

##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침해 문제 대응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문제 제기:**
  - 남아프리카 정부가 최근 시행한 토지 몰수법(Expropriation Act)을 통해, 정당한 보상 없이 정착민 후손과 같은 소수 민족의 농업 자산을 몰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며, 테러 지원 및 반미 정서를 조장하는 등, 국가 안보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주요 지시사항:**
  - 미국은 남아프리카가 소수 민족 농민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지속하는 한, 해당 국가에 대한 모든 원조와 지원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한다.
  - 또한, 소수 민족에 대해 차별받는 이들을 난민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인권 및 평등 보호:**
  - 남아프리카 내에서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한 토지 몰수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입은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목표다.

-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입장 강화:**

- 남아프리카가 국제 사회에서 이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반미 정서를 조장하는 점을 문제 삼아,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이를 통해 미국은 인권 침해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국제적 규범과 인권 보호 원칙을 수호하고자 한다.

- **경제 및 외교 정책 연계:**

- 남아프리카의 국내 정책이 국제 무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자 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남아프리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고, 소수 민족 피해자들의 난민 재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남아프리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제재나 기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 **도전 과제:**

- 남아프리카 내에서 이미 자리잡은 국내 정치 및 경제 구조와, 해당 국가의 국제 외교 정책과의 조율 문제.
- 난민 재배치 및 인도적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이에 따른 국제 사회의 반응 관리.

### 4. 종합 평가 및 전망

- **정책 효과:**

- 단기적으로는 남아프리카 정부의 불공정한 토지 몰수와 차별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강화하고, 미국의 원조 중단 조치가 해당 국가에 강력한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피해를 입은 소수 민족에 대한 난민 재배치 계획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장기적 도전:**

- 남아프리카 정부가 정책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해당 국가 간 외교적 긴장이 지속될 수 있으며, 국제 사회 내에서의 여론과 경제적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남아프리카에서 소수 민족 농민에 대한 불공정한 토지 몰수 및 차별 정책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원조를 중단함으로써 인권과 평등을 보호하려는 전략적 조치다.

또한, 피해자들을 난민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아프리카가 국제 사회에서 부적절한 외교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과 지원 중단 조치가 남아프리카 정부에 변화의 신호를 보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 및 국제적 협력 체계 관리가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을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stablishes White House Faith Office

February 7, 2025

**ESTABLISHING A FAITH OFFICE:**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stablish the White House Faith Office.

- The White House Faith Office will empower faith-based entitie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houses of worship to better serve families and communities.
- The Office will be housed in the Domestic Policy Council and will consult with experts within the faith community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regarding changes to policies, programs, and practices to better align with the American values.
- The Office will coordinate with agencies on religious liberty training and on identifying and promoting grant opportunities for non-profit faith-based entitie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houses of worship.
- The Office will work in collabor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to identify failures to enforce constitutional and Federal statutory protections for religious liberty.

**DEFENDING RELIGIOUS LIBERTY:** President Trump is committed to protecting the liberty and freedom of our religious communities, organizations, and students.

- In his first week, President Trump pardoned Christians and pro-life activists who were persecuted by the weaponized Biden Administration for praying and peacefully living out their faith.
- President Trump reinstated service members forced out of the military over the COVID-19 vaccine mandate, including those discharged over their religious objections to the vaccine.
- Last week, President Trump signed executive actions to ensure Federal overreach and taxpayer dollars will no longer force individuals to violate their commitment to life.
- Yesterday, President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stablishing a task force to eradicate anti-Christian bias.

**PROMISES MADE, PROMISES KEPT:** These actions build on President Trump's longstanding commitment to safeguarding the fundamental right to religious freedom, as evidenced by his first term.

- In 2017, President Trump stopped the Johnson Amendment from interfering with pastors' rights to speak their minds.
- In 2018, President Trump established the Faith and Opportunity Initiative which recognized and promoted the essential contributions of faith-based organizations.
- In 2018, President Trump reversed the Obama-era policy that prevented the government from providing disaster relief to religious organizations.
- In 2019, President Trump hosted a Global Call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event at the United Nations and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siness leaders to work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 In 2020, President Trump issued new guidance to protect religious liberty and expression in public schools.

## 백악관 신앙 사무국 설립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목적과 취지:**

이 팩트 시트는 신앙 기반 단체, 지역 사회 조직, 예배당 등이 가족과 지역 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백악관 신앙 사무국(White House Faith Office)을 신설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이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다.

- **주요 지시사항:**

- 신앙 사무국은 국내정책위원회(Domestic Policy Council) 산하에 신설되며, 신앙 공동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대통령에게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관행의 변경사항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한다.
- 이 사무국은 각 정부 부처와 협력해 종교 자유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신앙 기반 비영리 단체, 지역 사회 조직, 예배당 등에 대한 보조금 기회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 또한, 법무장관과 협력하여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및 연방 법령상의 보호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종교 자유 보호:**

정부가 특정 신앙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종교 공동체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이는 기독교를 포함한 신앙인들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신앙 기반 단체 역량 강화:**

신앙 기반 단체와 지역 사회 조직이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하여, 정책 개선에 기여하도록 한다.

- **과거 성과와 연계:**

이번 신앙 사무국 신설은 이전 임기 동안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던 여러 조치(예: 2017 년 종교 자유 보호 행정명령, 2018 년 Faith and Opportunity Initiative 등)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운영 체계:**

신앙 사무국은 국내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종교 자유 관련 정책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부의 다양한 전문가 및 외부 신앙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협력과 소통:**

신앙 사무국은 법무장관과 협력해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법적 조치를 점검하고, 정부 부처 간 소통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한다.

- **도전 과제:**

-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
- 특정 종교를 우대한다는 비판이나, 종교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종교 자유를 수호하고, 신앙 기반 단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이전 행정부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를 반전시키고, 보수 진영과 신앙인들의 지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회적 영향:**

신앙 사무국 신설은 기독교 및 기타 전통 신앙 공동체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종교적 소수자나 비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을 펼친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신앙 사무국이 신설됨으로써, 정부는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신앙 기반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하게 된다.

이 조치는 정부가 종교 자유와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보수 진영과 신앙인 커뮤니티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내 각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종교 중립성 유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s Protecting Americans' Second Amendment Rights

February 7, 2025

**STOPPING FEDERAL INFRINGEMENT ON CONSTITUTIONAL RIGHT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nd the federal government's violation of Americans' fundamental Second Amendment right to protect themselves, their families, and their freedoms.

- This Executive Order will halt existing policies designed to curtail the clear right of law-abiding citizens to keep and bear arms.
- The order directs the incoming Attorney General to immediately complete a specific review of all orders, regulations, guidance, plans, and other actions by the Biden Administration regarding firearms—listing several specific documents to be reviewed—and deliver a plan of action to the President to eliminate all infringements on Americans' Second Amendment rights.

**ENDING THE ATTACKS ON LAW-ABIDING GUN OWNERS AND GUN BUSINESSE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flagrantly sought to eliminate Second Amendment rights. Among other infringements, 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ATF) was weaponized to end the livelihoods of law-abiding small business owners in an effort to limit Americans' ability to acquire firearms:

- The so-called “zero tolerance” or “enhanced regulatory enforcement policy” put in place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led to a nearly six-fold increase in enforcement actions against Federal Firearms Licensees (FFL's), many of whom are mom-and-pop shop small businesses who made innocent paperwork errors.
- Firearms manufacturers have been de-banked or denied services simply because they make guns—which allow Americans to exercise a constitutional right.

**DEFENDING OUR CONSTITUTIONAL RIGHT TO KEEP AND BEAR ARMS:** President Trump is standing up for our constitutional Second Amendment right to keep and bear arms, building on progress made during his first term:

- President Trump removed the United States from the United Nations (UN) misguided Arms Trade Treaty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of global regulations of conventional firearms.

- President Trump's Department of Justice narrowed the definition of "fugitive from justice" to more specific guidelines when determining who is prohibited from buying a gun.

During the pandemic, President Trump designated the firearms industry "essential" in order to protect gun stores, shooting ranges, and ammunition dealers from being shut down.

##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 2 조 권리 보호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헌법적 권리 수호:**
  - 이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 2 수정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연방 정부가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존 정책 철회:**
  - Biden 행정부가 총기 관련 정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무기 소지 및 휴대 권리를 제한한 기존 조치들을 철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검토와 실행 계획 수립을 명령한다.
- **법무장관의 역할:**
  - 신임 법무장관은 Biden 행정부의 총기 관련 모든 명령, 규제, 지침, 계획 등 총기 규제 조치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미국인의 제 2 수정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지시받는다.
- **총기 관련 사업체 보호:**
  - ATF(주류, 담배, 총기 및 폭발물 관리국)를 통한 총기 관련 집행 조치가 법을 준수하는 소규모 총기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헌법적 자유 수호:**
  - 미국 시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무기 소지 및 휴대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종식시키려는 목표다.

- **법적 규제 완화:**

- 기존 총기 규제 조치 중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분을 철회하여,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총기 관련 소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정:**

- 총기 관련 사업체들이 불필요한 제재로 인한 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내 총기 산업과 관련 일자리,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보호하는 전략이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법무장관은 Biden 행정부의 총기 관련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제2수정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식별하여, 구체적인 철회 및 수정 계획을 수립한다.
-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총기 규제 완화 및 집행 조치의 재정비가 이루어진다.

- **도전 과제:**

- 법무부와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규제 철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 총기 규제 완화가 공공 안전 및 범죄 예방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과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총기 관련 소기업 및 법규 준수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기 남용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행정명령은 Biden 행정부의 총기 규제 정책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인의 자유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보수 진영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 **사회적 영향:**

-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총기 관련 소기업들이 부당한 규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음으로써,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과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총기 규제 완화에 따른 범죄율 상승이나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제 2 수정헌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Biden 행정부가 시행한 불필요한 총기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법무장관이 신속한 검토와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이로써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 총기 관련 소기업들이 부당한 제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총기 규제 완화와 관련 사업체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공공 안전과 범죄 예방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향후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the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February 10, 2025

**ENDING THE FORCED USE OF PAPER STRAW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nd the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 The Federal government is directed to stop purchasing paper straws and ensure they are no longer provided within Federal buildings.
- The Order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Strategy to End the Use of Paper Straws within 45 days to alleviate the forced use of paper straws nationwide.

**BRINGING BACK COMMON SENSE:** The irrational campaign against plastic straws has forced Americans to use nonfunctional paper straws. This ends under President Trump.

- Cities and states across America have banned plastic straws, caving to pressure from woke activists who prioritize symbolism over science.
- Paper straws use chemicals that may carry risks to human health – including “forever chemical” 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which are known to be highly water soluble and can bleed from the straw into a drink.
  - A study found that while PFAS were found in paper straws, no measurable PFAS were found in plastic straws.
- Paper straws are more expensive than plastic straws, and often force users to use multiple straws.
- Paper straws are not the eco-friendly alternative they claim to be – studies have shown that producing paper straws can have a larger carbon footprint and require more water than plastic straws.
- Paper straws often come individually wrapped in plastic, undermining the environmental argument for their use.

**PROMOTING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President Trump has made it a top priority to promote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for the American people.

- President Trump’s policies are promoting economic growth, while still maintaining standards that allow Americans to have among the cleanest air and water in the world.

- This marks a sharp contrast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hich wasted American taxpayer dollars on virtue signaling instead of implementing effective solutions.
  - For instance, the Biden Administration spent billions on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yet only eight were completed.
- Meanwhile, President Trump's commonsense approach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s demonstrated his true commitment to preserving America's natural resources.
- President Trump has championed improved forest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forest fires that are devastating communities and ecosystems across the country.
- By pausing the expansion of windmills, President Trump recognized their detrimental environmental impact, particularly on wildlife, often outweighs their benefits.
- President Trump signed the Save Our Seas Act to preserve and protect our beautiful waters and oceans from being littered with garbage.
- President Trump is committed to securing American energy independence, recognizing that America's domestic supply of clean coal and natural gas not only strengthens national security but also provides some of the cleanest energy in the world.

## 종이 빨대 강제 사용 및 조달 금지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문제 제기:**
  -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와 관련된 상징적 캠페인으로 인해, 미국 내 여러 도시와 주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였으나, 그 대안으로 채택된 종이 빨대는 기능적 한계와 건강,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
  - 종이 빨대는 PFAS(영구 화학물질)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환경적, 경제적 비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주요 지시사항:**
  - 연방 정부는 종이 빨대의 구매를 중단하고, 연방 건물 내에서 종이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 45 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종이 빨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을 수립하도록 지시한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실용적 접근과 상식 회복:**

- 종이 빨대의 비효율성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근거로, 불필요한 종이 빨대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상식에 기반한 환경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 **세금 낭비 방지:**

- Biden 행정부의 상징적 지출과 비교하여, 종이 빨대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미국 세금 납세자의 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한다.

- **환경 보호 및 에너지 독립:**

- 정부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청정 에너지 공급과 자원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강조한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연방 정부는 즉각적으로 종이 빨대의 구매 및 사용을 중단하고, 연방 건물 내에서 종이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 45 일 내에 전국적인 종이 빨대 사용 종료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와 협력해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 **도전 과제:**

- 종이 빨대 대체재에 대한 논란과, 이미 종이 빨대 사용에 익숙해진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저항 가능성이 있다.
- PFAS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종이 빨대 생산 과정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조치는 Biden 행정부의 비효율적인 환경 지출과 상징적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 정부의 상식 기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의지를 강조한다.



- **사회적 영향:**

- 종이 빨대 사용 중단은 소비자 안전과 건강 보호, 그리고 환경 보존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 동시에, 플라스틱 빨대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논쟁이 계속될 수 있으며, 일부 환경 단체와 소비자 그룹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종이 빨대의 구매 및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45 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이를 종료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상식에 기반한 환경 보호와 세금 낭비 방지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비교했을 때 종이 빨대가 가진 기능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점을 근거로, 미국 내 불필요한 종이 빨대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에너지 독립 정책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이 빨대 사용 중단을 통해 소비자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체재 문제 및 관련 논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in FCPA Enforcement

February 10, 2025

**ELIMINATING UNDUE BARRIERS TO U.S. SUCCES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restor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by ordering revised, reasonable enforcement guidelines fo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of 1977.

- The Order directs the Attorney General to pause FCPA actions until she issues revised FCPA enforcement guidance that promotes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efficient use of federal law enforcement resources.
  - Past and existing FCPA actions will be reviewed.
  - Future FCPA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actions will be governed by this new guidance and must be approved by the Attorney General.

**AMERICAN SECURITY REQUIRES AMERICAN ECONOMIC STRENGTH:** American national security depends on America and its companies gaining strategic commercial advantages around the world, and President Trump is stopping excessive, unpredictable FCPA enforcement that makes American companies less competitive.

- U.S. companies are harmed by FCPA overenforcement because they are prohibited from engaging in practices common among international competitors, creating an uneven playing field.
- Strategic advantages in critical minerals, deep-water ports, and other key infrastructure or assets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to American national security.
- FCPA overenforcement infringes upon the President's Article II authority to conduct foreign affairs, necessitating this review and new enforcement policies.
- Over time, FCPA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by U.S. prosecutors has broadened, imposing a growing cost on our Nation's economy.
  - In 2024, the DOJ and SEC filed 26 FCPA-related enforcement actions, and at least 31 companies were under investigation by year end.

- Over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an average of 36 FCPA-related enforcement actions per year, draining resources from both American businesses and law enforcement.

**PUTTING AMERICA FIRST:** President Trump is committed to prioritizing America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and ensuring U.S. businesses have the tools to succeed globally.

- Since returning to office, President Trump has signed several executive actions aimed at enhancing American economic competitiveness, including an Executive Order to strengthen U.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ariffs on Mexico, Canada, and China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a 10-to-1 deregulation initiative, ensuring every new rule is justified by clear benefits
- President Trump renegotiated trade deals, including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to secure better terms for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 President Trump has worked to cut burdensome regulations that hinder U.S. businesses, ensuring they can operate efficiently and competitively on the world stage.
- President Trump: “We have to save our country. Every policy must be geared toward that which supports the American worker, the American family, and businesses, both large and small, and allows our country to compete with other nations on a very level playing field...”

##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통한 미국 경쟁력 및 안보 강화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핵심 취지:**
  - 이번 행정명령은 1977 년 제정된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 지침을 재검토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 기존의 과도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FCPA 집행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국제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주요 지시사항:**
  - 법무장관에게 FCPA 관련 기존 명령, 규제, 지침, 계획 등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새로운 집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 과거 및 기존의 FCPA 집행 사례들을 재검토하며, 앞으로의 조치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미국 경쟁력 회복:**

- 미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FCPA 집행의 범위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재조정한다.
- FCPA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여, 미국 기업들이 전략적 상업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가 안보 강화:**

- 미국의 주요 산업(예: 핵심 광물, 심해 항구 등)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FCPA 집행이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미국 우선주의 실현:**

- "America First" 원칙에 따라, 모든 정책이 미국 노동자, 가족,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하며, 무분별한 FCPA 집행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는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법무장관은 기존의 FCPA 집행 관련 모든 조치를 재검토한 후, 미국 기업 경쟁력과 연방 법 집행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집행 지침을 마련한다.
- 미래의 FCPA 조사 및 집행은 새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전 과제:**

- **재검토 및 조정 과정:** 기존 FCPA 조치와 관련된 복잡한 사례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법무부 내 협업:**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 **국제 경쟁과 규제 균형:** 미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부패 방지를 위한 적절한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행정명령은 Biden 행정부의 과도한 FCPA 집행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일환임을 강조한다.

- "모든 정책은 미국 노동자, 가족, 그리고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경제적·사회적 영향:**

- 합리적인 FCPA 집행 지침 마련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제재로부터 보호받아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FCPA 의 원래 목적인 부패 방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 기준을 미국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법무장관이 기존 FCPA 조치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집행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부패 방지라는 원래의 목적과 새로운 집행 지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을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liminates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February 10, 2025

**ELIMINATING INEFFICIENCY AND BUREAUCRACY:**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liminate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a government program purportedly designed to provide bureaucratic leadership training.

- The Order directs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to take all necessary steps to terminate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and revokes the appropriate documents.

**ENSURING EVERY TAX DOLLAR WORKS FOR THE AMERICAN PEOPLE:** President Trump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government serves the American people, rather than itself, which requires a complete shift in government leadership toward reducing waste and promoting efficient service to taxpayers.

-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was created by the Johnson Administration more than 50 years ago to provide leadership training to government bureaucrats.
- Bureaucratic leadership over the past half-century has enlarged and entrenched Washington, D.C.'s managerial class, a bloated system far removed from the needs of American families. New leadership is needed.
-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includes a resort property in Charlottesville, VA, that was formerly a luxury hotel, which is used for bureaucracy training courses.

**DISMANTLING GOVERNMENT BUREAUCRACY:** Eliminating the Federal Executive Institute is part of President Trump's broader mission to reform the federal bureaucracy, including by ending ineffective government programs that drain resources and empower government without achieving measurable results.

- The government wastes billions of dollars each year on duplicative programs and frivolous expenditures that fail to align with American values or address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 President Trump temporarily paused foreign aid to man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ntractors to ensure every dollar of U.S. foreign assistance supports American values.

- President Trump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to examine how to streamline the Federal government, eliminate unnecessary programs, and reduce bureaucratic inefficiency.
- President Trump launched a 10-to-1 deregulation initiative, ensuring every new rule is justified by clear benefits

## 연방 행정 연구소 폐지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비효율과 관료주의 타파:**
  -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Federal Executive Institute(연방 행정 연구소)는 관료 리더십 교육을 위해 50 년 전 Johnson 행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워싱턴 D.C.의 관료 관리 계층이 팽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 지시사항:**
  - 인사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 연방 행정 연구소를 종료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한다.
  - 연구소가 보유한 자산(예: 버지니아 샬러츠빌에 위치한 전 럭셔리 호텔을 개조한 리조트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 **정부 효율성 및 세금 낭비 방지:**
  - 정부가 스스로를 위해 자금을 낭비하지 않고, 미국 시민을 위해 모든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목표를 강조한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관료주의 해체 및 효율성 제고:**
  - 연방 행정 연구소와 같은 불필요한 정부 프로그램을 제거함으로써, 정부 조직 내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타파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정부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 전환과 자원 절감을 도모한다.
- **세금 낭비 최소화:**
  - 미국 세금 납세자의 돈이 비효율적인 관료 교육 및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고, 실제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더 나은 정부 서비스 제공:**

-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함으로써 정부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인사관리국이 주도하여 연방 행정 연구소의 종료를 위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관련 문서를 폐기한다.
-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부 효율성 제고 및 10:1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와 연계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부 구조를 간소화하는 광범위한 개혁의 일부로 추진된다.

- **도전 과제:**

-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은 관료 관리 체계를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내부 저항과 행정적 혼선 발생 가능성.
- 연구소 종료로 인한 인력 및 자산 재배분 문제와, 관련 비용 절감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정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갈등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낭비와 비효율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원칙을 재확인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해체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과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한다.

- **사회적 영향:**

- 정부 조직의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는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는 대중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기존 관료 체계에 익숙해진 일부 관료와 부서 간의 갈등 및 조정 문제가 단기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행정 연구소를 종료하여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비효율을 타파하고, 세금 낭비를 줄이며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개혁 노력의 일환이다.

이 조치는 정부가 미국 시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낭비되는 자원을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내부 행정 체계 개편과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관료 체계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저항과 행정적 혼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Section 232 Tariffs

February 11, 2025

**COUNTERING TRADE PRACTICES THAT UNDERMINE NATIONAL SECURITY:** Yester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proclamations to close existing loopholes and exemptions to restore a true 25% tariff on steel and elevate the tariff to 25% on aluminum.

- President Trump is taking action to protect America’s critical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which have been harmed by unfair trade practices and global excess capacity.
- President Trump is reinstating the full 25% tariff on steel imports and increasing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25%.
  - Key reforms include eliminating all alternative agreements, applying strict “melted and poured” standards, expanding tariffs to include key downstream products, terminating all general approved exclusions, and cracking down on tariff misclassification and duty evasion schemes.
- The countries of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Japan, Mexico, South Korea, the European Union, Ukraine, and the United Kingdom had received exemptions, which prevented the tariffs from being effective.
  - By granting exemptions to certai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nadvertently created loopholes that were exploited by China and others with excess steel and aluminum capacity, undermining the purpose of these exemptions.
- The President is exercising his authority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to adjust imports of steel and aluminum to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 This statute provides the President with authority to adjust imports being brought into the United States in quantities or under circumstances that threaten to impair national security.
  - In March 2018, President Trump invoked authority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19 U.S.C. § 1862) to impose 25% tariffs on steel imports and 10% tariffs on aluminum. These measures were remarkably effective in supporting recovery and reinvestment in the American steel industry and saved the domestic primary aluminum industry from total

collapse. But exemptions and loopholes have permitted evasion of the tariffs and weaken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 The reinvigorated Section 232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will support the program's original objective of revitalizing the domestic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and achieving sustainable capacity utilization of at least 80%.

**RESTORING FAIRNESS TO STEEL AND ALUMINUM MARKETS:** President Trump is taking action to end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global dumping of steel and aluminum.

- Foreign nations have been flooding the United States market with cheap steel and aluminum, often subsidized by their governments.
- A report from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found that steel import levels and global excess were weakening our domestic economy and threatening to impair national security.
  - The report found that excess production and capacity, particularly in China, has been a major factor in the decline of domestic aluminum production.
- While the domestic steel industry briefly achieved 80% utilization in 2021, subsequent trade pressure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has depressed domestic production. In 2022 and 2023, capacity utilization fell to 77.3% and 75.3%, respectively. High import volumes from sources exempt from Section 232 tariffs are a major factor in depressing domestic production volumes.
- For aluminum,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capacity utilization rate between 2017 and 2019, from 40% to 61% during that period. But since 2019, the aluminum capacity utilization has once again seen a steady decline, falling from 61% to 55% between 2019 and 2023.
- The United States does not want to be in a position where it would be unable to meet demand for national defense and critical infrastructure in a national emergency.

**STRENGTHENING AMERICA'S MANUFACTURING INDUSTRY:** President Trump's decision to close existing loopholes and exemptions will strengthen United States'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 In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imposed Section 232 tariffs to protect the American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from unfair foreign competition.
- The steel tariffs that President Trump implemented led to thousands of jobs gained and higher wages in the metals industry.
  - These tariffs were hailed as a “boon” for Minnesota’s iron ore industry, with state officials crediting tariffs for bolstering the local economy.
  - Steel and aluminum imports drastically decreased under President Trump, falling by nearly a third from 2016 to 2020.
  - The tariffs led to a wave in investment across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10 billion committed to build new mills.
- It was recently announced that Hyundai Steel is actively considering building a steel plant in the United States.
- U.S. steelmakers, including the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nd the 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have praised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trade policy.

**TARIFFS WORK:** Studies have repeatedly shown that contrary to public rhetoric, tariffs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achieving economic and strategic objectives.

- A 2024 study on the effects of President Trump’s tariffs in his first Administration found that they “strengthened the U.S. economy,” and “led to significant reshoring” in industries like manufacturing and steel production.
- A 2023 report b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at analyzed the effects of Section 232 and 301 tariffs on more than \$300 billion of U.S. imports found that the tariffs reduced imports from China, effectively stimulated more U.S. production of the tariffed goods, with very minor effects on prices.
- According to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the tariffs implemented by President Trump during his first Administration “clearly show[ed] no correlation with inflation” and only had a temporary effect on overall price levels.
- An analysis from the Atlantic Council found that “tariffs would create new incentives for US consumers to buy US-made products.”

- Former Biden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affirmed last year that tariffs do not raise prices: “I don’t believe that American consumers will see any meaningful increase in the prices that they face.”
- A 2024 economic analysis found that a global tariff of 10% would grow the economy by \$728 billion, create 2.8 million jobs, and increase real household incomes by 5.7%.

## 섹션 232 관세 복원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목적과 취지:**
  -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 제 232 조 권한을 행사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25%의 완전한 관세를 재도입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동일한 25% 관세로 상향 조정한다.
- **주요 조치:**
  - 기존에 적용되던 대체 협정, 허점, 면제 조항을 모두 폐지하여,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에 불필요한 예외를 없앤다.
  - “melted and poured”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하위 제품까지 포함하여 관세 범위를 확대한다.
  - 관세 분류 및 관세 회피 수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배경 상황:**
  - 이전 행정부(특히 트럼프 1 기)에서 제 232 조 관세가 도입되어 미국 철강 산업 회복에 큰 역할을 했으나, 이후 면제와 허점으로 인해 효과가 약화되었다.
  -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멕시코, 한국, EU, 우크라이나, 영국)에게 주어졌던 면제가 중국 등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들에 의해 악용되어, 국내 생산량 저하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졌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국내 산업 보호:**
  -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최소 80%의 생산 용량 활용을 달성하여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불공정 무역 관행 종식:**
  - 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시장을 침투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 **경제 및 안보 강화:**
  - 철강과 알루미늄은 국가 방위와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이므로, 이들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대통령은 제 232 조 권한을 바탕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기존 면제 조항과 허점을 전면 폐지한다.
  - 관련 부처(재무부, 무역 관련 기관 등)는 “melted and poured” 기준과 관세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고, 하위 제품까지 포함한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관세 회피 및 관세 분류 오류에 대해 엄격한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 **도전 과제:**
  - 국제 무역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갈등 가능성: 면제 조항 폐지가 해당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상승 및 관련 산업의 가격 변동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 법적, 행정적 조율: 기존 관세 체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준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데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America First” 정책의 일환으로, Biden 행정부 시절 발생한 무역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회복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여준다.
- **사회적·경제적 효과:**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강화는 국내 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동시에, 관세 인상이 소비자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결과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의 회복과 재배치를 촉진했음을 뒷받침하며, 이는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제 232 조를 활용하여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대통령은 기존 면제와 허점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한 기준과 집행 체계를 통해 관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국가 안보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국제 외교 갈등과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Works to Remake America's Federal Workforce

February 11, 2025

**REFORMING THE FEDERAL WORKFORCE TO BETTER SERVE AMERICAN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workforce optimization initiative.

- The Executive Order will make the federal workforc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 Agency Heads will coordinate and consult with DOGE to shrink the size of the federal workforce and limit hiring to essential positions.
  -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will initiate a rulemaking to ensure federal employees are held to the highest standards of conduct.
- The Order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size of government.
  - Upon expiration of the Day 1 hiring freeze and implementation of the hiring plan, agencies will be able to hire no more than one employee for every four employees that depart from federal service (with appropriate immigration, law enforcement, and public safety exceptions).
  - Agencies will undertake plans for large-scale reductions in force and determine which agency components (or agencies themselves) may be eliminated or combined because their functions aren't required by law.
- The Order exempts personnel and function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law enforcement, and immigration enforcement.

**REDUCING THE UNNECESSARY FOOTPRINT OF GOVERNMENT:** President Donald J. Trump is committed to reducing the size and scope of the federal government.

- There are too many federal employees.
  - Excluding active-duty military and Postal Service employees, the federal workforce exceeds 2.4 million.
  - No one knows exactly how many federal agencies exist, but the Federal Register lists over 400.
- The federal workforce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federal spending and debt.



- In fiscal year 2022, the federal government spent nearly \$300 billion on compensation for civilian employees, excluding pensions.
- According to a recent congressional report, only 6% of federal workers report to work in-person on a full-time basis.

**BUILDING ON PAST SUCCESS:** President Trump has made reforming the federal workforce a key priority for his second term.

- President Trump has consistently worked to shrink the administrative state.
- His first term spurred robust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 through regulatory reform.
- Workforce reform in his second term will build on these successes.

## 미국 연방 공무원 개혁 추진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연방 인력 개편의 필요성:**
  - 미국 연방 정부는 현재 240 만 명 이상의 직원(군인 및 우편 서비스 제외)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연방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 이와 같은 과도한 인력과 복잡한 관료체계는 정부 지출과 부채에 큰 부담을 주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면이 존재한다.
- **주요 지시사항:**
  - 대통령은 정부 효율성(DOGE) 개편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방 인력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 각 기관의 장들은 DOGE 와 협력해 연방 인력을 축소하고, 필수적인 직위에 한해서만 신규 채용을 허용하도록 한다.
  - 인사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은 연방 직원들이 최고 수준의 행동 기준을 유지하도록 규칙 제정을 시작한다. - Day 1 채용 동결 해제 이후, 기관들은 퇴직자 4 명당 최대 1 명만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외에도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부서나 기관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법 집행, 이민 집행 등 핵심 기능은 예외로 인정된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정부 효율성 증대:**
  -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인력과 중복된 기능을 줄여, 납세자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 **서비스 최적화:**
  - 정부가 국민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전환한다.
- **경제적 부담 완화:**
  - 불필요한 인력 유지로 인한 비용 낭비를 줄여, 정부 지출 및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각 연방 기관은 DOGE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필수 인력 외 신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 인사관리국은 연방 직원의 행동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과 윤리 기준을 높인다.
  - 대규모 인력 감축 및 통폐합을 통해 중복된 기관 및 기능을 재편하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도전 과제:**
  - 오랜 기간 자리 잡은 관료체계를 단기간 내에 개편하는 과정에서 내부 저항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감축 대상과 필수 인력의 정확한 구분 및 평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등 핵심 기능에 대한 예외 적용을 명확히 하여,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조치는 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정부 인력을 줄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America First" 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 **사회적 영향:**

- 정부의 규모를 줄이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대규모 인력 감축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반발이나 내부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인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부 개혁 노력의 일환이다.

DOGE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는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필수적인 직무에만 집중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정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적으로는 내부 저항, 행정적 혼선, 그리고 법적 분쟁 등의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stablishes One Voice for America's Foreign Relations

February 12, 2025

**A UNIFIED VOICE FOR AMERICA'S FOREIGN RELATION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stablishing one clear, unified voice for America's foreign relations.

- The Order reaffirms that all individuals involved in implementing the President's foreign policy do so under his authority and direction.
- It reasserts the Secretary of State's authority over Foreign Service Officers, Civil Service Officers, or other staff,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esident.
- It direct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form the foreign service in areas such as recruiting,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tention standards to ensure only the most qualified and committed individuals represent American interests abroad.
- The Secretary of State is tasked with ensuring the faithfu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esident's foreign policy agenda,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 The Order empower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vise or replace the Foreign Affairs Manual and any other procedural documents that guide the operations of the foreign service.

**ALIGNING DIPLOMACY WITH AMERICA'S INTERESTS:** President Trump is committed to safeguarding the integrity of U.S. foreign policy by ensuring that America's interests are prioritized through a unified diplomatic voice, with related personnel held accountable to the President's vision.

- This Executive Order reaffirms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of the President over foreign policy, duly ensuring that diplomatic actions align with President Trump's directives.
- The personnel procedures of agencies charged with implementing the President's foreign policy must provide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ans for ensuring that officers and employees faithfully implement the President's policies.
- The Order guarantees a strong and effect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always serves U.S. interests first.

- No longer will America be taken advantage of by foreign nations or by rogue actors who undermine our sovereignty or security.

**KEEPING HIS PROMISE TO PUT AMERICA FIRST:** This Executive Order builds on bold actions already taken by President Trump and reinforces his promise to put America first in every aspect of foreign relations.

- On Day One, President Trump signed an “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declared that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must always put the interests of America and its citizens first.
- President Trump was elected to achieve peace through strength and ensure foreign policy reflects U.S. values, sovereignty, and security.
- This Executive Order solidifies President Trump’s commitment to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in America’s diplomatic service.

## 미국의 외교정책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이니셔티브 출범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통합된 외교 목소리 확립:**
  -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외교 정책 실행에 있어 하나의 명확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구축하고, 모든 외교 관련 인사가 대통령의 지휘 아래 통일된 방향으로 활동하도록 재확인한다.
- **주요 지시사항:**
  - 외교 정책 실행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외교관, 행정 직원 등)이 대통령의 권한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며, 국무장관의 지휘권을 재확인한다.
  - 국무장관에게 외교관 채용, 평가, 성과 관리, 유지 기준 등 외교 서비스 전반의 개혁을 지시하여, 오직 가장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재들만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무장관은 외교 업무를 안내하는 'Foreign Affairs Manual' 등 관련 절차 문서를 개정 또는 대체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미국 우선 외교 실현:**
  - 모든 외교 활동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여, 외교 정책이 대통령의 비전과 일치하게 실행되도록 한다.
- **외교 서비스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외교관과 관련 직원들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외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책임성을 높인다.
- **국제 관계에서의 통일된 메시지 전달:**
  -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통해 외국 정부와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국가들이 미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국무장관은 외교 서비스 개혁을 위해 채용, 평가, 승진 등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외교관들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충실히 따르도록 관리한다.
  -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외교 업무 지침 및 절차 문서를 개정하여, 통일된 외교 정책 실행 체계를 마련한다.
- **도전 과제:**
  - 정부 내부의 다양한 부처와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 외교관 및 행정 직원의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사 갈등이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제 사회와의 외교 관계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행정명령은 외교 정책 실행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외교 활동이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America First" 원칙을 강조한다.
- **사회적 영향:**
  - 통일된 외교 서비스 체계가 확립되면, 미국 외교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가 강화되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단, 내부 개혁

과정에서 기존 외교관 및 관련 인력들의 저항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외교 정책 실행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확립하여, 모든 외교 관련 인사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무장관의 권한 강화와 외교관 채용 및 운영 체계 개편을 통해, 미국의 외교 서비스가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미국의 "America First" 외교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내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도전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정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stablishes the Make America Healthy Again Commission

February 13, 2025

**MAKING AMERICA HEALTHY AGAIN:**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stablishing the President's Make America Healthy Again Commission.

- Chaired by U.S.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Robert F. Kennedy Jr., the Commission is tasked with investigating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America's escalating health crisis, with an initial focus on childhood chronic diseases.
- Within 100 days, the Commission will produce an assessment that summarizes what is known and what questions remain regarding the childhood chronic disease crisis, and include international comparisons.
- Within 180 days, the Commission will produce a strategy,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ssessment, to improve the health of America's children.
- The Commission has four main policy directives to reverse chronic disease:
  - Empower Americans through transparency and open-source data and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n all federally funded health research.
  - Prioritize gold-standard research on why Americans are getting sick in all health-related research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 Work with farmers to ensure that U.S. food is the healthy, abundant and affordable.
  - Ensure expanded treatment options and health coverage flexibility for beneficial lifestyle changes and disease prevention.
- The Commission aims to restore trust in medical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hold public hearings, meetings, roundtables, and similar events to receive expert input from leaders in public health.

**ADDRESSING THE RISE OF CHRONIC ILLNESSES:** President Trump understands that America's healthcare system is largely focused on treating chronic illnesses rather than preventing them, leading to a growing health crisis with seriou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consequences.



- Based on all health indicators and global comparisons, Americans are becoming sicker, beset by illnesses that our medical system isn't addressing effectively.
  - In the United States, six in 10 adults have at least one chronic condition, and four in 10 have two or more.
  - Prior to COVID, American life expectancy averaged 78.8 years, while comparable countries averaged 82.6 years, creating a gap that equates to 1.25 billion fewer life years for Americans.
  - The United States has the highest age-standardized cancer incidence rate across 204 countries, nearly double the next-highest rate.
    - From 1990 to 2021, the United States saw an 88% increase in cancer.
  - Asthma is far more common in the United States than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most of Europe, Asia, and Africa.
- The rise in chronic conditions is not limited to adults.
  - Childhood is usually the healthiest period of life, yet as of 2022, 30 million (40.7%) United States children had at least one health condition like allergies, asthma, or autoimmune diseases.
  - Autism now affects one in 36 children, a staggering increase from rates of one to four out of 10,000 children identified with the condition during the 1980s.
  - 18% of teens suffer from fatty liver disease, nearly 30% are prediabetic, and more than 40% are overweight or obese – these conditions were virtually unheard of in prior generations.
  - The incidence of childhood cancer, while still rare, increased 0.8% per year since 1975—an over 40% increase over 45 years.
  - Overmedication, particularly among children, is a growing concern. More than 3.4 million children are currently taking medication for ADD/ADHD and diagnoses continue to rise.
- Chronic disease has widespread effects, including on our military and our economy.

- 77% of young adults do not qualify for military service without a waiver, primary due to being overweight, drug use, or mental and physical health issues.
- 90% of America's \$4.5 trillion healthcare expenditure is directed at managing chronic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 The United States spends almost twice per capita what other wealthy countries spend on healthcare.
- Americans have lost trust in our health system, skeptical as to whether they are receiving honest answers about the causes of the country's health crisis and how to improve it.
  - Only a third of Americans trust the U.S. health system, a near-record low.

**TAKING ON THE HEALTH CRISIS:** President Trump is fulfilling his promise to tackle the health crisis facing America.

- President Trump pledged that upon returning to the White House he would establish a special Presidential Commission that's "not bought and paid for by Big Pharma, and I will charge them with investigating what is causing the decades-long increase in chronic illnesses [...] And then, I will ask them to publish recommendations for how every American child can have a safe and healthy childhood."
- In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lowered healthcare costs, provided more healthcare options, and ensured better care for the American people.
- President Trump has consistently championed initiatives aimed at improv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mericans. Select actions from the prior Trump Administration include:
  - Passed Right To Try to give terminally ill patients access to lifesaving cures.
  -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fight kidney disease with more transplants and better treatment.
  - Accelerated medical breakthroughs in genetic treatments for Sickle Cell disease.

- Declared the opioid crisis a nationwide public health emergency and signed the SUPPORT for Patients and Communities Act, the largest-ever legislative effort to address a drug crisis in our Nation's history.
- Expanded access to telehealth, especially in rural and underserved communities.

##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원회 설립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건강 위기 해결 필요성:**
  - 미국 내 만성 질환 및 어린이 건강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과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미국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만성 질환, 암, 비만, 자폐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치료 위주 의료 시스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 **대통령 건강 회복 위원회 신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주재하며, 초기에는 어린이 만성 질환 위기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국제 비교를 포함한 평가 보고서를 100 일 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 180 일 이내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국 어린이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주요 정책 지시사항:**
  - 연방 건강 연구에 있어서 투명성과 개방형 데이터를 통한 이해 충돌 방지를 강화한다.
  - 미국인들이 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연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 농부들과 협력해 미국산 식품이 건강하고 풍부하며 저렴하도록 보장한다.
  - 생활 방식 개선과 질병 예방을 위한 치료 옵션 및 건강 보험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 위원회는 공중 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 회의, 원탁 토론 등을 개최하며, 의학 및 과학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
  - 미국 의료 시스템이 만성 질환 치료에 치중되어 발생하는 장기적인 건강 위기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 **투명한 데이터와 연구 촉진:**
  - 모든 연방 건강 연구에 대해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이해 충돌을 배제함으로써, 왜 미국인들이 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도록 한다.
- **국제 비교 및 정책 개선:**
  - 국제적 건강 지표와 비교하여 미국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전략을 수립한다.
-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회복:**
  - 건강 위기 해결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부담을 줄이고, 국가 안보 및 미국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위원회는 100 일 내에 어린이 만성 질환 위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180 일 내에 개선 전략을 수립한다.
  - 각 부처와 협력하여 건강 연구, 식품 정책, 치료 옵션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 공공 청문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 **도전 과제:**
  - 미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만성 질환의 복합적 원인을 단기간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 기존의 의료 및 연구 시스템 내 이해 충돌 및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저항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제적 건강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미국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합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위원회 신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건강한 미국"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로, 미국인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 "Big Pharma"의 영향력에 맞서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강 연구 및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 **사회적 영향:**

- 만성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국가 건강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 건강 연구의 투명성 강화와 식품 정책 개선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다만, 기존 의료 및 제약 업계와의 갈등, 그리고 건강 연구 방향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Healthy Again Commission"을 신설하여, 미국의 건강 위기—특히 어린이 만성 질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100 일 내 평가 보고서를, 180 일 내 개선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국인의 건강 증진과 장기적인 경제 부담 완화,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투명한 데이터와 최고의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평가와 전략 수립이 관건이며, 장기적으로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조율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February 13, 2025

**THE “FAIR AND RECIPROCAL PLAN”:**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 Presidential Memorandum ordering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plan for restoring fairness in U.S. trade relationships and countering non-reciprocal trading arrangements.

- The “Fair and Reciprocal Plan” will seek to correct longstanding imbalanc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ensure fairness across the board.
- Gone are the days of America being taken advantage of: this plan will put the American worker first, improve our competitiveness in every area of industry, reduce our trade deficit, and bolster our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MERICA WILL NO LONGER TOLERATE UNFAIR TRADE PRACTICES:**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open economies in the world, yet our trading partners keep their markets closed to our exports. This lack of reciprocity is unfair and contributes to our large and persistent annual trade deficit.

- There are endless examples where our trading partners do not give the United States reciprocal treatment.
  - The U.S. tariff on ethanol is a mere 2.5%. Yet Brazil charges the U.S. ethanol exports a tariff of 18%. As a result, in 2024, the U.S. imported over \$200 million in ethanol from Brazil while the U.S. exported only \$52 million in ethanol to Brazil.
  - The U.S. average applied Most Favored Nation (MFN) tariff on agricultural goods is 5%. But India’s average applied MFN tariff is 39%. India also charges a 100% tariff on U.S. motorcycles, while we only charge a 2.4% tariff on Indian motorcycles.
  - The European Union can export all the shellfish it wants to America. But the EU bans shellfish exports from 48 of our states, despite committing in 2020 to expedite approvals for shellfish exports. As a result, in 2023, the U.S. imported \$274 million in shellfish from the EU but exported only \$38 million.

- The EU also imposes a 10% tariff on imported cars. Yet the U.S. only imposes a 2.5% tariff.
  - A 2019 report found that across 132 countries and more than 600,000 product lines, United States exporters face higher tariffs more than two-thirds of the time.
- This lack of reciprocity is one source of America's large and persistent annual trade deficit in goods: closed markets abroad reduce U.S. exports and open markets at home result in significant imports, both of which undercut American competitiveness.
  - The United States has run a trade deficit of goods every year since 1975. In 2024, our trade deficit in goods exceeded \$1 trillion.
  - Thanks to the proliferation of non-reciprocal barriers in just the last few years, the U.S. now runs a trade deficit in agriculture, worth around \$40 billion in 2024.
- Though America has no such thing, and only America should be allowed to tax American firms, trading partners hand American companies a bill for something called a digital service tax.
  - Canada and France use these taxes to each collect over \$500 million per year from American companies.
  - Overall, these non-reciprocal taxes cost America's firms over \$2 billion per year.
  - Reciprocal tariffs will bring back fairness and prosperity to the distorted international trade system and stop Americans from being taken advantage of.

**THE ART OF THE INTERNATIONAL DEAL:**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deliver on his mandate given to him by the American People to put America First when it comes to trade.

- As President Trump said in the Presidential Memorandum on American First Trade Policy on his first day in office, trade policy is a critical component of our economic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 In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successfully ended the outdated and unfair NAFTA, replacing it with the historic USMCA to deliver one of the largest wins for American workers.
- When our national security was threatened by a global oversupply of steel and aluminum, President Trump took swift action to protect America's national security by implementing tariffs on imports of these goods.
- In response to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forced technology transfer, and other unreasonable behavior, President Trump acted with conviction to impose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using that leverage to reach a historic bilateral economic agreement.

Just last week, President Trump leveraged tariffs to force Canada and Mexico to make long-overdue changes at our northern and southern borders,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 citizens.

##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계획’ 발표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무역 불균형과 비상식적 관행 문제:**
  -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불공정하고 비대칭적인 무역 관계로 인해 큰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다.
  - 해외 파트너들이 미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시장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상호호혜성이 결여된 무역 환경이 문제로 지적된다.
- **‘공정하고 상호적인 계획(Fair and Reciprocal Plan)’:**
  - 이번 대통령 각서는 미국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무역 계획 수립을 지시한다.
  - 구체적으로, 미국의 주요 무역 품목(예: 에탄올, 농산물, 자동차, 오토바이, 조개류 등)에 적용되는 관세 수준의 불균형 사례를 들어, 무역 상대국과의 상호호혜적 대우를 요구한다.
- **구체적 사례:**
  - 미국의 에탄올 관세는 2.5%에 불과한 반면, 브라질은 18%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수출에 제약을 가함.
  - 농산물, 오토바이, 자동차, 조개류 등에서도 미국과 상대국 간 관세 격차가 크며,



이로 인해 미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 디지털 서비스세와 같은 비상식적 과세 조치가 미국 기업에 추가 비용 부담을 주어, 연간 20 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미국 우선 무역 환경 조성:**
  -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상품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하도록 하여,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정한 관세 체계 확립:**
  - 상호호혜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며,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 **국가 안보 및 경제 회복:**
  - 무역 불균형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및 핵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대통령은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미국 무역 정책의 재검토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상호호혜적 무역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다.
  - 구체적인 사례(에탄올, 농산물, 자동차 등)를 토대로,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조정 및 비상식적 과세 조치를 재협상할 예정이다.
- **도전 과제:**
  - 국제 무역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긴장 및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 관세 인상 등 조치가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 무역 불균형 문제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이슈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조치는 Biden 행정부의 비상식적인 무역 정책과 비대칭적 관세 체계를 비판하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America First" 원칙을 재확인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 **경제적·사회적 영향:**

- 상호호혜적 무역 환경 구축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시에, 공정한 무역 조건이 마련되면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 효과(예: 가격 안정, 국내 일자리 창출 등)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무역 협상 과정에서 국제적 긴장 및 단기적인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계획"을 통해 미국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를 반영한다.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상품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며, 과거 트럼프 정부의 성공적인 무역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제 무역 협상 및 부작용 관리 등 여러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Prohibits Federal Funding for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February 14, 2025

**PROHIBITING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prohibit federal funding for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 The Order bars federal funds from being used to support or subsidize an educational service agency, state education agency, local education agency, elementary school, secondary school, o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that requires students to have received a COVID-19 vaccination to attend in-person education programs.
- The Secretary of Education and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must issue guidelines for compliance and provide a plan to end coercive COVID-19 vaccine mandates, including a report on non-compliant entities and a process for preventing federal funds from supporting educational entities that impose COVID-19 vaccine mandates.

**PUTTING AN END TO GOVERNMENT OVERREACH:** President Trump is committed to protecting personal freedoms and ensuring that Americans' education isn't conditioned on unnecessary government mandates.

- Some schools and universities have recently enforced or continue to enforce COVID-19 vaccine mandates, making access to education contingent upon students' COVID-19 vaccination status.
- These mandates pressure students into making COVID-19 vaccine decisions based on government coercion, rather than on their own informed choices.
- Studies consistently show that children and young adults have an incredibly low risk of developing a severe illness from COVID-19.
- With COVID-19 vaccine mandates threaten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students, parents are being forced into a difficult position: comply with a controversial mandate or risk their child's educational future.

**PROMISES MADE, PROMISES KEPT:** President Trump is dedicated to ensuring that American students are not forced to choose between their education and their medical freedom.

- President Trump is fulfilling his campaign promise: “I will not allow schools to impose COVID vaccine mandates...”
- In President Trump’s first week in office, he reinstated service members who were dismissed for refusing the COVID vaccine, with full back pay and benefits.
- President Trump is as a staunch advocate for parental rights, ensuring families have the primary role in shaping their children’s educational journey, free from undue bureaucratic mandates.

## 학교 내 COVID-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금지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문제 제기 및 취지:**
  - 미국의 일부 교육 기관에서 COVID-19 백신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정부의 강제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자금이 COVID-19 백신 의무화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의료 자유와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 **주요 지시사항:**
  - 연방 교육 기관, 주 및 지역 교육청, 초·중·고 및 고등교육 기관 등에서 학생들의 대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연방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
  -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된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강제적 백신 의무화를 중단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받는다.
  - 비준수 교육 기관에 대한 보고와, 연방 자금이 해당 기관에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절차를 마련한다.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개인 자유 및 부모 권리 보호:**
  - 정부 강제에 의한 백신 의무화가 학생과 부모의 자율적 의료 결정과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점을 바로잡고, 미국인의 기본적 자유를 수호한다.

- **교육 기회 보장:**

- 학생들이 COVID-19 백신 접종 여부 때문에 교육 기회를 잃지 않도록 보장하며, 부모가 자녀 교육과 의료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정부 과잉 개입 종식:**

- 정부가 교육 분야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불필요한 백신 의무화를 강요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교육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연방 자금이 백신 의무화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세부 지침과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 관련 부처는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비준수 기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절차를 확립한다.

- **도전 과제:**

- 각 주와 지역 교육 기관마다 정책 이행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기준 마련과 일관된 집행이 필요하다.
- 백신 의무화가 이미 일부 교육 시스템에 깊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정부와 교육 기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 조정 및 소통 체계가 필수적이다.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조치는 Biden 행정부의 강제적 백신 의무화 정책이 미국인의 자유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원칙을 강조한다.
- "정부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의료 자유와 교육 선택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 **사회적 영향:**

- 부모와 학생들은 정부 강제에 의한 백신 의무화로부터 자유로워져, 보다 자율적인 의료 결정과 교육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기관이 연방 자금을 통해 강제적 정책에 묶이지 않음으로써, 교육 환경의 다양성과 질이 개선될 수 있다. - 그러나, 백신 의무화 해제가 팬데믹 관리 측면에서

일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역 대책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자금이 COVID-19 백신 의무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중단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부모의 의료 및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반영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할 세부 지침과 실행 계획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백신 의무화에 따른 불필요한 정부 강제 개입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자율성과 개인 자유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백신 의무화 해제와 관련된 보건 및 방역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조율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stablishes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February 14, 2025

**POSITIONING AMERICAN ENERGY FOR THE NEXT CENTURY:**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establishing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will be established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chaired by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Doug Burgum and vice-chaired by the Secretary of Energy Chris Wright, and comprised of members of President Trump's cabinet and key government agencies.
- The Council will advise President Trump on strategies to achieve energy dominance by improving the processes for permitting, production, generation, distribution, regulation, and transportation across all forms of American energy.
- It will recommend a National Energy Dominance Strategy to the President aimed at cutting red tape, enhancing private sector investments, and advancing innovation.
- The Council will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domestic energy partners, ensuring policy consistency.
- It will also consult with various public and private sector stakeholders to expand energy production and address cost barriers.

**LOWERING PRICES AND STRENGTHENING AMERICAN ECONOMIC SECURITY:** Championing domestic energy production is vital both for mitigating price shocks to American families and de-risking the energy supply chain for our Nation as well as our allies.

- American energy dominance is the most reliable way to ensure the stability and affordability of American energy prices.
  - Gasoline prices, as well as overall household energy prices, increased 30% under President Biden.
  -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dramatically slowed the growth rate of American energy production and development, including by instituting a federal oil leasing moratorium, increasing energy permitting times by

multiples of what they had been under President Trump, and removing hundreds of million acres from being available for energy production.

- Over the last four years, it is estimated that our Nation produced over two billion fewer barrels of oil than anticipated by trend (had President Trump's energy policies been kept intact), a vast quantity of lost supply that could have lessened the burden of energy prices on American families.
- Developing American energy resources will enable our Nation to reduce its reliance on foreign entities, including strategic adversaries.
  - While creating policies to restrict American produc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asked OPEC+ to increase production to meet American energy demand.
  - As energy prices rose,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reluctant to enforce American oil sanctions on rogue regimes, allowing Iran to export over one million barrels of oil per day through lax enforcement (up from a low of approximately 70,000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emporarily lifting oil sanctions altogether on the Maduro regime in Venezuela.
  - The United States is also highly dependent on China for a range of critical minerals, which has put our Nation's supply chain at risk, as exemplified by China's recent weaponization of its resources through bans on exporting germanium, gallium, and antimony to the United States.
  - As our Nation makes rapid advancements in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long with the associated data centers), and energy demand rises, it will be all the more important to expand domestic energy supply.
- American energy leadership is vital not only for our Nation'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but also for the security of our allies.
  - America's liquefied natural gas (LNG) industry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helping Europe reduce its dependence on Russian energy, with LNG exports to Europe rising 141% in 2022, and continuing to increase to fill the gap.
  - President Trump warned Western Europe as early as 2017 to rely on American natural gas rather than Russian energy.



**RESTORING AMERICAN ENERGY DOMINANCE:** President Trump has a demonstrated track record of empowering American energy production, and will return our Nation to energy dominance.

- During President Trump's first term, our Nation became a net exporter of energy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70 years and transformed into the world's leading oil producer.
- President Trump expedited the LNG export license process (achieving licensing times one-sixth as long as those seen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which revoked these reforms), reduced the permitting time for drilling on federal lands (increasing permit applications by 300%), fixed the New Source Review (which punished companies for repairing and upgrading coal power plants), and opened up millions of acres for domestic energy development.
-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American families saved an average of \$2,500 per year in utility and gas costs, while the economy at large saw the creation of new American energy jobs.

## 국가 에너지 지배 위원회 설립

###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미국 에너지 경쟁력 강화 필요성:**
  - 미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성과 국가 안보, 경제 경쟁력을 위해 자국 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Biden 행정부는 연방 유전 임대 모라토리엄, 에너지 허가 시간 연장, 에너지 생산에 사용 가능한 수백만 에이커의 토지 배제를 통해 미국 에너지 생산 성장을 크게 저해해왔다.
- **국가 에너지 패권 위원회 신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모든 에너지 형태(석유, 가스, 석탄, 재생에너지 등)의 허가, 생산, 발전, 유통, 규제, 수송 과정을 개선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패권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위원회는 백악관 내에 설치되며, 내무부 장관(의장: Doug Burgum)과 에너지부 장관(부의장: Chris Wright)을 중심으로 대통령 내각과 주요 정부 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 **전략적 지시사항:**

- 위원회는 에너지 패권 전략(National Energy Dominance Strategy)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며, 에너지 생산 확대와 비용 장벽 해소에 기여할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 연방 정부와 국내 에너지 파트너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 2. 정책 의도 및 전략적 목표

-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경제적 안보 강화:**

- 국내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여 미국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 전략적 적대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

- **민간 투자와 혁신 촉진:**

- 에너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생산 및 신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제적 리더십 및 동맹 강화:**

-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산업 등이 유럽 등 동맹국의 에너지 독립에 기여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강화한다.
- 국가 에너지 패권 전략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립한다.

---

## 3. 실행 메커니즘 및 도전 과제

- **실행 메커니즘:**

-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에너지 패권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에너지 허가, 생산, 유통, 규제 등 전 과정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 관련 정부 부처와 국내 에너지 파트너, 그리고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인다.

- **도전 과제:**

- 에너지 관련 규제 철폐와 민간 투자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 에너지 생산 확대가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과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 국제 무역 및 외교 협상에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이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 4. 정치적 및 사회적 함의

- **정치적 메시지:**

- 이번 위원회 신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원칙을 반영하며, 미국 에너지 자립과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임을 강조한다.
- Biden 행정부의 에너지 생산 억제 정책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

-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와 민간 투자의 촉진은 에너지 가격 안정, 국가 안보 강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 동시에, 에너지 관련 규제 철폐와 허가 절차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5. 결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 및 규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미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국가 에너지 패권 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민간 투자 촉진,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에너지 패권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에너지 가격 안정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국제적 에너지 리더십 강화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와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생산 확대와 규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환경 보호 및 국제 무역 협상 등 여러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 Disclaimer (면책 조항)

본 자료는 미국 백악관(White House)에서 공개한 공식 팩트 시트(Fact Sheets)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내용을 요약·분석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정치적 입장, 정당, 후보자 또는 정부 기관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나, 백악관의 공식 발표 이후 정책의 변경, 추가적인 행정 조치, 또는 법적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법적, 재정적, 정책적 의사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기 전에 원문 자료 및 공식 정부 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해석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있으며, 본 자료의 제작자는 발생 가능한 오류, 누락, 해석 차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출처:**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의 공개 자료 활용

**최종 업데이트:** [2025-02-16]

### 📌 법적 보호 및 정책 해석

-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법적, 정책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견해 및 해석은 작성자의 독립적인 분석이며, 공식적인 정부 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행정 명령 및 정책 변경 사항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 기업 및 기관 활용 지침

- 본 자료는 독립적인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정부 기관, 기업 또는 공공 정책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업 및 기관의 내부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되며, 공식적인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은 반드시 개별 법률 및 정책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자료의 무단 재배포 또는 상업적 사용은 금지되며, 사용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NYET, 한국 기업·정부·학계를 위한 미국·글로벌 전략·정책 인텔리전스 서비스 공식 론칭

미국 혁신생태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십시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전된 산업·기술·정책·교육 허브로, 그 영향력과 기회는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혁신생태계를 전략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 ▶ 기업의 비즈니스 성장,
- ▶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정책 주도권 확보,
- ▶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NYET**(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는 뉴욕 맨해튼 배터리파크에 본부를 둔 글로벌 씽크탱크이자 혁신 전략 허브로, 한국의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정책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기관이 직면한 미국 내 위기 및 위험 관리(Crisis & Risk Management)를 포함한 전략적 옹호(Strategic Advocacy)는 NYET 만이 제공할 수 있는 배타적 솔루션입니다.

**NYET** 는 기업, 정부, 학계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한국 기업 및 기관이 미국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책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 NYET 의 차별화된 전략·정책 인텔리전스 서비스

- 🔋 **Corporate Intelligence (기업 전략 및 시장 개척)**  
→ 미국 시장 진입 및 성장 전략, 규제·컴플라이언스 대응, 투자 유치 및 재무 전략, 브랜드 현지화, 리스크 관리, 정부 조달 및 보조금 활용
- 🔋 **Policy & Government Intelligence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영향력 강화)**  
→ 미국 산업 정책·규제 분석, 정부·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무역·투자 전략, 경제 개발 및 혁신생태계 정책 협력
- 🔋 **Education Intelligence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글로벌 협력 확대)**  
→ 국제 공동 연구, 산업·학계 협력, 인증 및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 🔋 **Innovation Intelligence (혁신생태계 및 기술 상용화 가속화)**  
→ 기술 상용화, 벤처캐피털 연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특허 및 지식재산(IP) 전략, 기업, 대학 및 지역·국가 단위 혁신생태계 구축

**NYET**는 한국 기업·기관이 미국 시장에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이를 입체적으로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NYET 웹사이트 [www.mynyet.org](http://www.mynyet.org)]

✉ 문의: 이 영 달 **Dr. Young D. Lee, Principal & Professor, NYET**

- ▶ 서울 오피스 02-568-2033
- ▶ 뉴욕 오피스 322-272-3190
- ▶ 이메일 [Dr.Lee@ket-nyet.org](mailto:Dr.Lee@ket-nyet.org)



**NYET**  
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

*Empower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verywhere™*



*Empower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verywhere™*